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다

#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 : 2015 통일의식조사

일시 | 2015. 9. 11(금) 13:3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원

## 토론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개회사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13:30~13:40
1 회의	<p>2015 통일의식조사-분화와 전환 13:40~15:50</p> <p>사회 전재성(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정치외교학부 교수)</p> <p>통일과 대북인식 정은미(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p> <p>대북정책과 주변국관계 인식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규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협력연구원)</p> <p>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김병조(국방대학교 교수)</p> <p>다문화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p> <p>황정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p>
휴 식	15:50~16:00
2 회의	<p>남남갈등을 넘어 역동적 통일지향으로 16:00~18:00</p> <p>사회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p> <p>김선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박세일(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p> <p>정세현(전 통일부 장관)</p> <p>전우택(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p> <p>최윤영(서울대 독어독문학 교수)</p>

# 목 차

---

## 1회의 / 2015 통일인식조사-분화와 전환

<b>발표1</b>	통일에 대한 인식 .....	13
<b>발표2</b>	대북인식 .....	39
<b>발표3</b>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59
<b>발표4</b>	주변국 관계 인식 .....	99
<b>발표5</b>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	119
<b>발표6</b>	탈북자에 대한 인식 .....	149

통일외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외식조사

# 조사개요

#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 2015 통일의식조사

## 2.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5년 7월 1일 ~ 7월 24일 (24일간)

## 1. 조사 주관기관과 대행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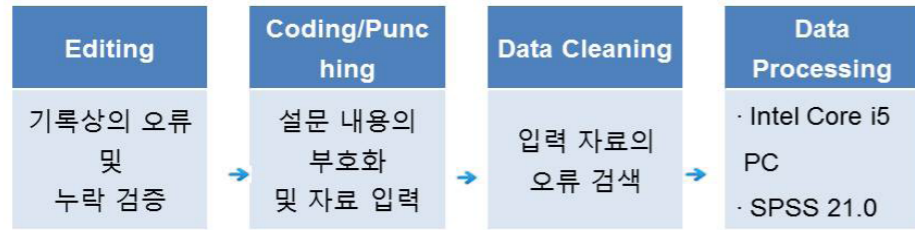


## 3. 표본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표 본 크 기	1,200명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표 본 오 차	± 2.8% (95% 신뢰수준)

## 4.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Raw Data)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음



**가중치(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6개 수준)로 모집단(201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처리

## 5.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사례수	%
전체		(1,200)	100.0
▣ 가구소득수준 ▣	200만 원 미만	(127)	10.6
	200 ~ 299만 원	(214)	17.8
	300 ~ 399만 원	(371)	30.9
	400만 원 이상	(488)	40.7
▣ 지역별 ▣	수도권	(499)	41.6
	충청권	(152)	12.7
	호남권	(146)	12.2
	영남권	(326)	27.2
	강원	(45)	3.8
	제주	(32)	2.7
▣ 정치적 성향 ▣	진보적	(291)	24.3
	중도	(597)	49.8
	보수적	(312)	26.0

## 5.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사례수	%
전체		(1,200)	100.0
▣ 성별 ▣	남자	(610)	50.8
	여자	(590)	49.2
▣ 연령별 ▣	19 ~ 29세	(225)	18.8
	30대	(237)	19.8
	40대	(275)	22.9
	50대	(253)	21.1
▣ 교육수준별 ▣	60대 이상	(210)	17.5
	중졸 이하	(129)	10.8
	고졸	(491)	40.9
▣ 직업별 ▣	대재 이상	(580)	48.3
	농 / 수 / 축 산업	(22)	1.8
	자영업	(201)	16.8
	블루칼라	(338)	28.2
	화이트칼라	(270)	22.5
	전업주부	(238)	19.8
무직 / 기타	(131)	10.9	

통일외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외식조사

# 통일에 대한 인식

01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1]

## 통일에 대한 인식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지난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제기한 이후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고,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출전하였고 폐회식 날에는 북한의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적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등 오랜 만에 전 사회적으로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북한은 새해 벽두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관계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고 위급회담'의 가능성까지 운운하는 등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게 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올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공동행사를 다채롭게 기획하고 준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착된 남북관계는 탈출구를 좀처럼 찾지 못했고, 결국 6.15와 8.15를 전후로 모든 기대와 열망은 안타깝게도 사그라지고 말았다.

8.15 광복절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군사분계선 우리 측 DMZ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하여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크게 다침으로써 통일 또는 남북화해를 바랐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응징 차원에서 2004년 6월 남북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이에 북한 인민군은 8월 15일 남한의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모든 대북심리전 수단들을 초토화하기 위한 타격전을 벌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는 물론 북한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울지프 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연습을 계획대로 진행하였다. 이후 북한이 먼저 포격을 하고, 남한이 이에 대응하는 등 교전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직관적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전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 으면서도, 비슷한 시기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의 남북관계와 21세기의 남북관계의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은 대체로 남북관계의 정세나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통일의식조사는 DMZ 지뢰 폭발이 발생하기 이전에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글에서 분석 기술된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과 DMZ 지뢰 폭발 이후 국민의 통일 인식은 체감상 다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 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그리고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와 관련한 기초 통계분석을 다룬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의 특징적인 양상은 무엇인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자.

##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 1) 통일의 필요성

2015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 20.6%, ‘약간 필요하다’ 30.4%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1.0%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4.2%,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전년대비 4.8% 감소했다. 광복70년 분단70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물론 사회 여러 영역들에서 통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했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표1〉에서 보이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통일의식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7년 63.8%에서 2008년 51.6%로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없다’는 인식은 전년대비 증가하여 200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정부나 언론매체들이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른 응답률 격차는 크게 줄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성은 54.9%, 여성은 46.9%로 성별 격차가 8%p로 지난해 성별 격차가 12.3%p였는데 반해 더 줄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필요하

다는 응답률이 여성의 경우 전년대비 2.7%p 감소한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전년대비 7%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지난 몇 년간에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세대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모든 연령층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가장 젊은 응답집단인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30대와 40대 사이에서 분기가 나타났다. 상세히 설명하면, 2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43.1%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30.7%로 12.4%p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30대에서도 지난해 50.3%에서 올해 36.2%로 1년 사이에 14.1%p가 감소했다. 40대의 경우 전년도 56.5%에서 올해 52%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조사부터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그룹을 분리한 결과, 50대 연령층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66.2%에서 올해 63.8%로 감소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지난해 74.1%에서 올해 73.1%로 감소했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통일의 필요성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통일 필요	63.8	51.6	55.8	59.1	53.7	57.0	54.8	55.8	51.0
반반	21.1	24.9	23.6	20.8	25.0	21.6	21.5	22.5	24.2
통일 불필요	15.1	24.9	20.6	20.8	21.3	21.4	23.7	21.7	24.8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44.7%)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평균 응답률 5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응답률이 가장 낮다는 점은 통일의 동력 감소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변화이다. 또한 지난해 강원도와 충청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올해는 호남권의 응답률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올해 지역별 분포가 지난해와 다른 점은 호남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점이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중졸의 경우 71.6%가 통일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반면에, 고졸은 52.7%, 대재 이상은 45.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직업별 응답분포를 비교해보면, 지난해에 블루칼라 집단과 화이트칼라 집단 간에 응답률 격차가 매우 컸던데 반해 올해는 그 격차가 매우 좁혀졌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블루칼라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49.6%에서 올해 48.2%로, 화이트칼라의 경우 응답률이 지난해 61.0%에서 올해 44.3%로 나타났으며, 블루칼라에 비해 화이트칼라에서의 응답률 감소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감소한데는 남성, 수도권, 대학교, 화이트칼라 응답자 집단에서의 응답률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2)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은 40.7%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지난 9년간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의 응답률은 2007년 50.6%→2009년 57.9%→2009년 44%→2010년 43%→2011년 41.6%→2012년 45.9%→2013년 40.3%→2014년 42.4%→2015년 40.7%로 변화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 패턴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이유 응답률 역시 2007년부터 8년 연속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09년에 50%대에서 40%대로 급락한 이후 아직까지 5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이유인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의 비율은 26.2%로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면, 2007년 19.2%→2008년 14.5%→2010년 24.1%→2011년 27.3%→2012년 25.3%→2013년 30.8%→2014년 26.9%→26.2%로 2013년에 최고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은 14%로 전년대비 3.6%p 감소했다. 반면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라는 응답률은 12.3%로 전년대비 3.5%p 증가했고,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이라는 응답률 역시 전년도 3.8%에서 올해 6.2%로 증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다가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제기됐던 지난해에 반짝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에 정책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같은 민족	50.6	57.9	44.0	43.0	41.6	45.9	40.3	42.4	40.7
이산가족 고통해소	8.9	6.8	8.5	7.0	7.2	9.1	8.3	8.8	12.3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	19.2	14.5	23.4	24.1	27.3	25.3	30.8	26.9	26.2
북한주민 삶 개선	1.8	2.8	4.2	4.0	4.9	4.4	5.5	3.8	6.2
선진국으로 도약	18.7	17.1	18.6	20.7	17.6	14.5	14.3	17.6	14.0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남성 응답자의 경우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항목에서만 여성 응답자보다 확실한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항목들에서는 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을 나타냈다. 연령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보면, 20대 경우는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젊은 세대의 현실주의적 통일관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항목의 경우 60대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라는 항목에서는 5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일의 이유 중 하나인 북한과의 상생공영(相生共榮)에 대한 인식은 60대 이상의 고령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40대로 응답률이 9.4%인 반면에 60대 이상의 응답률은 1.7%에 불과했다.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른 응답분포의 특징도 뚜렷하게 보였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응답자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 (56.2%)를 선택했다. 반면에,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응답자 경우에는 '남북한 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이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올해 지역별 응답분포는 지난해와 거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이 높은 지역들이 호남권과 영남권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강원과 충청권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라는 응답률은 지난해 강원이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던데 반해, 올해는 수도권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응답률 또한 수도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의 경우

지난해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데 반해, 올해는 호남권의 응답률이 23.7%로 다른 지역들보다 두 배 가까이 또는 두 배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 응답분포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같은 민족이니까'의 이유에서 보수 성향의 응답률은 45.6%, 진보 성향의 응답률은 34.4%로 두 진영간의 응답률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이산가족의 공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와 같은 인도주의적 이유에서는 진보 성향의 응답률 13.7%, 중도 성향의 응답률 13.5%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보수 성향의 응답률은 8.6%로 낮았다. '남북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의 이유는 보수 성향의 응답률 29.4%, 진보 성향의 응답률 29.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 안보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념적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 1) 통일의 추진 방식

지난 9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과정과 추진 속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연도별 응답률의 추이는 2007년 70.6%→2008년 64.8%→2009년 68.3%→2010년 67.0%→2011년 66.9%→2012년 65.1%→2013년 61.8%→2014년 61.0%→2015년 57.5%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50%대로 떨어진 적은 올해가 처음이다.

점진적 통일 추진에 대한 견해가 줄어드는 대신 현상태 유지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가 좋다' 견해는 2007년 11.8%→2008년 16.3%→2009년 15.6%→2010년 16.1%→2011년 15.3%→2012년 18.3%→2013년 18.9%→2014년 19.2%→2015년 21.8%로 나타나 첫 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남북한 통일보다는 남북한 공존을 바라는 인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주의적 견해로서 대체로 10%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응답률의 추이를 보면, 2007년 10.6%→2008년 9.6%→2009년 8.6%→2010년 10%→2011년 9.6%→2012년 9.6%→2013년 11.3%→2014년 12.4%→2015년 11.7%로 지난해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반해 올해는 소폭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은 2007년 7.0%→2008년 8.5%→2009년 7.5%→2010년 6.9%→2011년 8.2%→2012년 7.0%→2013년 8.0%→2014년 7.4%→2015년 9.0%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로 올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3〉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가능한 빨리 통일	10.3	9.6	8.6	10.0	9.6	9.6	11.3	12.4	11.7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70.6	64.8	68.3	67.0	66.9	65.1	61.8	61.0	57.5
현재상태 유지	11.8	16.3	15.6	16.1	15.3	18.3	18.9	19.2	21.8
통일 관심 없음	7.0	8.5	7.5	6.9	8.2	7.0	8.0	7.4	9.0

조사가 첫 시작된 2007년 결과와 9년이 지난 올해의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통일 추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이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점진적 통일의 견해는 2007년 70.6%에서 2015년 57.5%로 9년 동안에 13.1%가 감소했다. 반면에 현상 유지의 견해는 2007년 11.8%에서 2015년 21.8%로 9년 동안에 10%가 증가했다. 이러한 대조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낮아지면서 동시에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로서 앞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문항과 통일의 추진 속도에 관한 설문 문항을 교차 분석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4〉에서 보이듯, '현재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나타났으며,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로 나타났다. 통일 무관심자들의 통일 무용론 견해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에,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92.8%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표4〉 통일의 추진 방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항 간 교차분석(2014년~2015년) (단위:%)

		가능한 빠른 통일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2014	89.9	67.6	12.1	14.6
	2015	92.8	64.8	9.6	9.2
반반/그저그렇다	2014	6.0	23.0	31.3	23.6
	2015	5.7	25.4	33.2	19.4
통일이 필요없다	2014	4.0	9.4	56.5	61.8
	2015	1.4	9.8	57.3	71.3

성별 응답분포의 경우 올해는 예년과 달리 남성과 여성간의 응답률 격차가 거의 없다. ‘가능한 빠른 통일’에 대한 응답률의 경우 남성은 12.0%, 여성은 11.5%로 거의 같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남성 14.8%, 여성 9.3%였던 것과 매우 차이가 난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좋다’는 응답률은 남성 21.9%, 여성 21.8%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 조사에서 남성 16.9%, 여성 22.4%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분명한 변화이다. 이밖에도 나머지 항목들에서도 성별간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눈에 띄게 낮아졌다.

연령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견해가 많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현재 상태가 좋다는 견해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빠른 통일’의 경우 20대 6.6%, 30대 8.5%, 40대 6.6%, 50대 15%, 60대 이상 23.9%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를 기준으로 통일 추진 속도에 대한 견해가 분기가 나타난다. 20대~40대에 해당하는 국민 대다수는 급진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현재상태가 좋다’의 경우는 20대 30.9%, 30대 28.6%, 40대 20.5%, 50대 18.1%, 60대 이상 10.3%로 나타났다. 20대의 현상유지를 바라는 견해의 비중이 60대 이상보다 3배나 더 많다. 또한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많은 연령집단은 20대로 전년도 10.2%에서 올해 15.5%로 증가했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40대에서 가장 많았다(2014년 66.8%, 2015년 65.8%).

지역별 응답분포의 경우 9년 동안에 주요 트렌드를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응답의 경우 전년도에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강원지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29.1%)을 보였다. 급진 통일을 바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은 영남권(8.0%)으로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다. 점진적 통일을 바라는 응답은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68.8%)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54.7%)이다. 현상 유지를 바라는 견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수도권(26.1%)이고,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호남권(8.6%)이다. 마찬가지로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견해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곳도 수도권(10.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호남권(3.5%)이다. 이처럼 한국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지역주민들이 현상유지를 바라거나 아니면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견해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것은 통일의 동력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통일의 가능 시기

박근혜 정부 들어 통일준비 또는 통일대박 등의 담론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예상 시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는 통일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년대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전년도에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3.9%였는데 반해 올해에는 19.7%로 줄었다.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2년 연속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데 따른 우려가 컸으나 올해에는 다행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통일이 가능한 시기는 올해도 여전히 상당히 먼 미래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면 ‘20년 이내’(25.5%)>‘30년 이상’(19.6%)>‘10년 이내’(17.8%)>‘30년 이내’(13.9%)>‘5년 이내’(3.5%)이다. 하지만 ‘5년 이내’와 10년 이내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을 내다보는 예상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이 올해의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5〉 통일이 가능한 시기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이내	3.7	2.3	2.8	3.4	2.5	2.9	3.7	2.3	3.5
10년 이내	23.5	13.0	16.9	17.8	16.3	14.5	13.3	13.8	17.8
20년 이내	30.8	22.1	27.6	24.1	26.1	25.9	25.3	22.5	25.5
30년 이내	14.7	15.5	16.2	13.4	14	17.8	13.7	17.7	13.9
30년 이상	13.8	24.9	16.5	20.8	19.8	19.8	18.3	19.8	19.6
불가능	13.3	22.3	19.8	20.6	21.3	19.2	25.8	23.9	19.7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남성 집단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눈에 띄게 줄었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전년도에 여성 25.3%, 남성 21.7%였으나, 올해는 여성 21.9%, 남성 17.5%로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응답률 변화가 크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에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한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예상의 경우 20대의 응답률은 7.3%에 불과한 반면에, 60대 이상의 응답률은 30.8%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반대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예상의 경우에는 20대의 응답률이 28.0%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의 응답률이 12.2%로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통일 가능 시기보다는 통일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응답분포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기적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적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분포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단기적 통일 가능성을 예상하는 비중이 많으면서 동시에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의 비중도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 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57.4%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해 지난해 응답률 55.9%에 비해 증가했다. 이 응답률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9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55.8%→2008년 47.5%→2009년 53.2%→2010년 53.5%→2011년 50.7%→2012년 51.6%→2013년 48.6%→2014년 55.9%→2015년 57.4%이다.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8%가 ‘이익이 된다.’고 응답해 지난해 응답률 27.1%보다 높아졌다. 9년간의 응답률 추이는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2007년 30.3%→2008년 27.7%→2009년 23.9%→2010년 24.8%→2011년 27.8%→2012년 26%→2013년 21.8%→2014년 27.1%→2015년 28.0%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모두에서 기대감이 상승한데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했던 ‘통일 대박’ 담론이 올해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6〉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이익이 된다’ 응답 추이)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한사회	55.8	47.5	53.2	53.5	50.7	51.6	48.6	55.9	57.4
개인	30.3	27.7	23.9	24.8	27.8	26.0	21.8	27.1	28.0

〈표7〉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를 교차분석 해본 결과이다. 표에서 나타나듯 지난해보다 올해에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고, 반대로 통일대박론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통일대박론에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82.9%에서 2015년 83.3%로 소폭 증가했다. 또한 통일대박론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67.4%에서 2015년 74.8%로 크게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통일대박론에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55.4%에서 올해 57.5%로 증가했고, 통일대박론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39.0%에서 올해 40.8%로 증가했다.

〈표7〉 통일 편익 기대감과 통일대박론 공감도의 교차분석 (단위:%)

통일편익 기대감	통일대박 공감도	매우 공감됨	대체로 공감됨	보통	별로 공감안됨	전혀 공감안됨
남한사회 이익	2014	82.9	67.4	53.0	46.6	39.8
	2015	83.3	74.8	50.0	42.3	39.7
개인 이익	2014	55.4	39.0	24.2	14.4	21.7
	2015	57.5	40.8	21.5	14.4	21.0

다른 한편, 올해에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양자 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남한 전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간의 기대감 격차는 2013년 26.8%p→2014년 28.7%p→2015년 29.4%p로 해가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남한사회의 이익 기대감’과 ‘개인의 이익 기대감’ 간 응답률 격차가 가장 컸던 2009년(29.3%p)보다 더 벌어졌다.

통일이 남한 사회라는 집합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개인적 유인책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격차만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수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면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통일편익 기대감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올해는 성별 격차가 예년에 비해 많이 좁혀졌다.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서 남성 응답률은 각각 60.2%와 30.3%이며, 여성 응답률은 54.5%와 25.6%로 나타났다. 여전히 통일 편익에 대한 남성의 기대감이 여성의 기대감보다 높지만 과거 8년 동안 성별간 응답률 격차가 10%p 정도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올해는 4~5%p 정도의 격차를 나타낸 것은 큰 변화이다. 1년 사이에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응답분포는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률은 20대 49.7%, 30대 52.6%, 40대 57.1%, 50대 64.4%, 60대 이상 63.0%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률 역시 20대 24.0%, 30대 26.3%, 40대 26.6%, 50대, 29.8%, 60대 이상 35.1%로 나타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수준은 가장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의 경우 올해에는 지난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으나, 올해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별 집단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올해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교 이상의 응답률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중졸 이하와 고졸의 응답률은 전년 대비 모두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의 경우 중졸 이하는 2013년 36.8%→2014년 49.1%→2015년 60.0%로 2년 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졸의 경우 역시 2013년 45.6%→2014년 55.5%→2015년 57.4%로 계속 증가세이다. 하지만 대학교 재학 이상의 경우에는 2013년 55.6%→2014년

56.3%→2015년 56.8%로 상대적으로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에 비해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북한주민보다 더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학교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확대에서 오는 이익보다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분담금의 증가를 좀 더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직업별 응답분포의 결과는 교육수준과는 상이한 응답패턴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직종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육수준에서 나타난 응답패턴과 달리 블루칼라의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낮고, 반대로 화이트칼라의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기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블루칼라의 응답률은 51.6%로 전년(54.1%)보다 더 낮아졌으며, 더욱이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은 59.9%로 전년(60.7%)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블루칼라의 응답률은 22.4%로 전년(26.7%)보다 더 낮아졌고,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은 28.2%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블루칼라의 응답률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 역시 통일로 인해 남북한의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블루칼라의 직종의 경우 저임금의 북한주민과 경쟁적 위치에 있는 반면에, 화이트칼라의 직종의 경우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남한주민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일편익에 대한 직종간 기대수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사회의 이익 기대감에서는 호남권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50%대에서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다른 점은 제주도와 강원지역의 응답률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응답률이 68.5%로 가장 높았던데 반해 올해는 4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지역 역시 응답률이 지난해 66.3%에서 올해 53.2%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는 지역별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 더욱이 올해는 작년과 지역별 응답률의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응답률이 높았던 지역들은 올해 응답률이 감소했고, 반대로 지난해 응답률이 낮았던 지역들은 올해 응답률이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영남

권과 수도권은 지난해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들이었으나 전년대비 올해 응답률이 증가한 유일한 두 지역들이다. 영남권은 2014년 23.6%에서 2015년 27.2%로, 수도권은 2014년 25.1%에서 2015년 28.9%로 증가했다.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응답률이 전년대비 올해 감소했다.

##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측정하는 것은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일의 편익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면 그것은 분명히 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통일을 이루는데 지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 올해 조사 결과의 특징은 이념갈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실업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시에 통일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별 개선 기대수준에 대한 응답률의 순위로 살펴보면, <표8>에서 보듯이 실업문제 32.0%>부동산투기 23.3%> 빈부격차 19.7%>이념갈등 13.2%>지역갈등 12.7%>범죄문제 10.5% 순서로 나타났다. 올해 응답률이 높은 순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응답률 수치가 가장 높은 실업문제의 경우 지난해 29.8%에서 올해 32.0%로 증가해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통일이 실업문제를 개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빈부격차로 지난해 14.1%에서 올해 19.7%로 1년 사이에 5.6%p가 증가했다. 이밖에도 8년 연속 개선 기대감이 최하위였던 범죄문제는 2007년 첫 조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에 응답률이 10%대를 넘었다. 하지만 이념갈등의 경우 2014년 13.6%에서 2015년 13.2%로 오히려 후퇴해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 해소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8>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것이다' 응답 추이)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빈부격차	17.7	10.1	14.7	15.8	13.2	12.2	14.8	14.1	19.7
부동산 투기	21.4	14.4	19.4	19.7	17.4	16.5	14.5	19.4	23.3
실업문제	30.0	20.5	27.5	25.9	25.6	23.6	22.3	29.8	32.0
범죄문제	9.2	5.8	9.3	9.1	6.9	6.0	6.2	7.9	10.5
지역갈등	14.4	7.6	13.3	13.1	10.0	10.9	9.2	12.0	12.7
이념갈등	17.3	8.2	16.4	16.4	16.4	13.5	10.2	13.6	13.2

하위집단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실업문제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서 연령별 응답분포는 60대 이상 34%>30대 33.7%>50대 33.1%>40대 30.9%>20대 28.4%로 나타나, 60대 이상에서 기대감이 가장 높고, 20대에서 기대감이 가장 낮았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앞서 살펴본 통일 편익과 관련해 20대의 기대감이 낮았던 것처럼 통일 이후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아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통일 후 사회 변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고소득층(400만원 이상) 응답자들에서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지역들 중에서는 영남권 응답자들의 기대감이 대체로 낮았으며, 정치적 성향에서는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의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 3)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지난해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이라고 언급한 이후 통일대박에 대한 공론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따라서 올해에도 설문지에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표9>에 나타나듯, '공감된다'는 응답률은 2014년 31.4%에서 2015년 36.4%로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반면, '공감이 안된다'라는 응답률은 2014년 28.6%에서 2015년 26.9%로 소폭 하락했다. 판단을 유보한 '보통'의 응답률은 36.8%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표9〉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단위:%)

	공감한다	보통	공감하지 않는다
2014	31.4	40.0	28.6
2015	36.4	36.8	26.8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통일대박론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는 남성의 응답률은 38.1%로 작년의 32.4%에서 더 상승했으며, 여성의 응답률 역시 34.7%로 작년에 29.6%에서 더 올랐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경우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고 응답한 20대는 26.3%, 30대 33.8%, 40대 30.6%, 50대 45.1%, 60대 이상 47.6%로 나타나, 가장 젊은 20대와 가장 고령인 6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40대를 제외하고 작년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특히 30대의 경우 지난해 24.3%에서 올해 33.8%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면 ‘공감한다’는 응답에 중졸 이하 47.3%, 고졸 38.5%, 대학교 이상 32.4%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응답자들에서 통일대박론 공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별 전 범위의 응답집단에서 공감 수준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 응답집단에서의 응답률이 지난해 33.6%에서 올해 47.3%로 상승폭이 가장 크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공감 응답률이 56.1%로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공감 응답률이 35.6%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모든 직업군에서 공감 응답률이 전년대비 상승했고, 특히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공감 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지역별 응답분포를 보면, 통일대박에 공감하는 응답률은 지난해 응답분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제주지역의 공감 응답률이 51.3%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는 19.8%로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호남권의 공감 응답률은 47.9%로 지난해 3순위에서 올해 1순위로 올랐다. 지난해 공감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충청권은 올해 33.9%로 지난해 20.5%에서 13.4%p 상승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감하는 응답률이 보수 45.5%>진보 34.4%>중도 30.8%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의 공감 응답률은 지난해 38.1%에서 올해 7.4%p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 4.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조건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 각각 통일과 민주주의 상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우선,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률이 23%,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29.1%로 나타나 작년 조사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전자의 응답률이 27%, 후자의 응답률이 23.2%였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48.0%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표10〉에서 보이듯 올해 응답률은 2007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연도별 응답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통일이 민주주의 완성을 견인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과 민주주의 완성을 통일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응답이 매년 경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9년 연속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또는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과거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연계하여 접근하던 인식의 틀에서 탈피하여 통일과 민주주의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킨다’는 응답이, 젊은 층일수록 ‘민주주의가 완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경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30대의 경우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응답률은 20대 19.5%>30대 16.6%>40대 23.3%>50대 29.2%>60대 이상 26%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우는 응답률이 20대 30.1%>30대 36.1%>40대 27.8%>50대 26%>60대 이상 25.2%로 나타나 대조적인 응답패턴을 보였다.

지역별 응답패턴의 경우,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서는 제주와 충청권의 응답률(각각 38.3%, 31.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에서는 영남권의 응답률(34.5%)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와 관계없다는 견해에서는 강원 지역의 응답률(5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패턴은 작년과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통일

의 선도적 역할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26.3%)이 가장 높았으나,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주의의 완성에서는 지난해에 진보적 성향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중도적 성향의 응답률(33.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10〉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19.9	20.0	19.3	18.1	19.7	23.6	23.6	27.0	23.0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31.3	23.5	31.2	29.8	25.1	24.8	26.1	23.2	29.1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없음	48.7	56.6	49.5	51.9	55.3	51.7	50.3	49.8	48.0

북한의 경우는 작년과 달리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과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근접하게 나타났다. 〈표11〉에서 나타나듯 전자의 응답률은 2014년 39.9%에서 2015년 38.2%로 소폭 하락했으나, 후자의 응답률은 2014년 27%에서 2015년 33.3%로 꽤 상승했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지난해 33.1%에서 올해 28.5%로 줄어 들었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통일과 민주주의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 분포의 경우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응답률도 높게 나타나며,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적을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의 선도적 역할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완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북한 민주화를 위한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서는 제주와 호남권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의 경우, 통일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수 41.7%, 중도 38.1%, 진보 34.8%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중도와 보수 간의 응답률 격차가 10%p 차이 났던 것에 비해 올해는 두 성향 간의 응답률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북한의 민주화 선행론에 대한 인식은 진보 35.1%, 중도 34.4%, 보수 29.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난해

에 비해 모든 정치적 성향 집단들에서 응답률이 높아졌다. 특히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중도 성향의 응답률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데 작년에 25.4%에서 올해 34.4%로 9%p 상승했다.

〈표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킴	28.7	34.3	37.6	38.7	34.7	39.9	38.2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 함	27.8	33.5	29.4	32.0	33.0	27.0	33.3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없음	43.6	32.2	33.0	29.3	32.3	33.1	28.5

## 5.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통일방안에는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8.1%로 가장 많았다.<sup>1</sup> 이 응답률의 추이는 2009년 43.6%→2010년 44.4%→2011년 48.9%→2012년 44.2%→2013년 43.6%→2014년 44.9%→2015년 48.1%로 7년 동안 응답률 40%대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 응답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의 비율 역시 2009년 39.1%→2010년 38.8%→2011년 35.6%→2012년 37.7%→2013년 35.4%→2014년 37.9%→2015년 33.5%로 7년 동안 응답률 30%대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격년마다 응답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1\_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 후 입국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 안팎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48.6%로 남한주민의 통일의식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최규빈, “주민의 통일·주변국 인식”, 『2015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2015년 8월 26일), p.120.

주목할 점은 두 항목 즉, '남한의 현체제 유지'와 '남북한 체제의 절충'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의 7년간 평균 응답률은 45.4%이고, 후자의 7년간 평균 응답률은 36.9%로 두 항목간의 응답률 격차가 8.5%p 수준이다. 따라서 소위 남한체제로의 '흡수통일' 방식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작년에 두 응답률 격차가 7.5%p였으나 올해에는 격차가 8.5%로 증가했다는 점은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 '통일 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견해와 '통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지난해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표 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남한의 현체제 유지	43.6	44.4	48.9	44.2	43.6	44.9	48.1
남북한 체제의 절충	39.1	38.8	35.6	37.7	35.4	37.9	33.5
남북한 두 체제 유지	13.3	12.6	12.3	15.1	16.9	13.2	13.6
어떤 체제도 무방	4.0	4.2	3.2	3.0	4.1	4.1	4.8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응답분포는 표본오차 ±2.8% 안에서의 응답률 격차를 보일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응답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 항목의 경우 20대(52.3%)와 60대 이상(56.8%)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난해 두 연령대의 응답률이 각각 48.8%, 4.07%였던 것에 비해 올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반면에 지난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30대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40대의 경우는 올해 정반대의 변화를 보였다. 30대의 경우는 지난해 49.3%에서 올해 46.3%로 감소했고, 40대는 지난해 39.3%에서 올해 44.8%로 증가했다. '남북한 두체제의 절충' 견해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40대이고,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50대로 나타났다.

직업별 응답분포의 경우 블루칼라 종사자와 화이트칼라 종사자간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 견해에서는 블루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반면에, '남북한 체제 절충'과 '남북한 두 체제 유지' 견해에서는 화이트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블루칼라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응답률 분포는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남북한 체제 절충'을 선호하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고소득층(400만원 이상)의 경우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서는 응답률이 가장 낮고, 반대로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영남권으로 응답률이 53%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응답률이 63.4%였던 것에 비하면 올해에는 10%p 가까이 감소했다. '남한의 현체제 유지'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충청권으로 응답률이 36.0%이다. '남북한 체제 절충'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로 응답률이 36.4%이다. 지난해 응답률이 52.1%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15.7%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영남권(31.1%)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두 체제 유지'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강원으로 응답률은 18%이다.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모든 항목들에서 지역별 응답률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의 현 체제 유지'에서는 보수 52%, 중도 49.8%, 진보 40.5%로 나타났고,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는 보수 28.9%, 중도 31.8%, 진보 41.7%로 나타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에는 중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 '남한의 현 체제 유지'에서는 지난해 42.1%에서 올해 49.8%로 증가했고, 반대로 '남북한 체제 절충'에서도 지난해 37.4%에서 올해 31.8%로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중도적 성향의 응답패턴이 보수적 성향과 더 가까워졌다.

## 6. 소론

올해의 통일 인식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인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들이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경우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각각 12.4%p, 14.1%p가 감소했다.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가 좋다'는 견해의 비중이 20대가 가장 많았는데 같은 응답에서 60대 이상의 응답률보다 3배 더 높은 응답률이다.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에서도 20대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항목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감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이 가장 관심이 많은 실업문제의 경우 통일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의 응답에서도 개선 기대감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60대 이상이고 기대감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변화는 통일의 이유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라는 이유가 9년 동안의 조사가 진행된 이래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리 수의 비중을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당국간 회담의 의제로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 것이 국민들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조사에서는 그동안 통일의 이유로서 현실적인 문제들인 '남북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년대비 줄어들었고, 오히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이란 이유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9년간 조사 결과 중 올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이유로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 중 하나는 통일의 가능 시기를 묻는 질문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다른 어떤 항목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런데 올해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2순위로 물러났다. 대신에 2013년 이후 2순위로 밀려났던 '20년 이내'가 올해 다시 1순위에 올랐다.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다.

세 번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했다. 통일이 가져다 줄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 자신의 이익 모두 지난해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올해에도 증가폭은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증가세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문항에서도 이념갈등을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대감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9년간의 조사에서 올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직 통일대박 담론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는 처음 제기된 지난해보다 올해 더 증가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공감한다는 비율이 36.4%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 36.8%의 응답자들이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젊은 세대에서의 공감도가 매우 낮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장 인구비중이 많은 중도적 성향에서 공감도가 가장 낮다는 점 등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통일 인식 속에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에 그 갈등과 모순은 해소되기도 하고 반대로 증폭될 수도 있다. 통일인식을 제고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나치게 경제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심화시킬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중층적인 모순과 균열은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과제들을 던져준다.

통일외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외식조사

02

# 대북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2]

## 대북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5년은 연초부터 분단·광복 70년을 맞는 해로 남한과 북한 모두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고 의미 있는 대화와 만남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매우 높았다. 2014년 10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정치실세 3인의 전격적인 남한방문으로 남북관계가 일시에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는 듯했고, 이에 화답하듯 남한의 통일부 장관은 2014년 12월 29일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1월 중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의하였다. 연초에는 분단·광복 70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북공동행사와 회담이 무산되고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북한은 연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면 핵실험 계획을 임시 중지하겠다는 제안(2015.1.10.)을 하여 대미압박을 시도했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제안을 한미군사훈련과 핵실험을 연계하는 암묵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2월 4일 국방위원회 성명으로 미국에 대항하여 핵무기 개발을 재천명하고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였다. 이후 3월 2일부터 키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Goal Eagle) 연습을 시작, 4월 13일까지 키리졸브가 진행되고 4월 24일까지 독수리연습이 진행되었으며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기간 내내 대미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 내부 정세 변화와 경제개혁 관련 소식은 남한 주민의 대북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2015년 4월 30일 북한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에 대한 전격 처형은 남한과 외부세계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장성택 부장의 처형 이후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였는데, 2015년에 발생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더 강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시장화나 경제개혁보다는 군사적 도발이나 독재체제의 잔혹함이 더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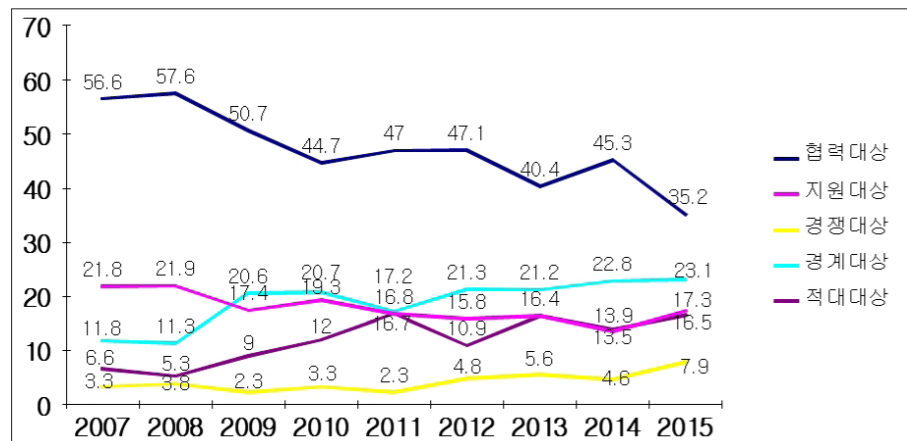
남한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5년 6월 15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남한의 '체제통일'을 비난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마련,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및 실천적 조치 이행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한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일(2015.6.23)에 맞추어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주민 2명에 대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남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과 남북 간의 대립이 2015년 7월 조사에서 국민의 대북인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의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5.2%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23.1%, ‘지원대상’이라는 대답은 17.3%, ‘적대대상’이라는 응답도 16.5%,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7.9% 등이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이라는 의식이 45.3%→35.2%로 10.1%p 급락했으며, 작년에 16.4%→13.9%로 누그러졌던 대북 ‘적대의식’은 다시 13.9%→16.5%로 2.6%p 상승했다. 대북 ‘협력의식’은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적대의식’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는 분단·광복 70년을 맞이하여 기대했던 남북공동행사가 모두 무산되고 남북 간 격렬한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림 1> 남북한 관계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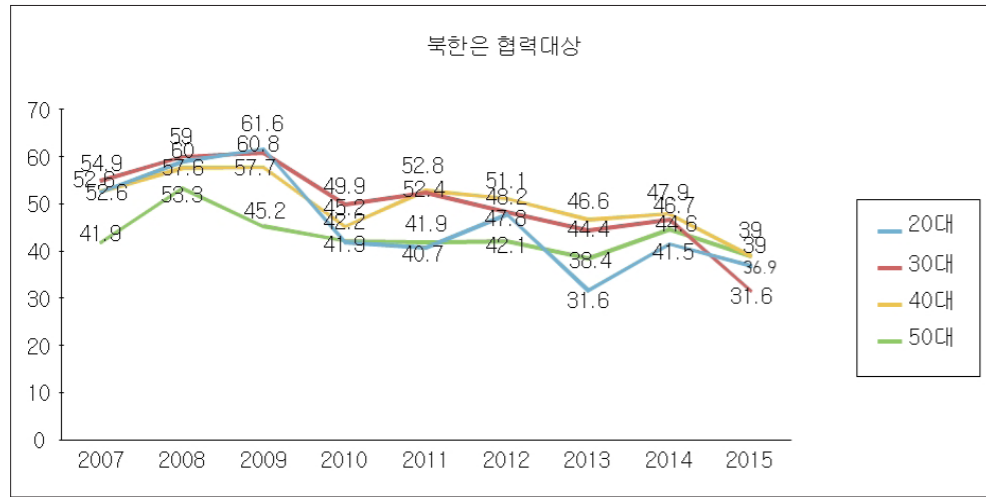
남북한 관계 인식은 성별, 직업, 종교 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연령, 지역, 교육, 소득수준, 사회계층, 도시화, 정치성향 등은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북한발 안보위기 의식이 고조되어 지역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를 잠식하여 대북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위기의식이 완화됨에 따라 연령과 지역, 계층, 정치성향 등에 따라 의식의 분화가 뚜렷이 진행되었다.

<표 1> 남북한 관계 인식과 유관 변수

변수 구분	협력·지원·경계·적대 등 대북인식	
연령	$\chi^2=34.971$	p=0.004
지역	$\chi^2=88.438$	p=0.0000
교육	$\chi^2=23.387$	p=0.003
소득수준	$\chi^2=39.382$	p=0.001
사회계층(상/중/하)	$\chi^2=37.528$	p=0.010
도시화(대도시/중소도시/읍면)	$\chi^2=37.946$	p=0.0000
정치성향	$\chi^2=32.879$	p=0.008
지지정당	$\chi^2=29.305$	p=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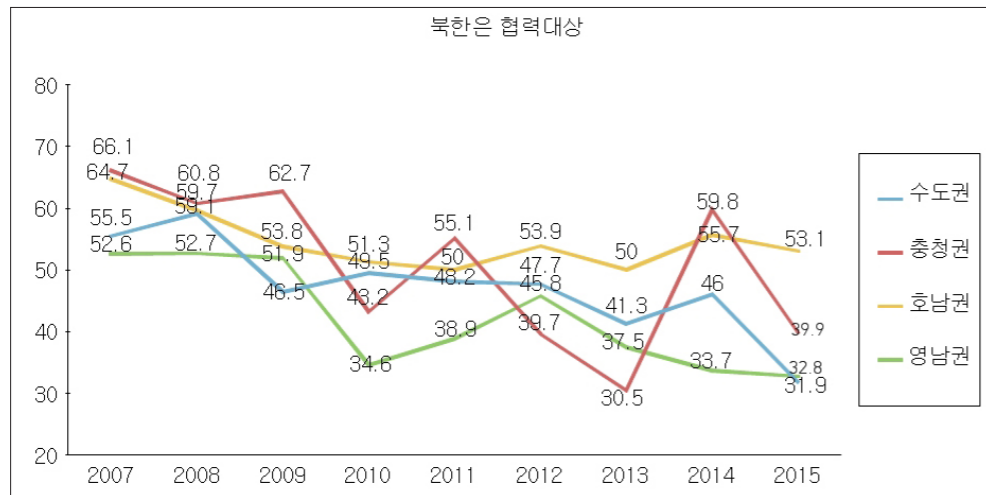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60대(27.6%)의 대북 협력인식이 가장 낮고 그다음으로 30대(31.6%) < 20대(36.9%) < 40대(39.0%)≒50대(39.0%)의 순으로 30대 연령층의 대북 협력인식이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대북 적대대상 인식에서는 20대(19.7%)의 젊은층이 가장 높고, 30대(16.8%)≒60대(16.7%) > 40대(15.7%) > 50대(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에는 안보위기가 고조됨으로써 대북 협력인식에서 연령별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연령별 분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30대의 이탈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수년 동안 높은 수치를 보였던 30대의 대북 협력인식이 올해 46.7%→31.6%로 15.1%p 급락했다.

〈그림 2〉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지역별로는 호남권(53.1%)의 대북 협력의식이 가장 높고 충청권(39.9%) > 영남권(32.8%) ≒ 수도권(31.9%)의 순이며, 수도권은 대북 적대인식이 21.5%로 영남(12.4%), 호남(14.1%), 충청(7.0%)에 비해 매우 높다. 1년 사이에 가장 뚜렷한 변화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협력대상 인식은 59.8%→39.9%, 46.0%→31.9%로 각각 19.9%, 14.1%p씩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협력대상 인식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적대의식 쪽으로 이동했고, 충청권에서는 지원대상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3〉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단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높은 반면 지원대상 인식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그러나 대재 이상 고학력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지만 동시에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하다. 또 저소득층(13.0%)이나 중간층(14.2%)에 비해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대북 적대인식이 20.1%로 매우 높는데, 이는 우리 사회 상류계층이 상대적으로 대북 적대의식을 더 강하게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중소도시 거주자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도시 거주자와 읍면 단위 농촌거주자는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차도 올해에는 뚜렷하게 드러나,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진보(40.6%) > 중도(35.3%) > 보수(35.1%)의 순으로, 대북 적대대상 인식은 보수(21.3%) > 중도(15.7%) > 진보(13.2%)의 순으로 갈라졌다.

##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이 61.7%로 “변하고 있다”(38.2%)는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44.3%→38.2%로 6.1%p 줄어든 반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응답은 55.7%→61.7%로 늘어났다. 즉 북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낮아지고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식은 2007년(68.9%) 이후 줄곧 낮아져 2013년 35.7%로 최저점을 찍고 작년에 잠깐 반등했다가 올해 38.0%로 다시 내려앉았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령, 계층 등의 변수와는 무관하였으며, 지역( $\chi^2=65.3, p=0.000$ ), 정치적 성향( $\chi^2=37.1, p=0.002$ ), 지지 정당( $\chi^2=23.7, p=0.022$ ) 변수와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호남권이 53.8%로 수도권(35.0%)과 충청권(31.6%), 영남권(39.9%)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6.1%p 하락하여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 인식에 줄어들었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은 45.3%→31.6%로 13.7%p가 급락했으며, 수도권은 42.8%→35.0%로, 호남권은 61.1%→53.8%로 각각 7.8%, 7.6%p 감소하였다. 반면, 영남권은 40.7%→39.9%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적 성향과 관련하여서는 진보(40.6%) > 중도(38.7%) > 보수(34.8%)의 순으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정권 안정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이 59.9%로 안정될 것(14.4%)이라는 응답보다 4배가 많았다. 25.7%는 ‘그저 그렇다’라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32.2%→25.7%로 6.5%p 줄고, ‘안정될 것이다’(12.4%→14.4%)와 ‘불안정해질 것이다’(55.4%→59.9%)라는 응답이 모두 늘어났다. 즉 북한정권 안정화에 대한 미래예측의 엇갈림이 조금 더 심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권 안정화’는 지역( $\chi^2=46.4$ ,  $p=0.001$ ), 직업( $\chi^2=32.0$ ,  $p=0.043$ ), 가구소득수준( $\chi^2=61.6$ ,  $p=0.000$ ), 도시화 수준( $\chi^2=24.0$ ,  $p=0.002$ ), 정치적 성향( $\chi^2=35.7$ ,  $p=0.003$ )과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즉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은 자영업, 대도시와 읍면지역, 보수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수도권(17.9%)에서 가장 높고 충청권(13.0%) > 호남권(11.7%) > 영남권(9.9%)의 순으로 낮으며,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호남권이 63.7%로 가장 높으며, 영남권(60.3%)과 수도권(59.0%)이 비슷하고, 충청권은 49.0%로 가장 낮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충청권은 ‘그저 그렇다’는 중간적 평가에 많은 의견(38.0%)에 집중되었으며, 작년에는 호남권이 북한정권을 안정될 것(15.5%)으로 보았는데, 올해는 11.7%로 낮아진 반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50.6%→63.7%)로 대폭 이동하였다. 대신 수도권이 북한정권의 안정화(17.9%)를 가장 높게 보는 쪽으로 지형이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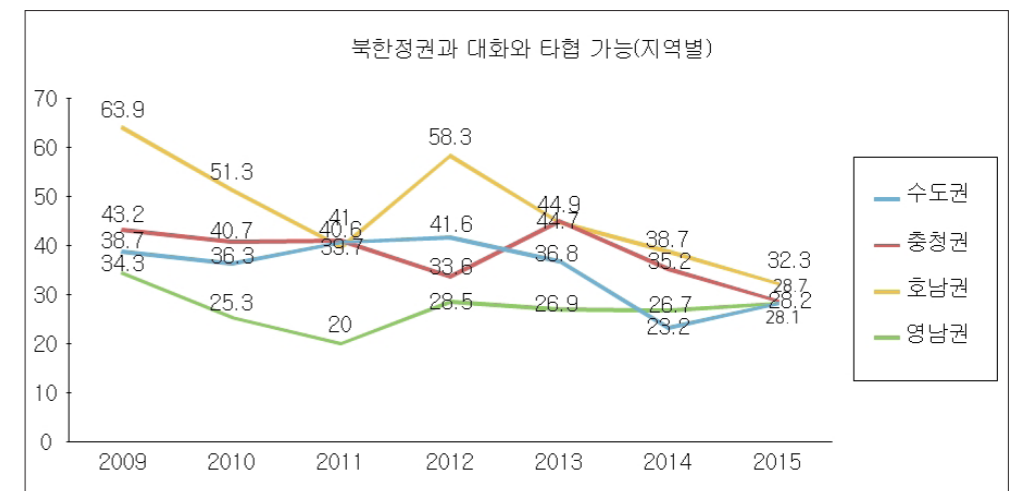
###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신뢰도)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71.3%로 ‘가능하다’(28.7%)는 응답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40.9%) 이래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2년 39.3%로 반등했다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7.5%, 28.7%로 떨어져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최근에 더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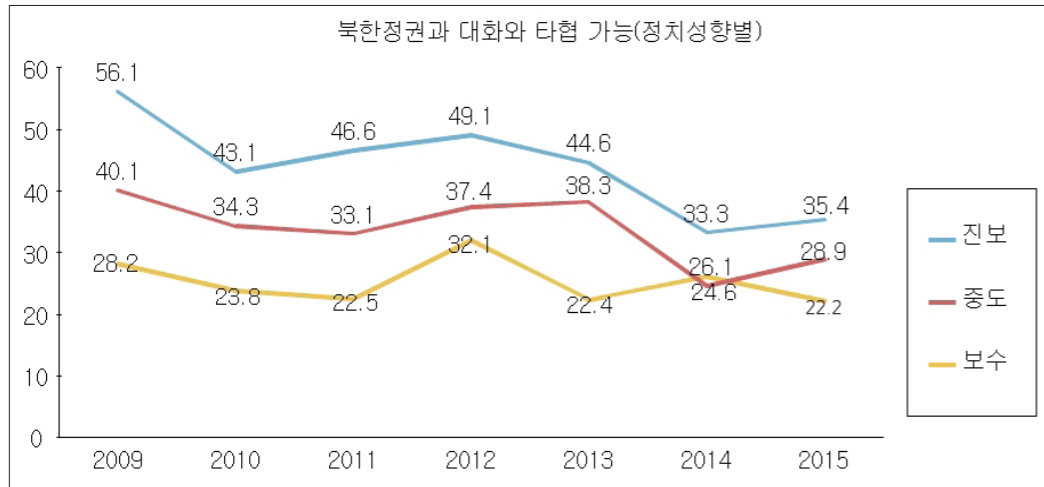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대북신뢰도는 가구소득( $\chi^2=29.3$ ,  $p=0.004$ ), 사회계층( $\chi^2=34.2$ ,  $p=0.003$ ), 도시화 수준( $\chi^2=19.5$ ,  $p=0.003$ ), 정치성향( $\chi^2=45.3$ ,  $p=0.000$ ), 지지정당( $\chi^2=28.4$ ,  $p=0.001$ ) 변수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작년까지는 지역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올해는 지역 간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신뢰도가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역 간 차이가 좁혀지고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가장 낮은 신뢰를 보였던 수도권이 23.2%→28.1%로 올라섬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4〉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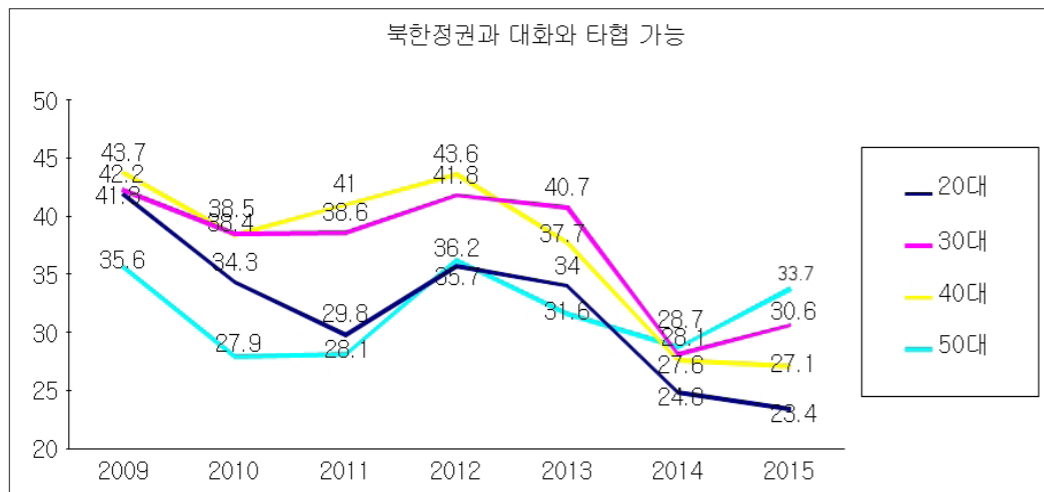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 $\chi^2=45.3$ ,  $p=0.000$ )를 갖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였고 그다음은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신뢰도는 이념성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을 유지하였고 작년에 중도가 보수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올해 다시 중간으로 되돌아와 전형적인 이념 지형을 형성하였다. 즉 지난 수년 동안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중간을 차지하는 양상이 유지된 것이다. 작년에 안보위기의 증대로 중도가 보수의 의견 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간적 위기를 회복하였다.

〈그림 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단위:%)



세대별 인식의 차이는  $\chi^2=12.5$ ,  $p=0.407$ 로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작년과 비교할 때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년에는 세대별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였으나 올해는 연령대별로 확연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20대(23.4%)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반면, 50대(33.7%)는 높은 신뢰를 보였고, 30대(30.6%) > 60대 이상(28.7%) > 40대(27.1%) 순으로 이어졌다.

〈그림 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단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6.3%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으며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최근 몇 년 사이 84.6%, 88.0%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역변수와의 상관성( $\chi^2=63.8$ ,  $p=0.000$ )은 매우 높으며 특히 호남권은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다른 지역(수도권 84.8%, 충청 84.5%, 영남 87.4%)에 비해 93.4%로 높은 편이다. 흥미로운 점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1.7%→83.7%로 12%p 늘어났으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2013년에는 85.9%→84.6%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 큰 변화가 없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4월 개정 헌법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하였고 2013년 3월부터 ‘경제-핵 개발 병진노선’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다.

## 4. 북한의 위협 인식

###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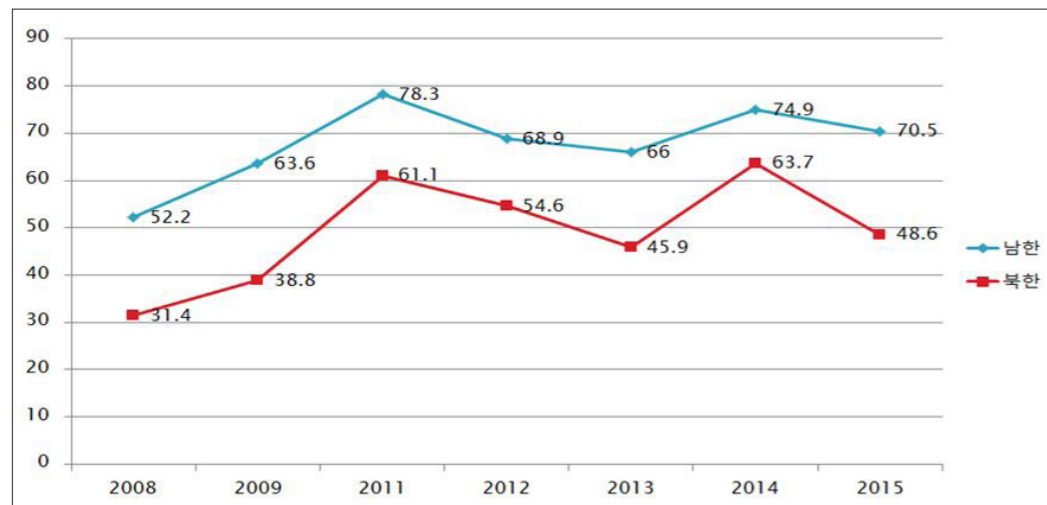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8.9%, ‘다소 위협을 느낀다’ 55.1%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던 2013년 78.4% 보다 10.9%p나 높은 수치이며, 작년의 89.3% 보다는 5.3%p 낮은 수치이다. 북한이 ‘경제-핵개발병진노선’에 대한 주장을 줄곧 펴고 있는 데다 미국에 대한 핵 군축회담 제의 한반도 핵전쟁 위협성 경고 등의 보도가 나오므로써 국민이 북핵의 위협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연령( $\chi^2=26.4$ ,  $p=0.010$ ), 지역( $\chi^2=64.9$ ,  $p=0.000$ ), 정치적 성향( $\chi^2=24.2$ ,  $p=0.019$ ) 등의 변수와 상관성이 있다. 즉 50대(86.6%)와 60대 이상(90.1%)이 다른 연령층(81%)에 비해 높고, 지역적으로는 호남권(88.8%)이 다른 지역(82~84%)에 비해 약간 높으며, 보수(89.2%)가 진보(84.5%)나 중도(81.0%)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시계열로 보면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 61.3%→74.3%로 70%대에 올라선 후, 천안함 이후 2011년에 73.8%→80.7%로 급등했으며, 작년에 89.4%로 최고로 높아졌다가 올해 조금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작년(55.3%)과 비슷한 55.8%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핵무기 보유 의견에 공감하였다.

##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감은 대북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5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70.5%로 '없다'(29.5%)는 응답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작년의 74.9%에 비하면 4.4%p 떨어졌다. 작년 10월 북한의 정치실세 3인방의 전격적인 서울방문으로 안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2015년 3~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친 반발과 위협적 발언,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전격적인 처형(2015.4.30.) 등의 도발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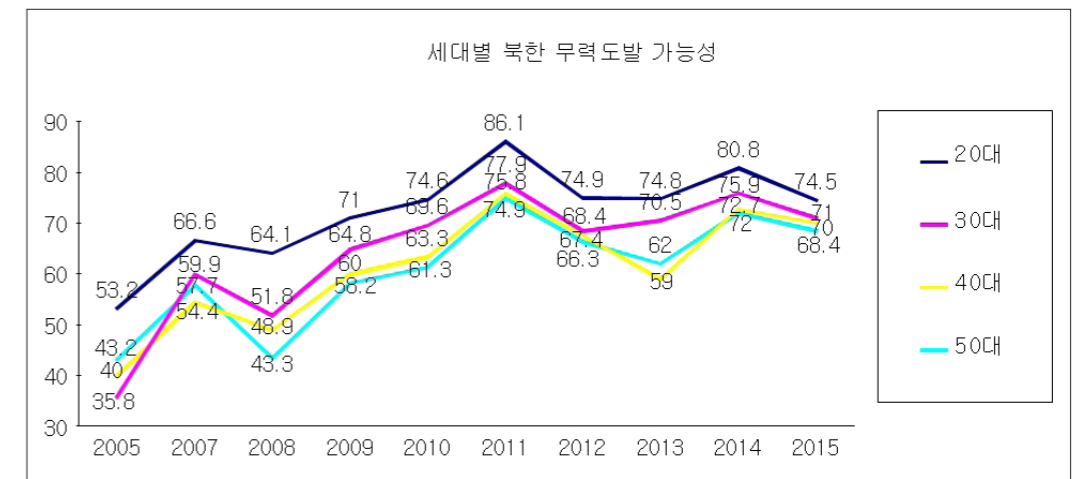
한편, 북한 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48.6%로 '없다'는 응답(51.3%)보다 낮았다.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 사이에 63.7%→48.6%로 15.1%p 떨어졌다. 즉 북한 주민들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었던 이전 해에 비해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물리적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한 주민의 안보불안 의식을 비교해 보면 <그림 7>에 볼 수 있듯이, 등락의 패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끼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북한 주민들의 낮은 안보불안 의식이 미국의 대북 안보위협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남북한 주민들의 안보불안 의식이 실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는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7>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교육( $\chi^2=32.7, p=0.00$ ), 가구소득( $\chi^2=26.7, p=0.009$ ), 사회계층( $\chi^2=33.2, p=0.004$ ), 연령( $\chi^2=35.4, p=0.000$ ), 지역( $\chi^2=83.4, p=0.000$ ), 도시화( $\chi^2=16.8, p=0.010$ ) 변수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대재 이상(75.1%),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74.4%)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로는 20대의 안보불안감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예년 그대로 유지되었다.<sup>1</sup> 즉 20대는 74.5%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71.0%, 70.0%,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8.4%, 68.8% 등으로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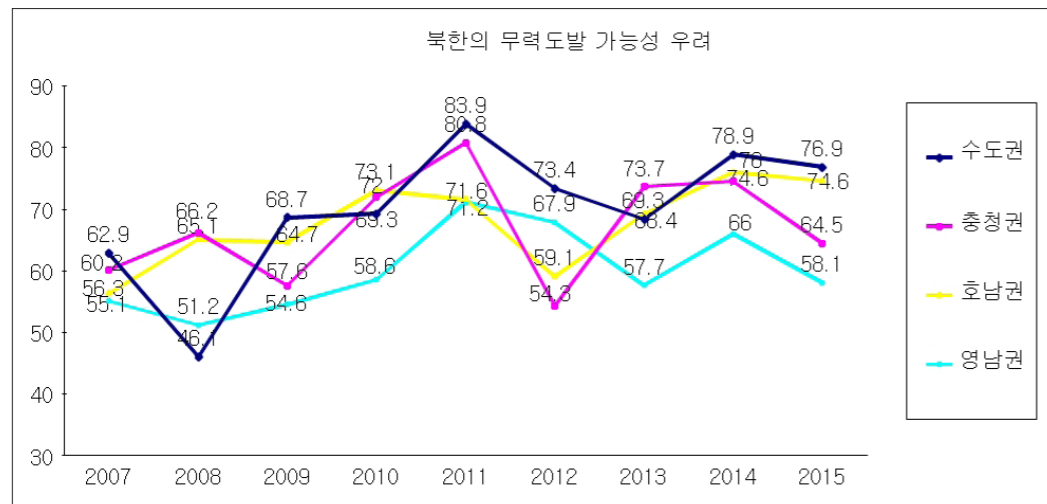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북한발 무력도발 불안은 전반적으로 4.4%p 낮아진 가운데, 수도권(76.9%) > 호남권(74.6%) > 충청권(64.5%) > 영남권(58.1%)의 순위는 작년과 비슷하게 이어졌다.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권이 북한발 안보불안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예측하였다. 안보불안에 대한 정권교체 효과를 고려하면 영남권이 낮은 수치로 나온 이유는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

1.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0.0000), 가구소득(0.000), 사회계층(0.000), 정치적 성향(0.000) 변수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미성( $\chi^2=17.1, p=0.146$ )이 확인되지 않았다.

에 대한 신뢰의 배경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sup>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 $\chi^2=32.9, p=0.000$ )가 있고, 대북정책 만족도는 지역과 높은 상관관계( $\chi^2=67.3, p=0.000$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남권과 함께 충청권이 지난 1년 사이 74.6%→64.5%로 10.1%p 떨어진 것은 충청권이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호남권의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는 71.9%로 다른 지역(수도권 48.7%, 충청 55.2%, 영남 42.0%)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북한발 안보위기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정치적 성향과 북한발 안보불안은  $\chi^2=19.6, p=0.074$ 로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으나, 비교적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진보(72.6%) > 중도(71.3%) > 보수(67.1%)로 진보가 높은 안보불안감을 표출하였다. 작년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작년에는 중도(76.5%) > 보수(75.9%) > 진보(71.2%)의 순이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무력도발 위기의식이 높아짐으로써 중도와 보수가 영향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위기의식

2. 안보불안에 대한 정권교체 효과란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안보위기 의식이 전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진보정권 집권 기간에는 진보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진보정권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발 안보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보수세력은 진보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안보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보수세력은 보수정권의 안보관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북한발 안보위기를 낮게 보지만, 진보세력은 보수정권의 대북 강경정책 때문에 북한과의 무력충돌과 그로 인한 안보위기를 높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 박명규·김병로·김병조 외 공저, 『2008 통일인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08), pp. 51, 64; 『2009 통일인식조사』, pp. 51~52; 『2014 통일인식조사』, pp. 8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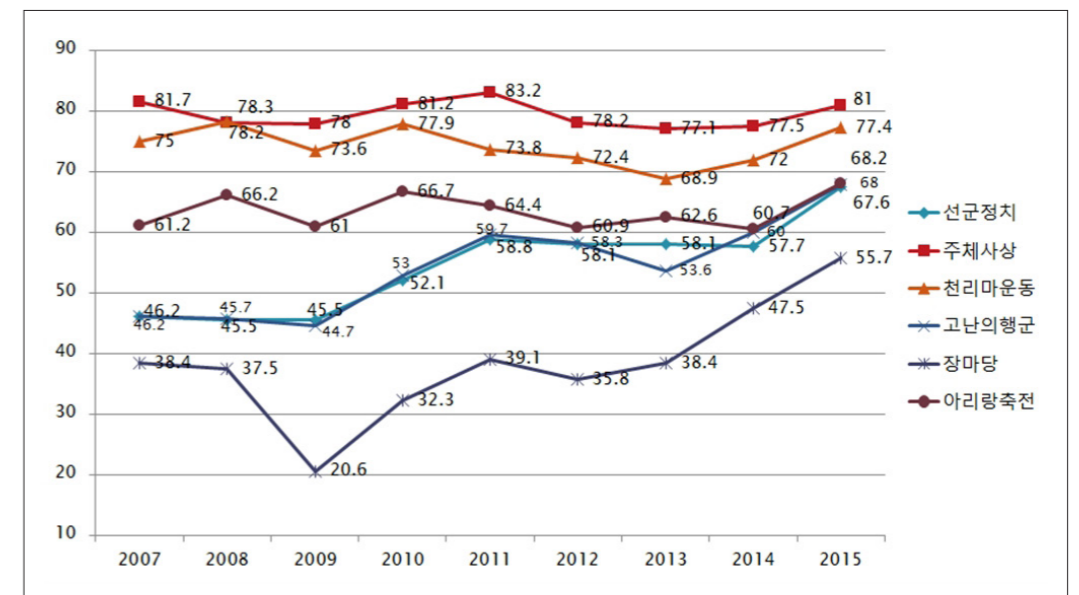
이 완화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보위기를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써 안보불안의식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즉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 한 반면, 보수는 자기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2015년에는 장마당, 선군정치, 아리랑 축전 등 모든 분야에서 사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쪽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군정치 인지도는 57.7%→67.6%로 9.9%p 높아졌고, 장마당 인지도는 47.5%→55.7%로 8.2%p 높아졌으며, 고난의 행군 인지도는 60.0%→68.0%로 8%p 상승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 2년 동안 북한 관련 사건 인지도가 상승한 이유는 작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 이후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등 북한 관련 소식을 빈번하게 보도한 결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0〉 북한사회 인지도 (단위:%)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북한 관련 경험은 탈북자(새터민)를 만나본 경험과 금강산·개성·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은 각각 13.9%→18.4%, 2.8%→3.7%로 증가했지만, 대북지원활동 등 단체 참여 경험과 북한방송·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은 각각 0.9%→0.6%, 31.5%→23.2%로 감소하였다. 탈북자의 국내입국이 연간 1,500명씩 늘어나 2015년 6월 현재 28,133명에 이르러 탈북자와 접촉할 기회는 늘어났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폐쇄되어 있지만, 평양과 개성 방문은 개방되어 있어 미미하지만 방문경험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보다 인터넷 등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되어 있고 남북관계도 단절되어 있어, 북한의 방송이나 미디어의 접촉 경험이나 대북지원 활동 경험은 줄어들었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3%), 생활수준(94.5%), 역사인식(80.7%), 언어사용(84.2%), 생활풍습(82.1%), 가치관(91.0%) 등 모든 분야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북의 이질성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한 주민들의 남북 이질성 인식 평균은 91.9%(11년)→90.6%(12년)→88.9%(13년)→87.8%(14년)→87.6%(15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남북 간에 전반적으로 동질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이질성 인식과 비교하면 북한 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 주민들의 평균은 93.6%로 남한(87.6%)보다 6.0%p 높다(〈표 2〉). 이것은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사회를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2〉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5년) (단위:%)

	남한	북한
선거방식	93.3	97.9
생활수준	94.5	98.3
역사인식	80.7	92.5
언어사용	84.2	93.8
생활풍습	82.1	87.0
가치관	91.0	91.8
<b>평균</b>	<b>87.6</b>	<b>93.6</b>

## 6. 소결

2015년 국민의 대북인식은 첫째, 북한발 안보불안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소폭으로 낮아졌다. 작년에 74.9%로 상승했던 북한발 '안보불안의식'은 지난 1년 사이 70.5%로 4.4%p 감소했고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대북신뢰도'는 27.5%→28.7%로 1.2%p 상승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년 10월 북한 고위급 정치인의 전격적인 서울방문과 분단·광복 70년을 맞는 기대감 등으로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으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무력대응 위협,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등으로 안보위기와 대북불신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88.0%→86.3%로 소폭 낮아져 여러 면에서 위기가 고조되었던 작년에 비하여 올해는 안보불안과 대북불신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안보불안과 대북불신이 소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협력인식이 떨어지고 적대의식이 높아졌다. 즉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대북 '협력대상' 인식은 45.3%→35.2%로 10.1%p 급락했고, 대북 '적대의식'도 13.9%→16.5%로 2.6%p 상승했다. 안보위기가 소폭 완화됨으로써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나 협력 필요성이 크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2014.12.18)과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등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대북비판여론이 높아진 데다, 현영철 처형 등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부정적 응답이 55.7%→61.7%로 6.0%p 상승한 것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안보불안과 대북불신의 완화가 대북 적대의식의 완화 및 협력인식 상승으로 이어지던 과거의 패턴과는 조금 달라진 현상이다. 즉 안보불안 및 대북불신 해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상승하는 역진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역진 현상은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소폭 변동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일 수 있다. 작년의 경우처럼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북협력의 필요성을 자극하여 대북 '협력인식'을 끌어 올릴 수 있으므로 향후 변화를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안보위기와 대북불신이 완화됨으로써 세대, 지역, 교육, 계층, 정치적 성향, 도시화 등 여러 사회학적 변수에서 뚜렷한 의식의 분화가 나타났다. 작년에는 안보불안이 여러 변수의 차이를 잠식하여 의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세대,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올해 조사는 연령대 구분에서 50대와 60

대 이상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반영한 결과 각 세대별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즉 20대(74.5%)는 북한발 안보위기를 가장 높게 인식했고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가장 낮으며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다. 30대는 대북 '협력인식'이 6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적대대상' 인식은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지난 1년 사이 '협력대상' 인식이 15.1%p가 급락하여 강한 대북 비판의식을 획득한 세대로 발전하였다. 40대와 50대는 386세대의 특징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즉 40대는 50대와 함께 대북 '협력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북한정권에 대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며 대북 '협력인식'도 가장 높았고, 60대와 함께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절반의 인구가 386세대로 진입한 50대의 특징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0대 이상은 북한을 적대대상 인식이 2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30대와 비슷한 반면, 협력대상 인식은 가장 낮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20대나 30~40대와 다르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의 변화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었다.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다른 지역(영남권과 호남권)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충청권은 59.8%→39.9%로 19.9%p라는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수도권(46.0%→31.9%)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였다. 또한 충청권의 안보위기 의식은 74.6%→64.5%로 10.1%p 하락하여 영남권과 함께 안보불안 우려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대북의식의 역진 현상, 즉 안보불안이 해소되면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식이 높아지는 현상이 충청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섯째, 대북 협력 혹은 적대 인식, 북한변화, 북한정권 안정화, 정권신뢰도 등 거의 모든 대북인식 항목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식의 편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특히 지금까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정권신뢰도' 항목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다시 보수-중도-진보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의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2015년 국민의 대북인식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의식과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소폭으로 완화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비판적, 적대적 의식이 상승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안보불안감과 대북불신이 완화되면서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대

북인식의 분화가 다시 진행되었다. 50대의 주류로 진입한 386세대의 의식분화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충청권의 부정적 대북인식 강화와 정치성향별 의식격차의 확대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대북인식의 강화와 변수별 의식의 분화가 어떠한 정책요구로 나타나는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외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외식조사

# 03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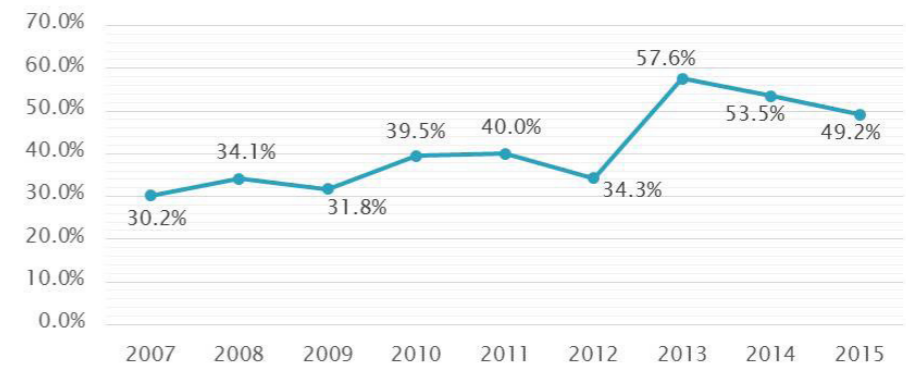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1.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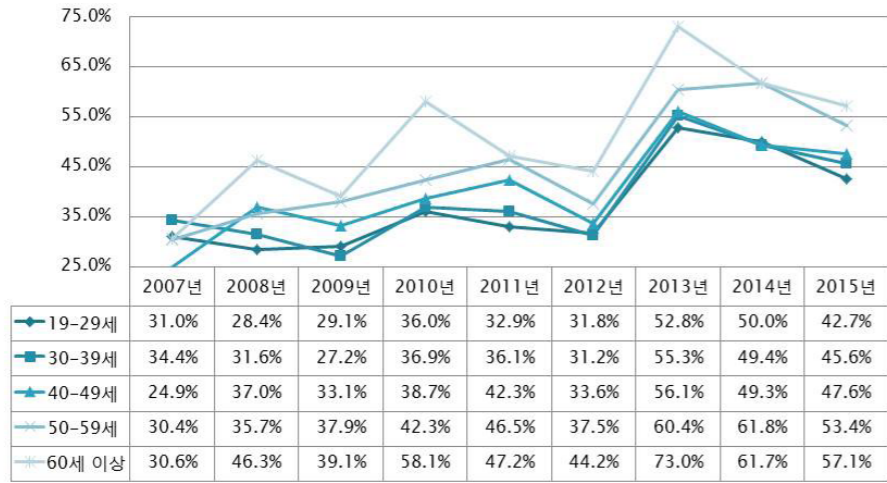
1.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2. 대북정책 주요 현안 인식
3.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4. 통일 견해별 주요 현안 인식

###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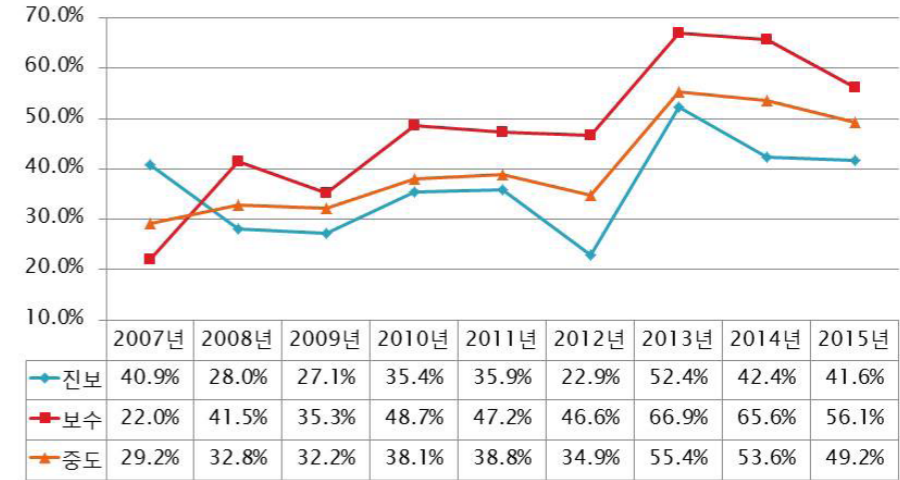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4.3% 하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절반 이하를 기록,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하락세 시현

###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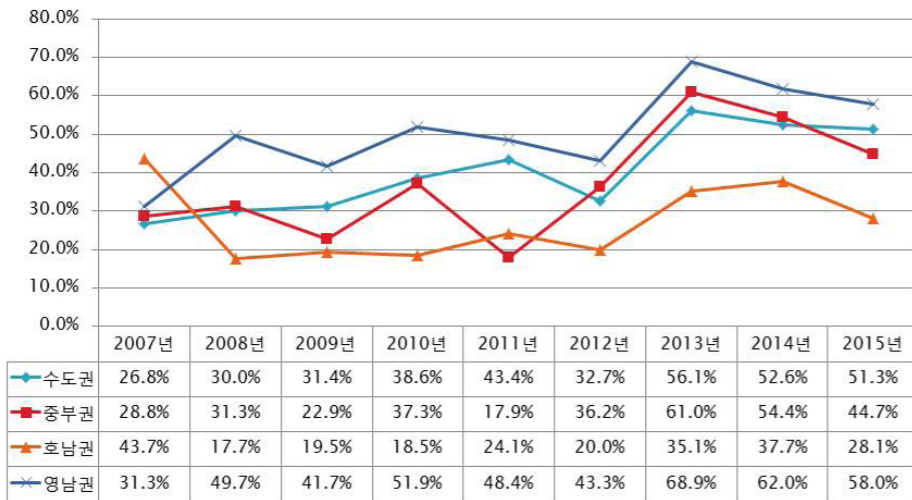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20대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  
20대, 30대와 40대가 40% 중반, 50대와 60대가 50% 중반으로 수렴

###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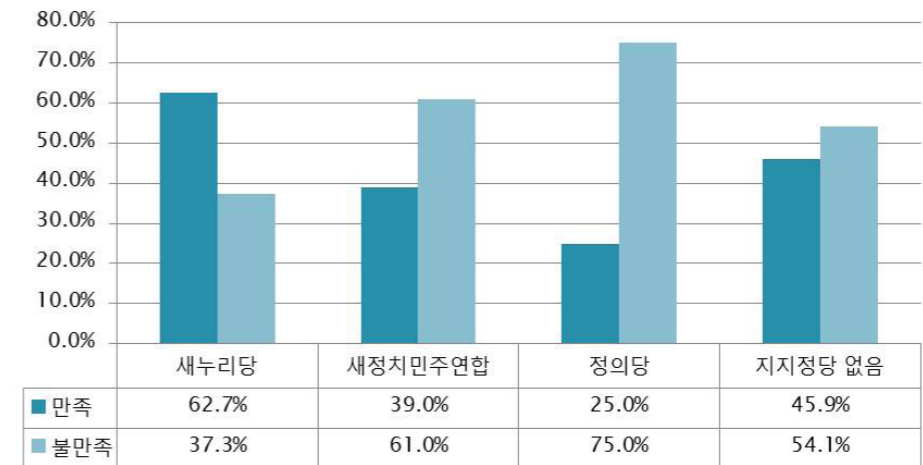
2008년 진보층과 보수층 교차 이후 추세 지속

###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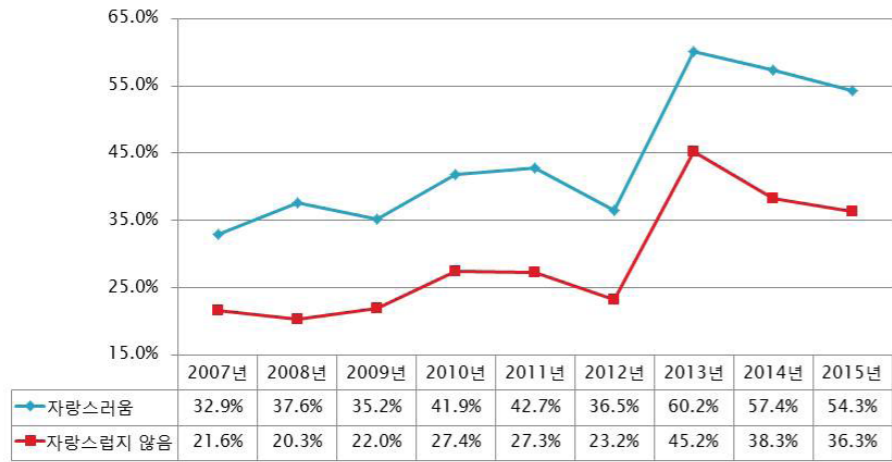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중부권(9.7%), 호남권(9.6%)에서 크게 감소  
2008년 이후 영남권과 호남권 사이에서 수도권과 중부권 교차 양상

### 지지정당별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새누리당의 만족 비율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 23.7%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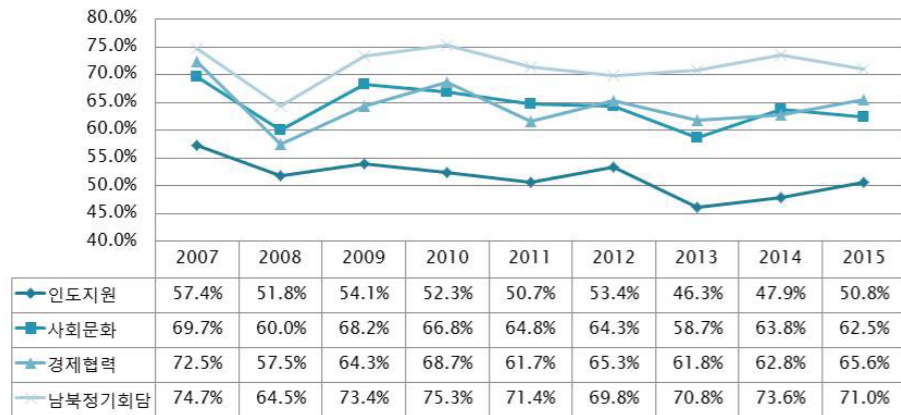
### 한국인 자긍심 인식별 정부 대북정책 만족 비율



2007년 이후 정부나 대북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은 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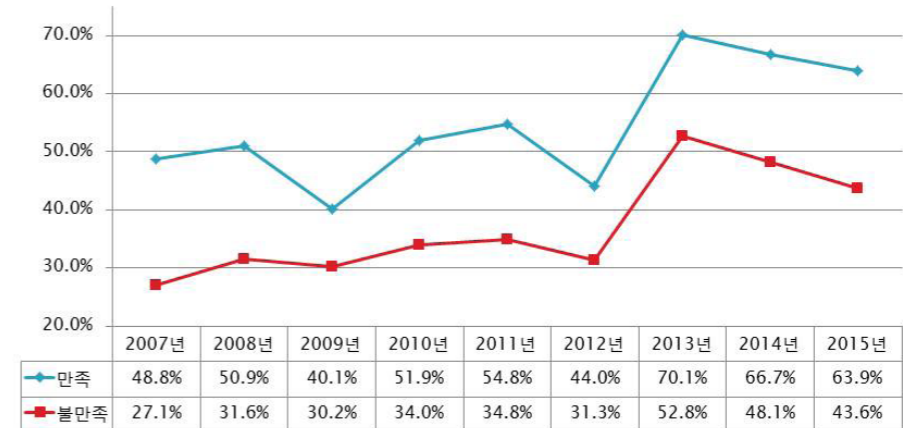
## 2. 대북정책 주요 현안 인식

### 통일에 대한 영역별 기여도(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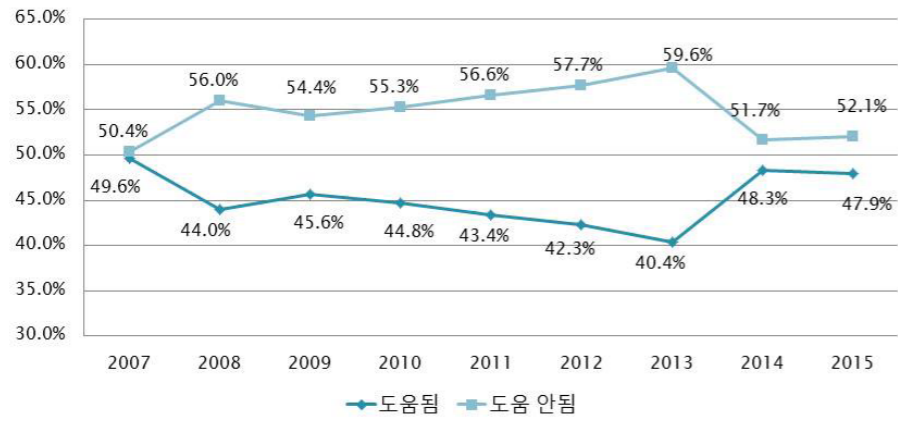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인도지원과 경제협력이 약간 증가 대체로 남북 정기회담이 가장 높고 인도지원이 가장 낮은 추세 지속

### 경제상황 인식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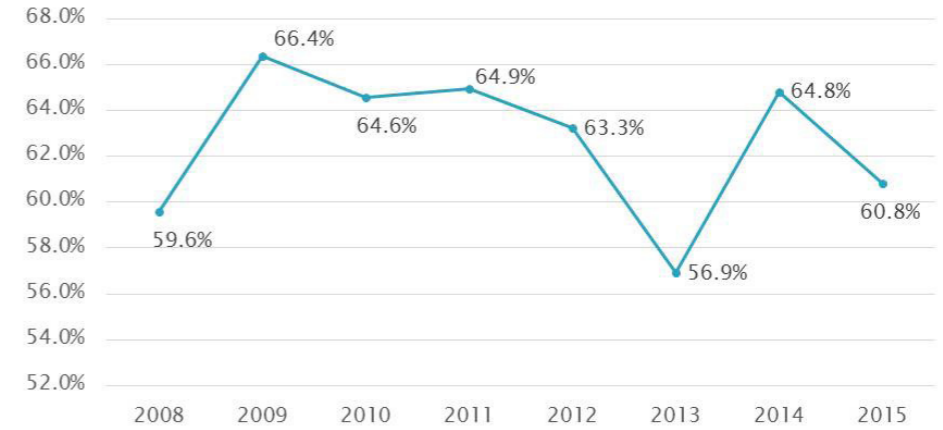
2007년 이후 정부나 대북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경제상황 만족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불만족층보다 높은 추세 지속

###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대북지원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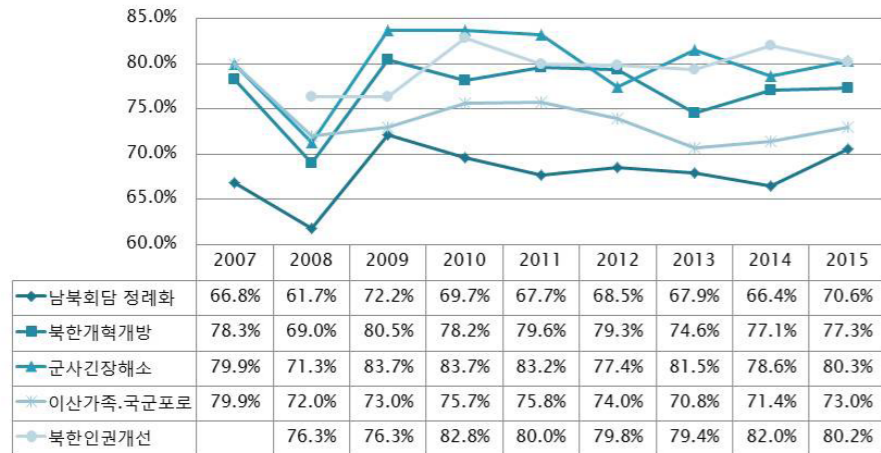
2014년 이후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감소한 추세를 지속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부정적 인식이 절반 이상인 추세도 지속

###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남북경협 기여(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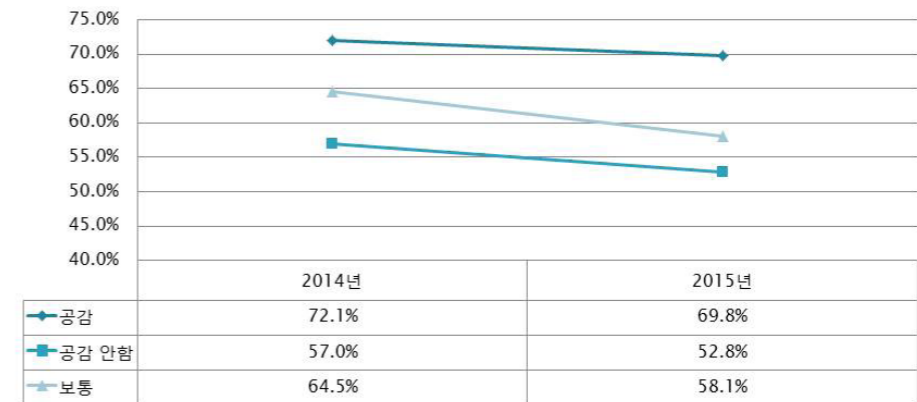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4.0% 하락  
긍정적인 인식이 대체로 60.0% 이상을 유지

### 통일을 위한 시급성(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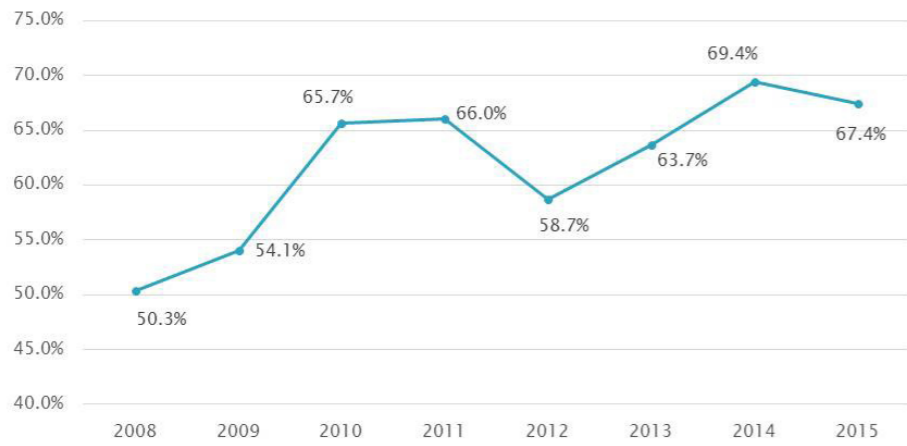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군사적 긴장해소, 남북회담정례화,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가 약간 증가  
군사적 긴장해소와 북한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회담정례화나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시급성은 낮은 수준

### 통일대박 공감여부와 남북경협 기여(도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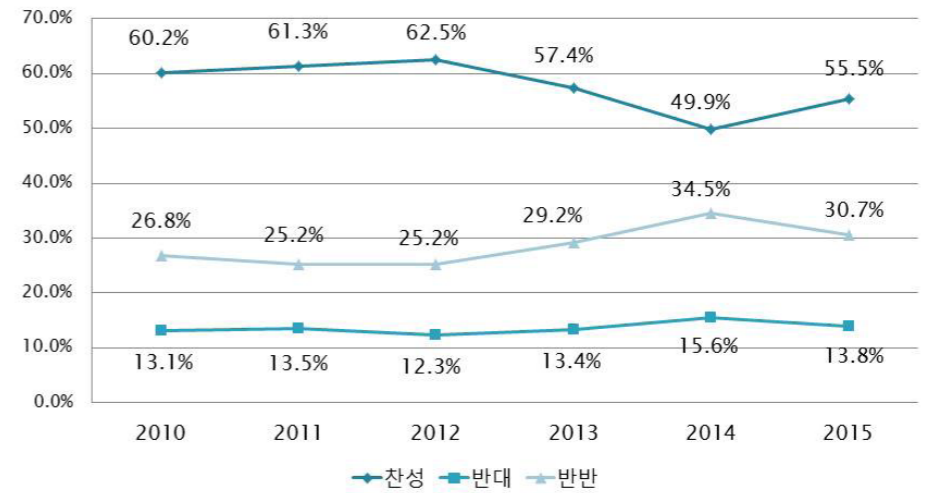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가 클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추세 지속  
\* 통일대박론 공감: 2014-31.4% / 2015-35.6%

### 정부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 계승 동의 비율



2014년에 비해 2.0% 하락하였으나, 60% 후반대를 유지

### 금강산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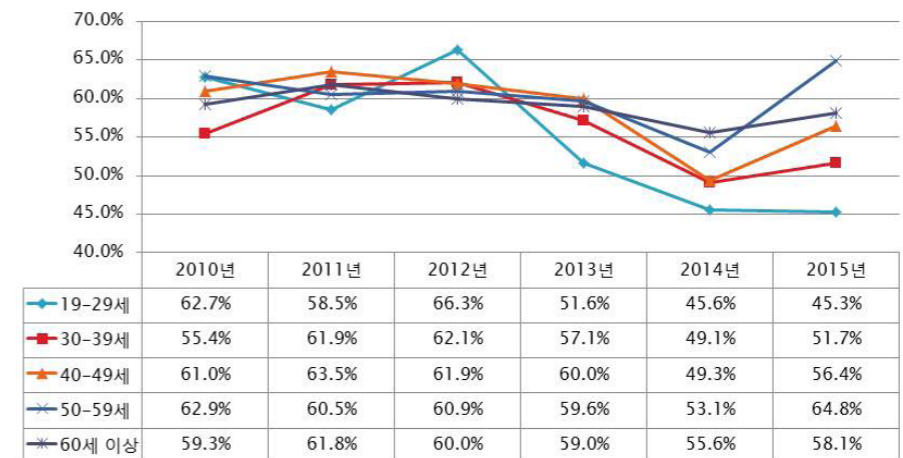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5.6% 증가하여 50%를 상회

### 개성공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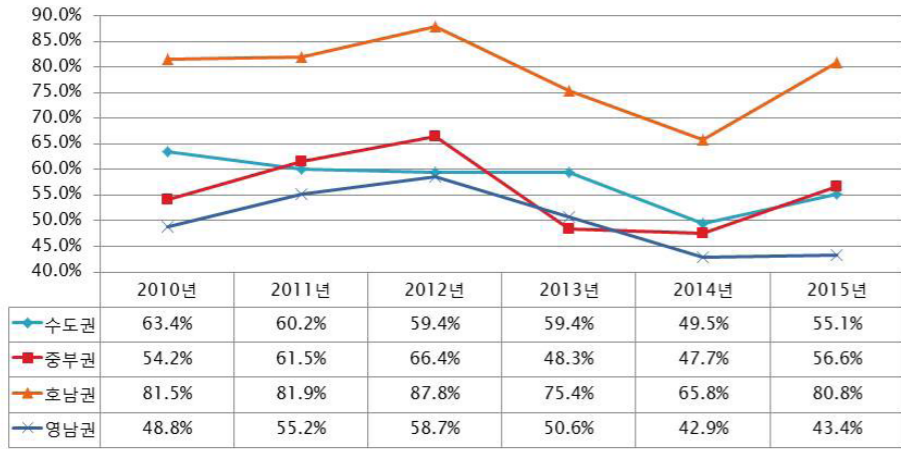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3.8% 증가하여 50%에 근접  
개성공단 유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 전후로 지속

###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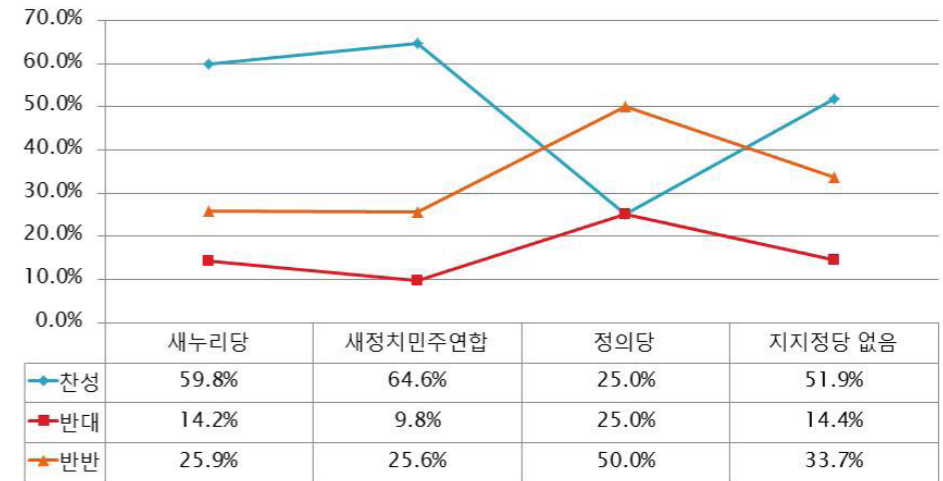
2015년 찬성은 50대>60대 이상>40대>30대>20대 순으로 높음  
2014년에 비해 40대(7.1%)와 50대(11.8%)에서 크게 증가

### 지역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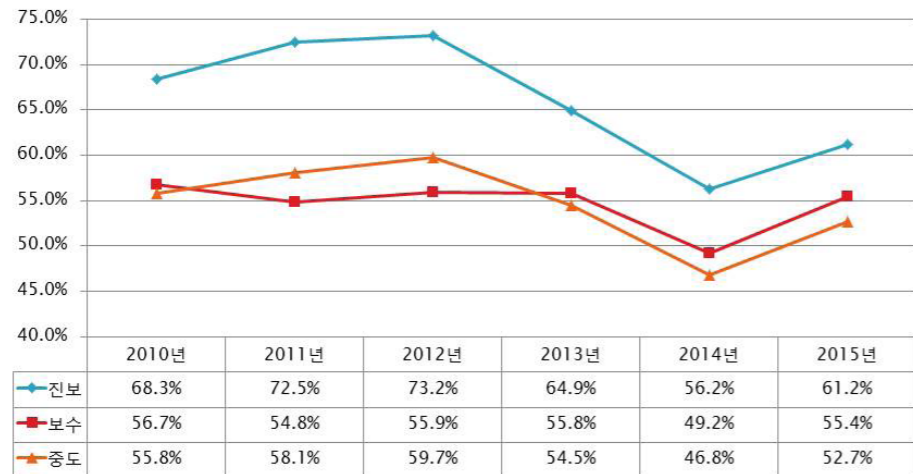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수도권(5.6%), 중부권(8.9%), 호남권(15.0%) 증가  
2014년 이후 호남권과 영남권 사이에서 수도권과 중부권 수렴 양상

### 지지정당별 금강산관광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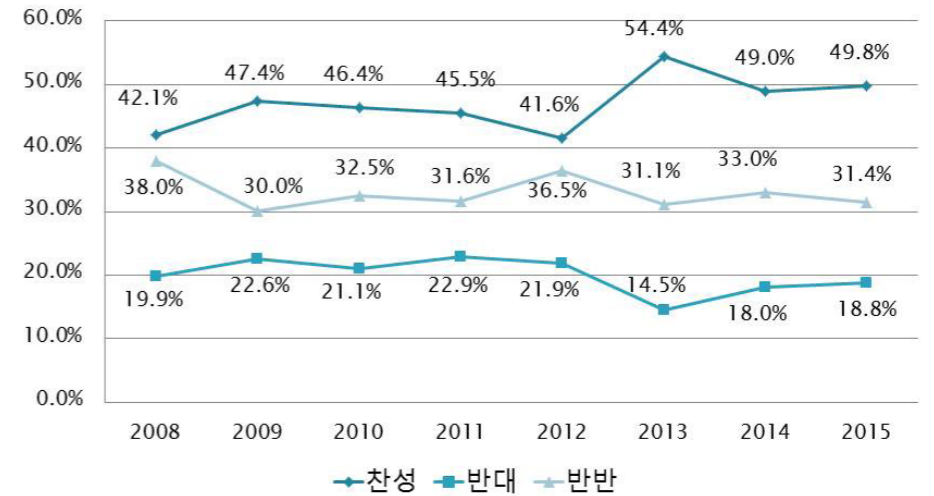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60% 전후가 찬성

### 정치성향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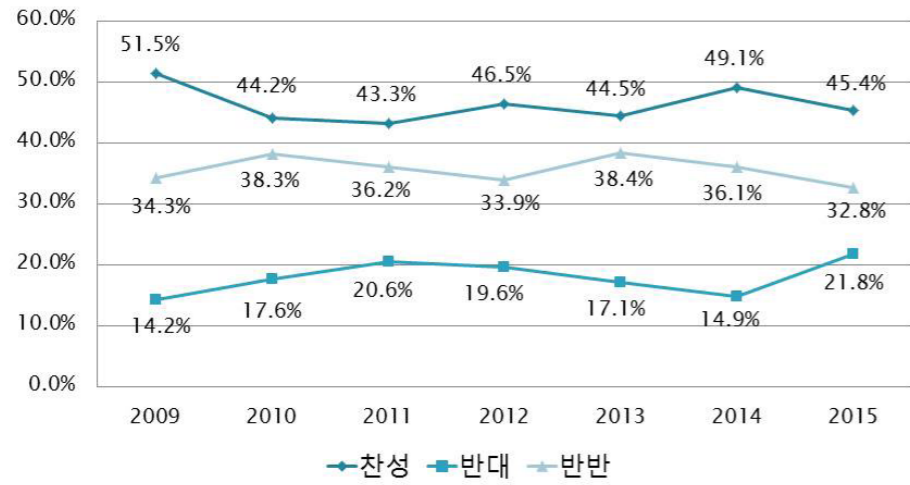
진보층과 보수층간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3년부터 격차가 줄어들고 보수와 중도층이 수렴된 추세도 지속

### 북핵 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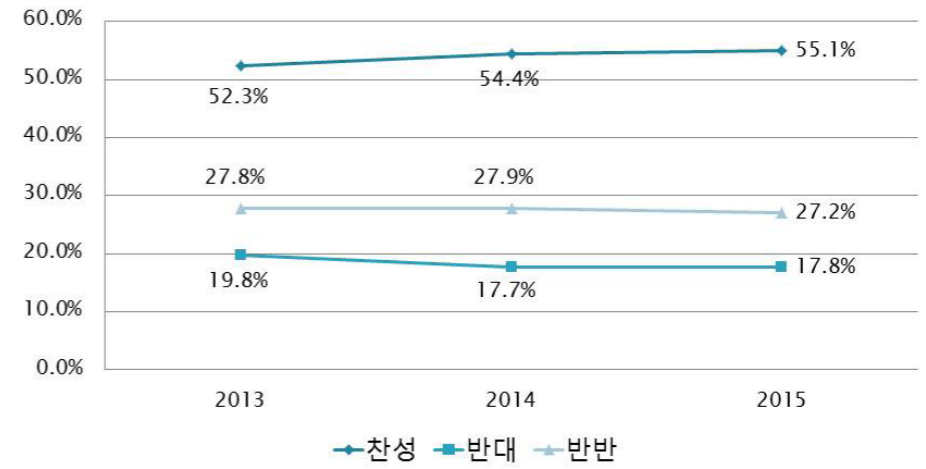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절반 정도가 찬성

###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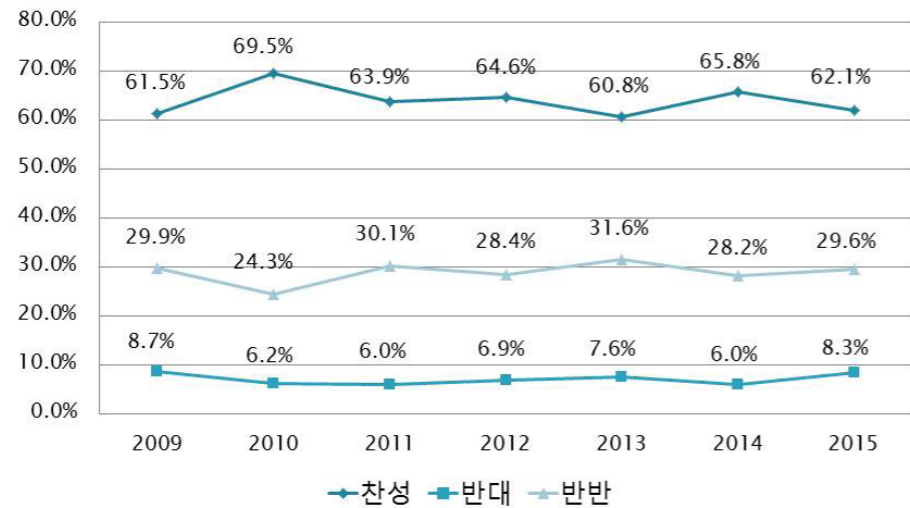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3.7% 감소, 반대 의견이 6.9% 증가

### 한국의 핵무기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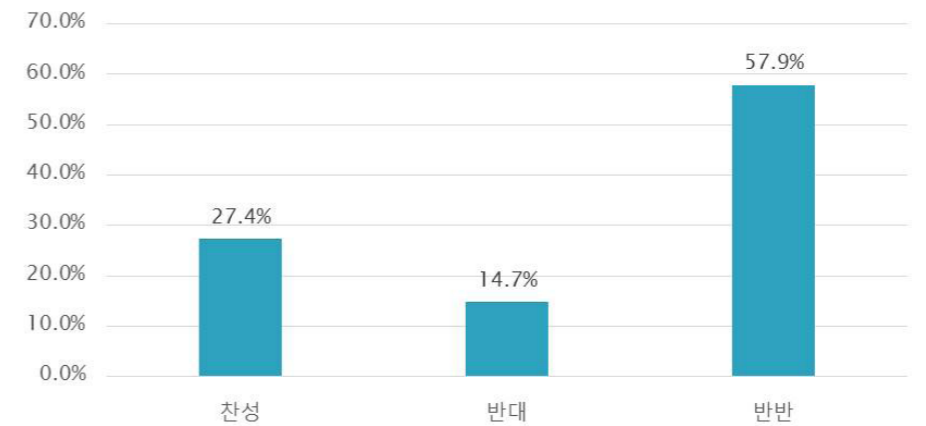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미미하나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주목 대체로 50% 이상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양상 지속

###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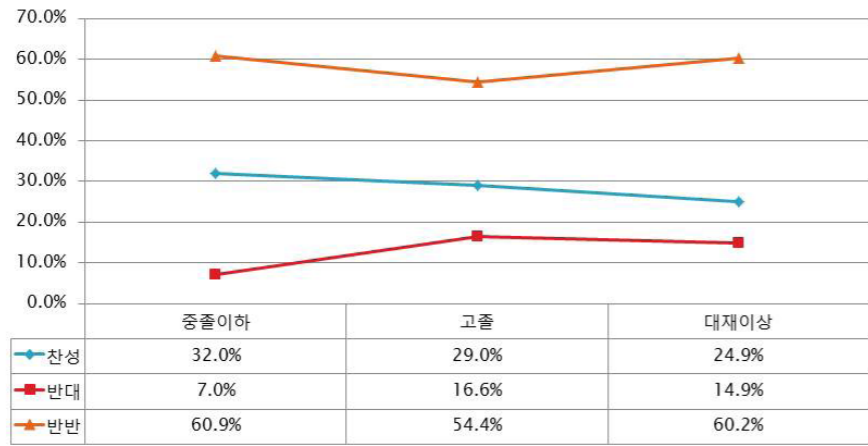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3.7% 감소, 반대 의견이 2.3% 증가 대체로 60% 이상은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에 찬성

### 5.24 조치 해제(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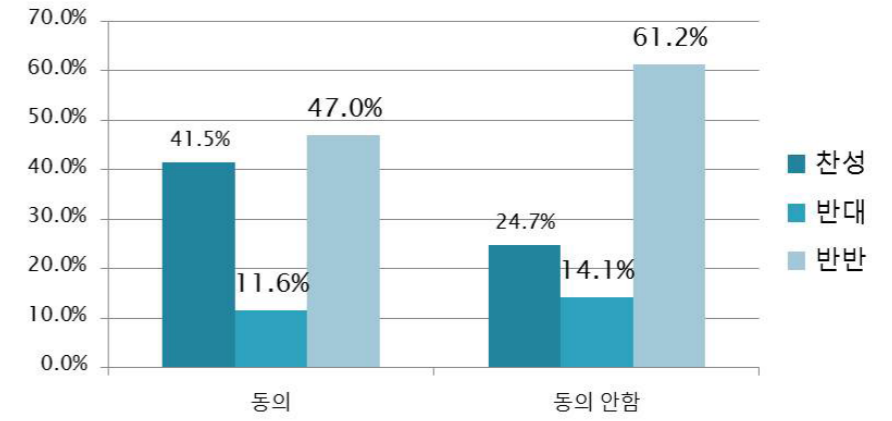
5.24조치 해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배 정도 높지만 60% 정도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점이 주목

### 교육수준별 5.24조치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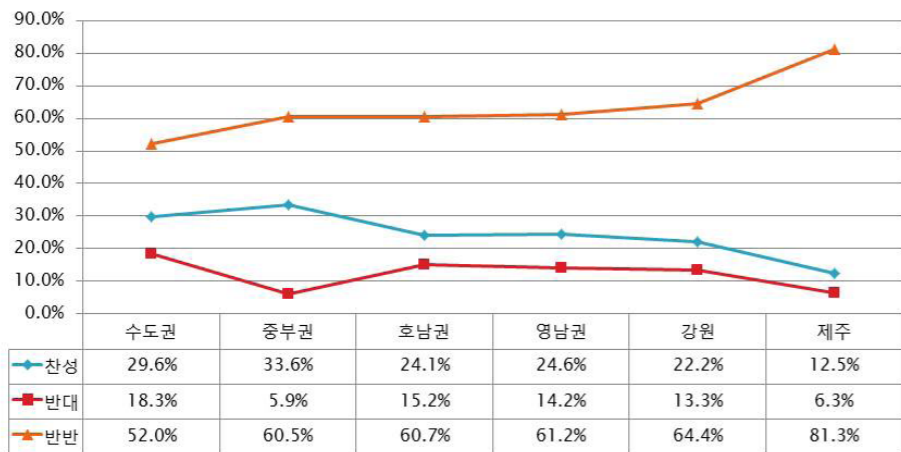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찬성비율이 낮고 반대비율이 높은 양상

### 북한정권 안정화 인식별 5.24조치 해제



5.24조치 해제 찬성 비율이, 북한정권 안정화에 동의하는 경우 29.9% 높은 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10.6% 높은 수준

### 지역별 5.24조치 해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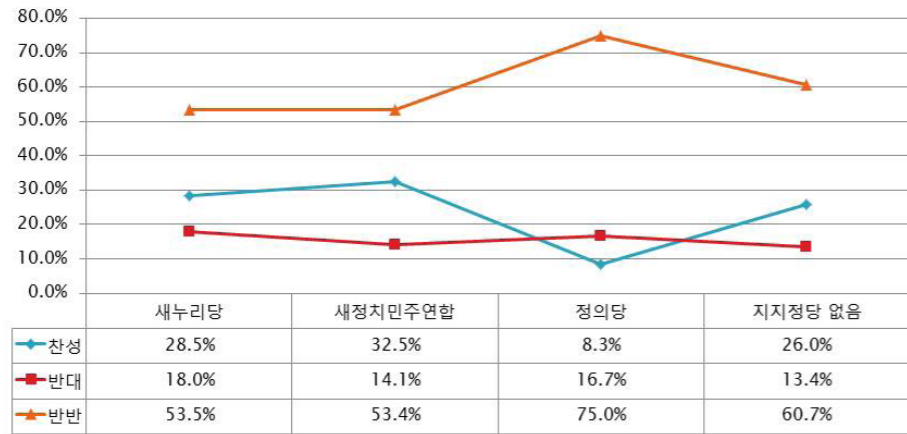
찬성은 중부권>수도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순으로 높음  
반대는 수도권>호남권>영남권>강원>제주>중부권 순으로 높음

### 정치성향별 5.24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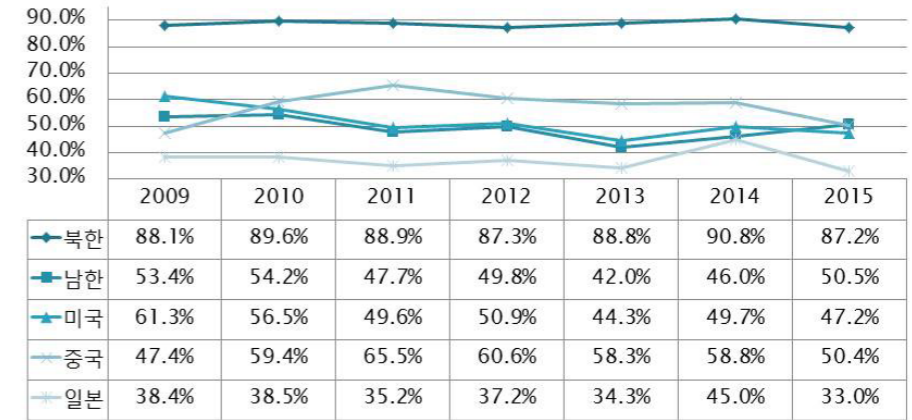
진보층이나 보수층 모두 30% 전후가 찬성하고 50% 이상이 판단 유보

### 지지정당별 5.24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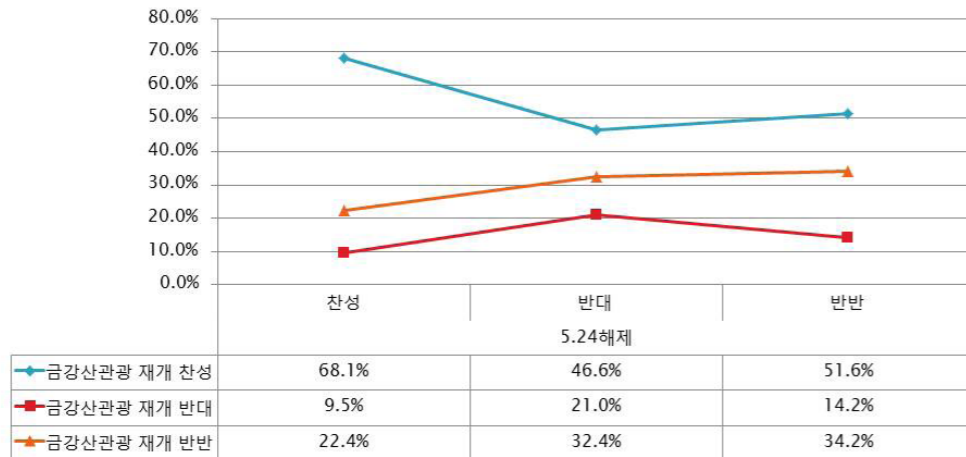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30% 전후가 찬성하고 50% 이상이 판단 유보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크다)



2014년에 비해 북한과 미국 책임이 약간 감소하고 중국과 일본 책임도 각각 8.4%와 12.0% 감소  
반면 남한 책임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에 비해 4.5% 증가 / 대체로 한미중의 책임이 수렴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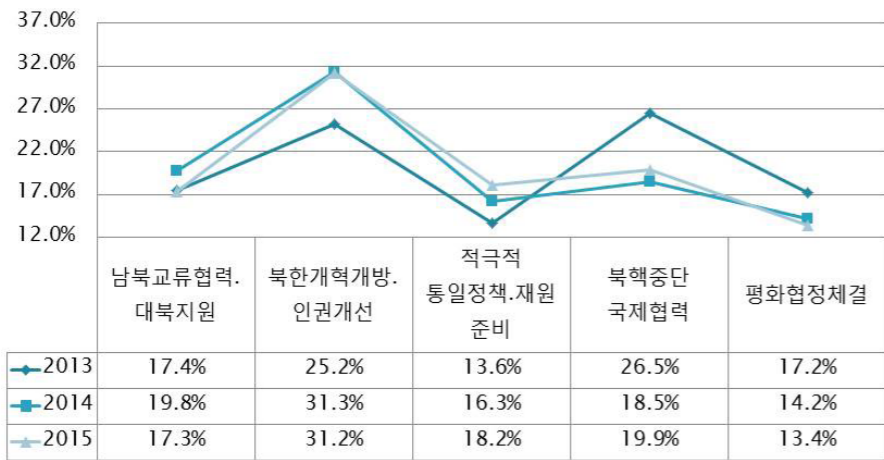
### 5.24 해제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5.24 해제 찬성층의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이 반대층보다 21.5% 높음  
5.24 해제 반대층 중 절반 정도(46.6%)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하여 5.24조치의 유연한 운용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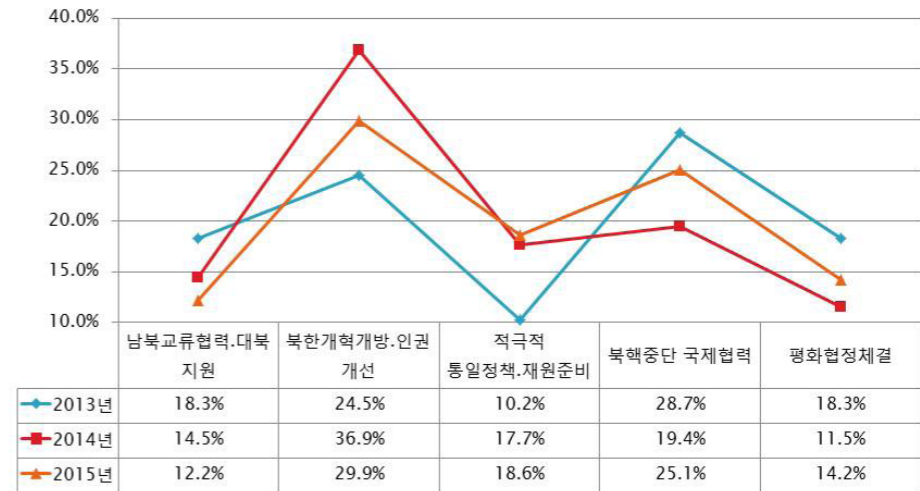
## 3.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 최우선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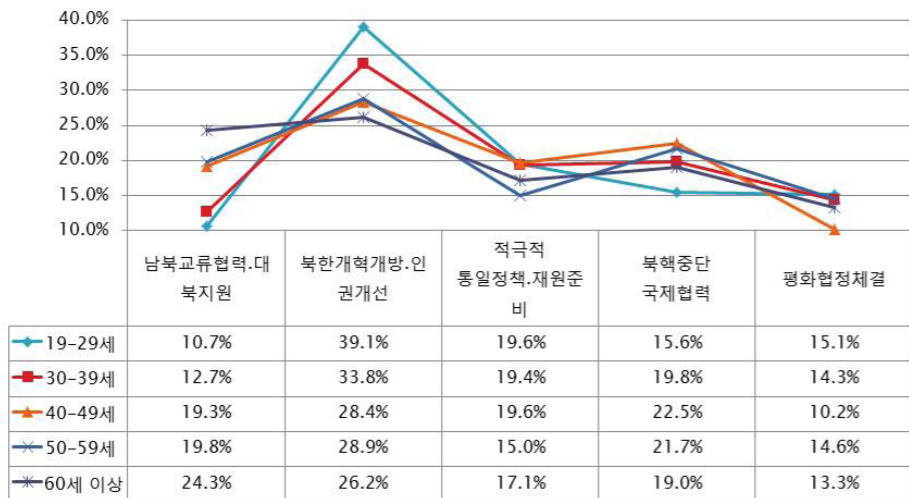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통일준비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우선적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

### 지역별 최우선 대북정책(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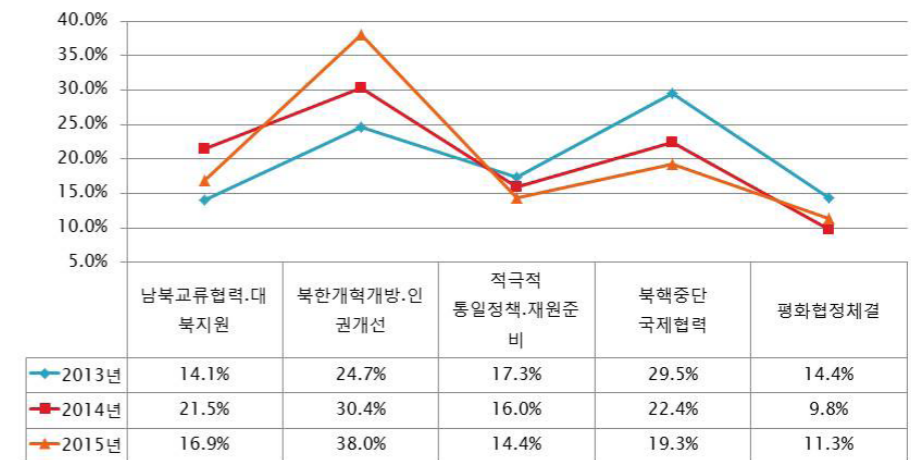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안보문제에서 다소 증가, 북한변화는 감소(-7.0%)

### 연령대별 최우선 대북정책(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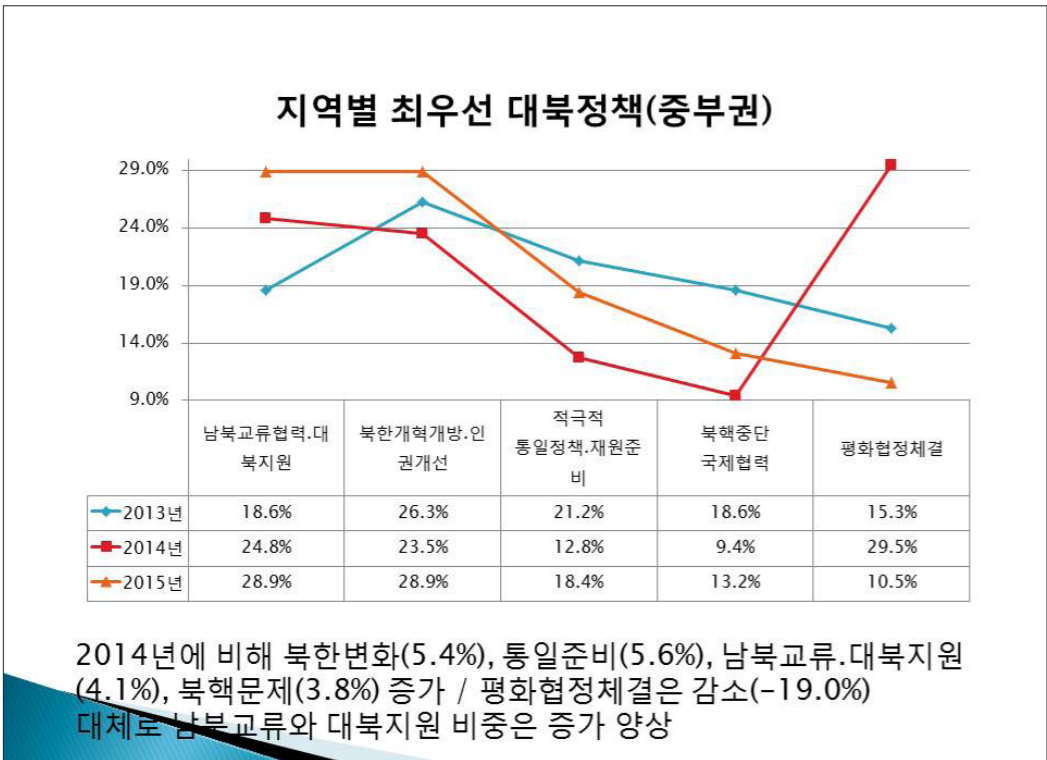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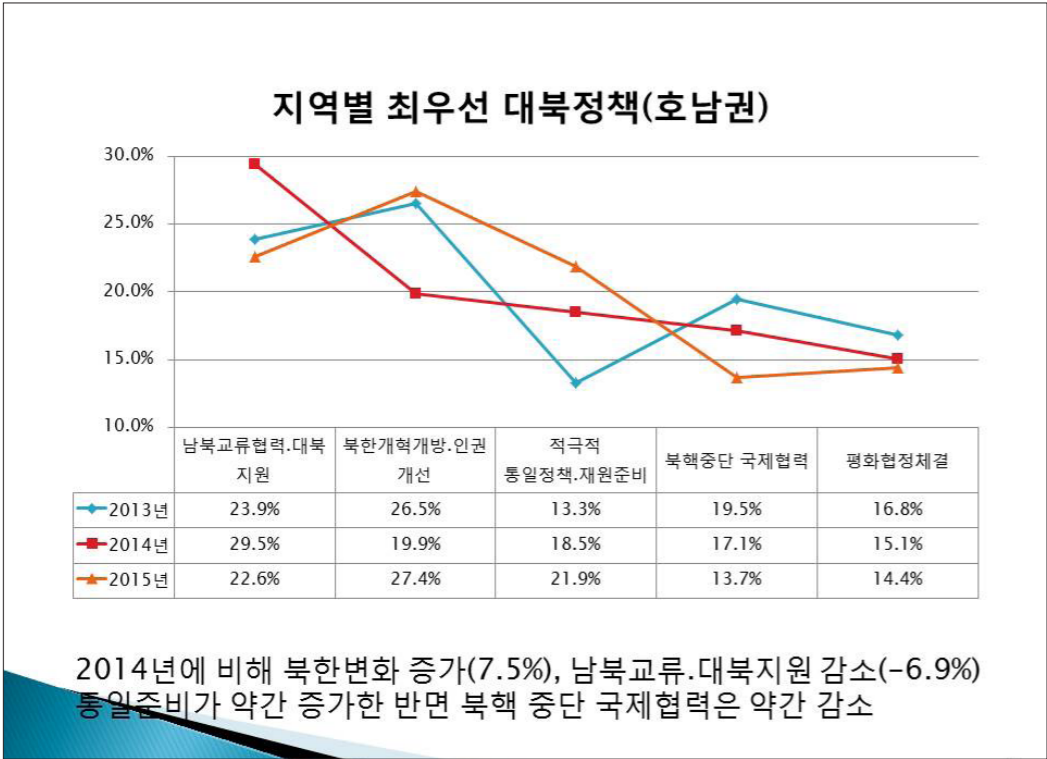


북한변화에서는 20대,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에서는 60대 비중이 높음  
통일준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 지역별 최우선 대북정책(영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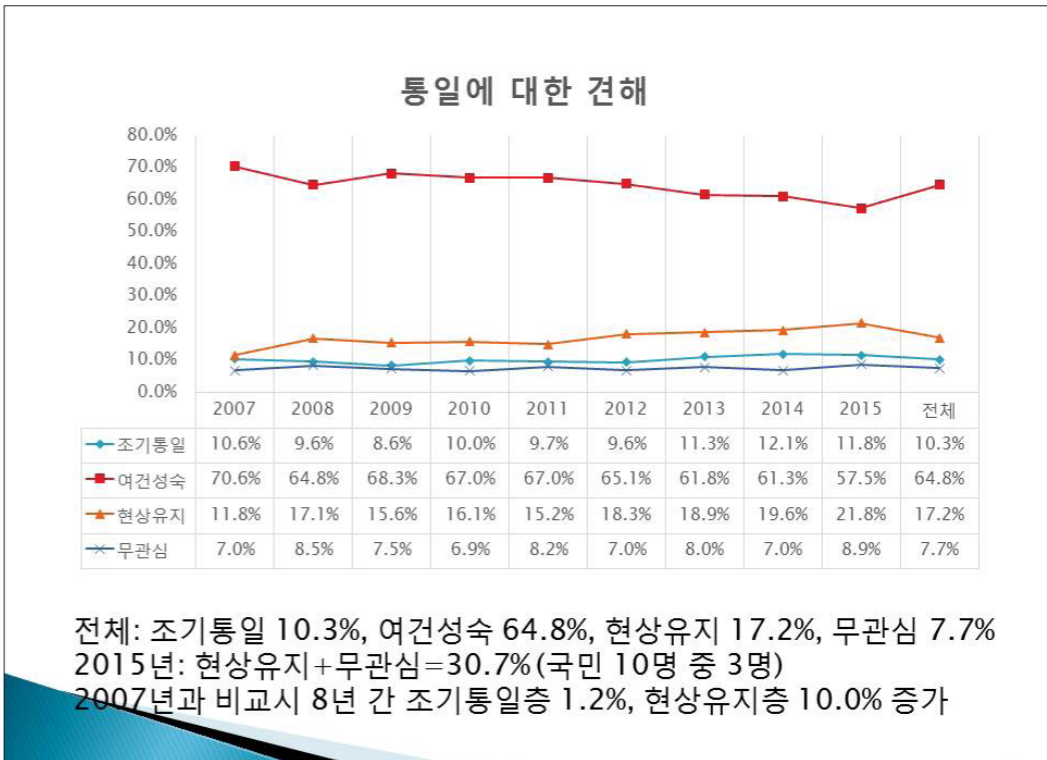


2014년에 비해 북한변화 증가(8.0%), 남북교류.대북지원 감소(-4.6%)  
북한변화는 지속 증가한 반면 북핵 문제는 지속 감소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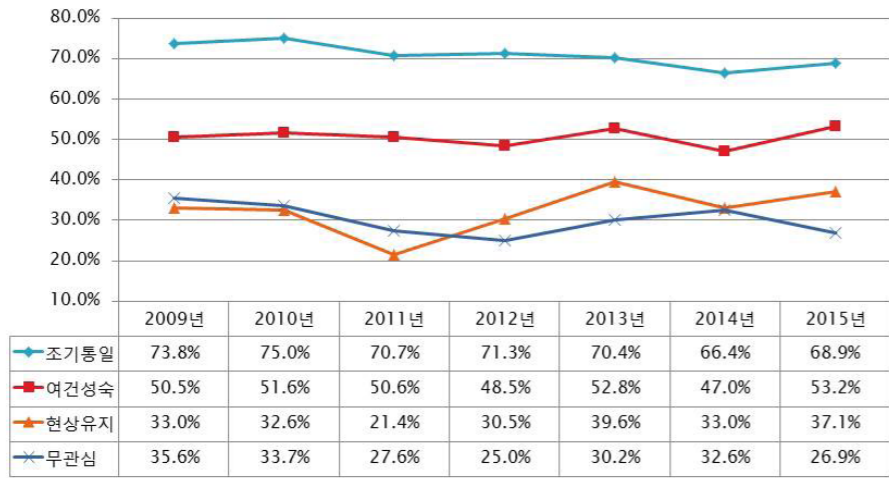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4. 통일 견해별 주요 현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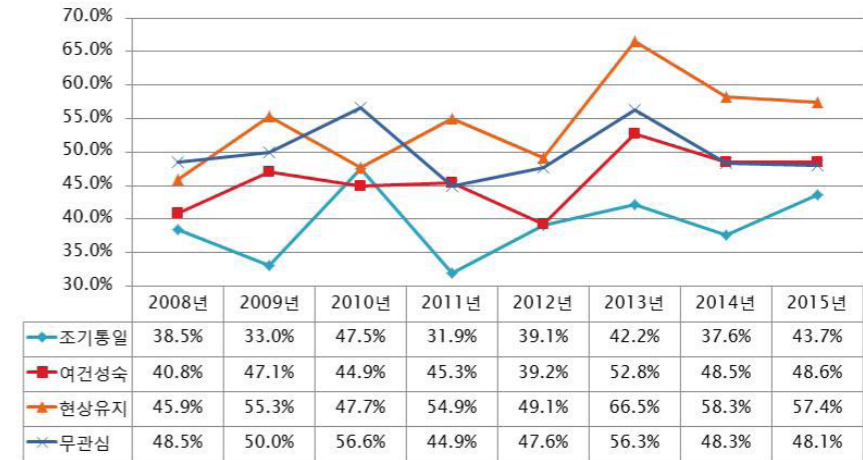


### 통일 견해별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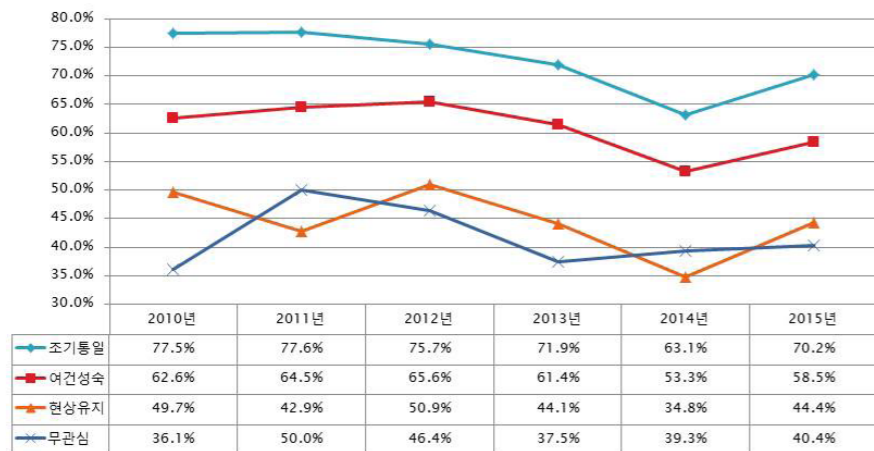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이 70% 전후, 여건성숙층이 50% 전후의 비율을 지속  
현상유지나 무관심층은 20~30%대에서 변동

### 통일 견해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불가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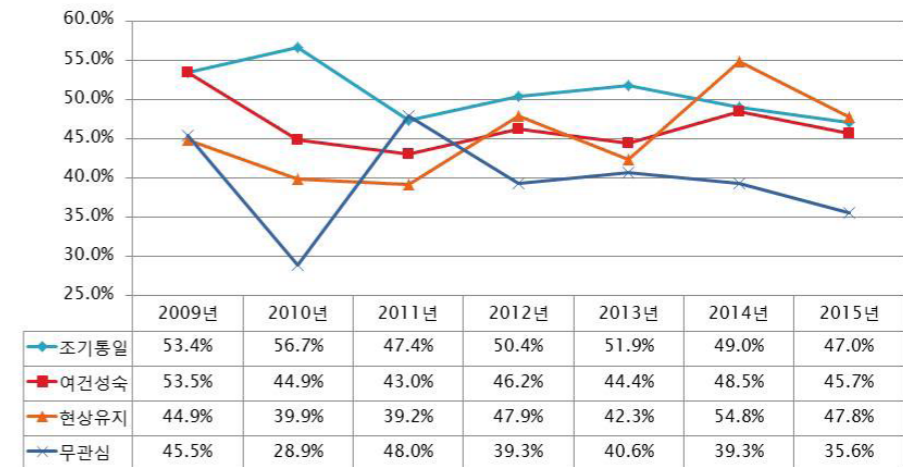
대체적으로 현상유지 층이 60% 전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조기통일 층은 40% 전후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통일 견해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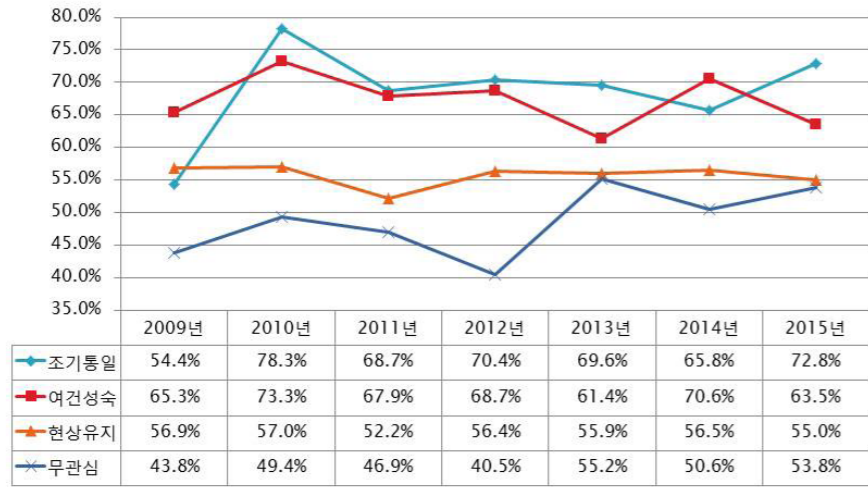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이 70% 전후, 여건성숙층이 60% 전후의 비율을 지속  
현상유지와 무관심층은 30~40%대에서 변동

### 통일 견해별 정부의 뼈라살포 차단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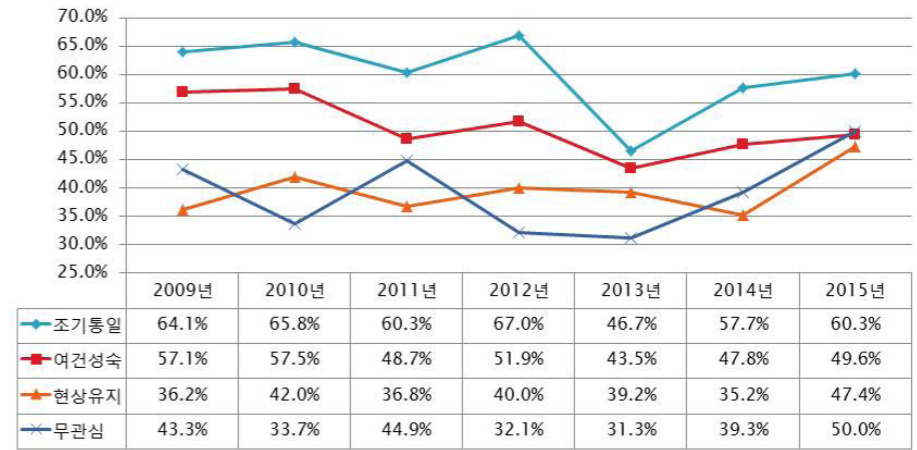
2014년 이후 현상유지 층의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무관심 층을 제외한 세 층이 40% 후반대로 수렴되는 양상

통일 견해별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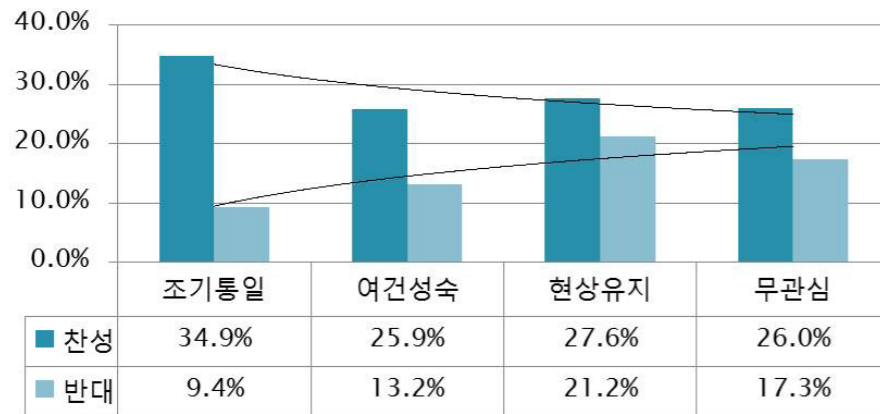
조기통일과 여건성숙 층이 70% 전후의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상유지와 무관심 층은 50%대 이하의 찬성 비율을 보이는 양상

통일 견해별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 책임(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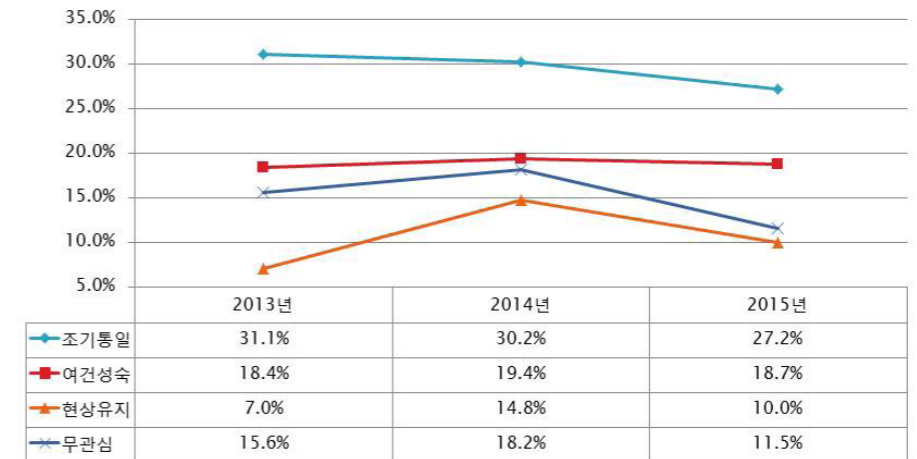
조기통일 층이 가장 높고, 현상유지 층이 (가장) 낮은 양상이나 2015년의 경우 조기통일 층 이외의 층들이 50% 정도로 수렴 양상

통일 견해별 5.24조치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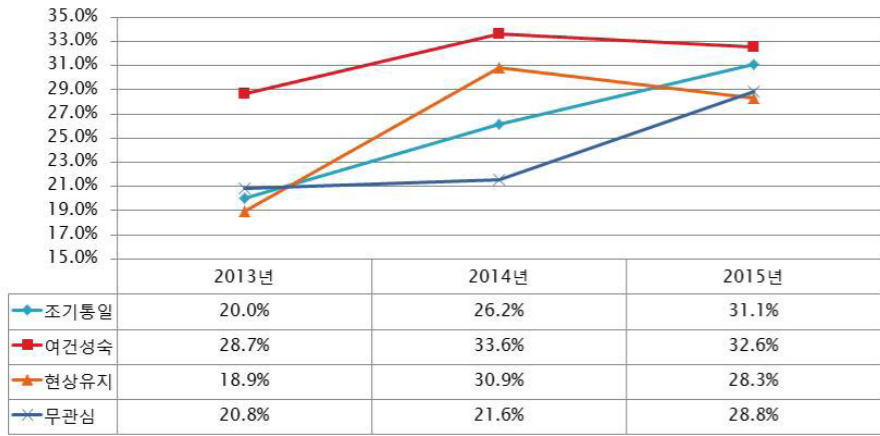
5.24조치 해제 찬성층에서 조기통일 층의 비중이 가장 크고 해제 반대층에서는 현상유지 층의 비중이 가장 큰 양상 (전체 100% 중 찬성과 반대 이외 부분은 반반이라는 입장)

통일 견해별 최우선 대북정책(남북교류.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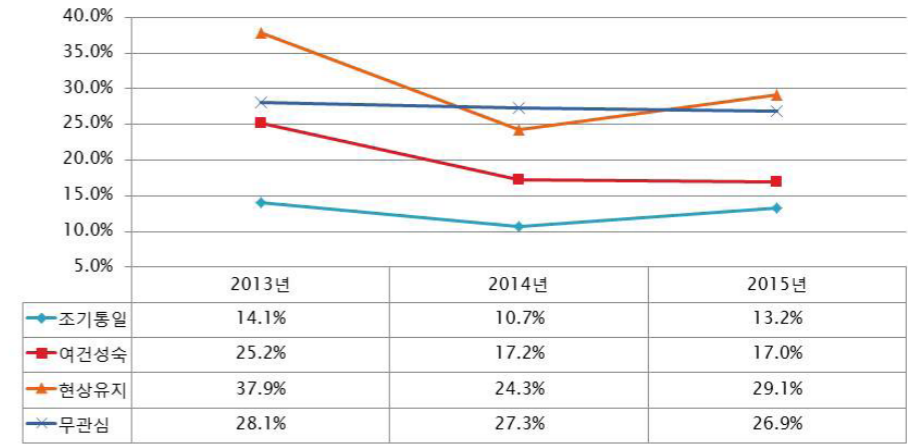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이 가장 높고 현상유지 층이 가장 낮은 추세 지속

### 통일 견해별 최우선 대북정책(북한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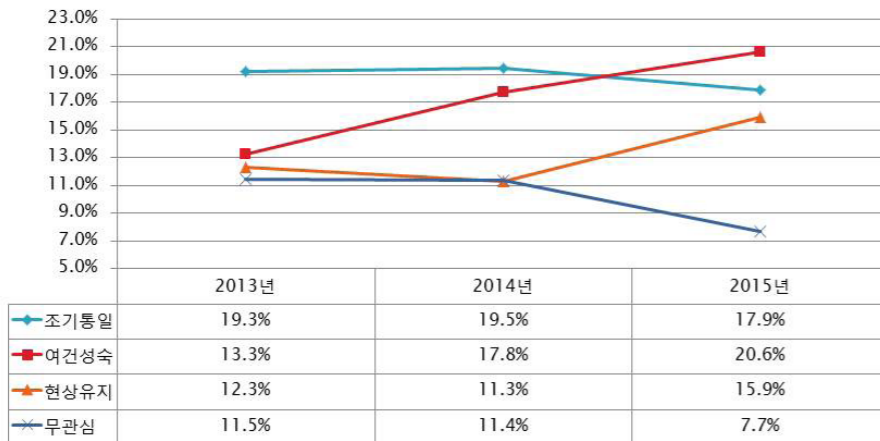
여건성숙 층의 북한 변화(개혁개방과 인권개선) 비율 높은 추세 지속  
2015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렴되는 양상도 나타남

### 통일 견해별 최우선 대북정책(북핵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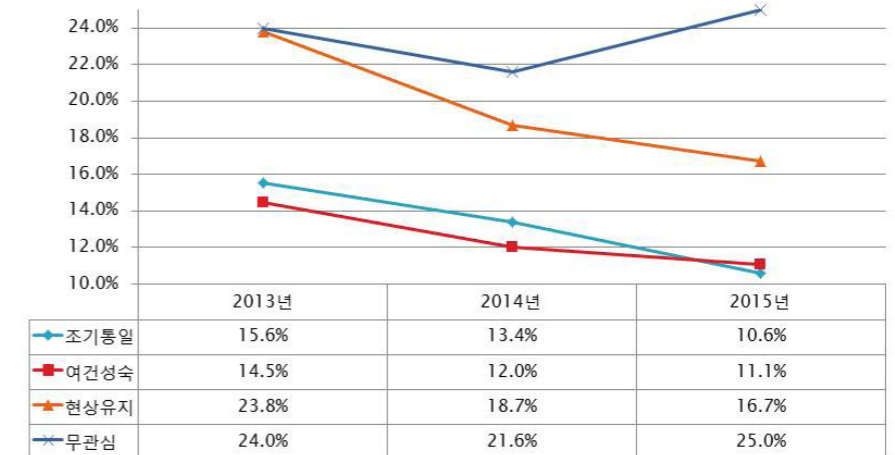
현상유지와 무관심 층이 20%대에서 수렴되는 양상인 반면  
조기통일과 여건성숙 층은 10%대에서 수렴되는 양상

### 통일 견해별 최우선 대북정책(통일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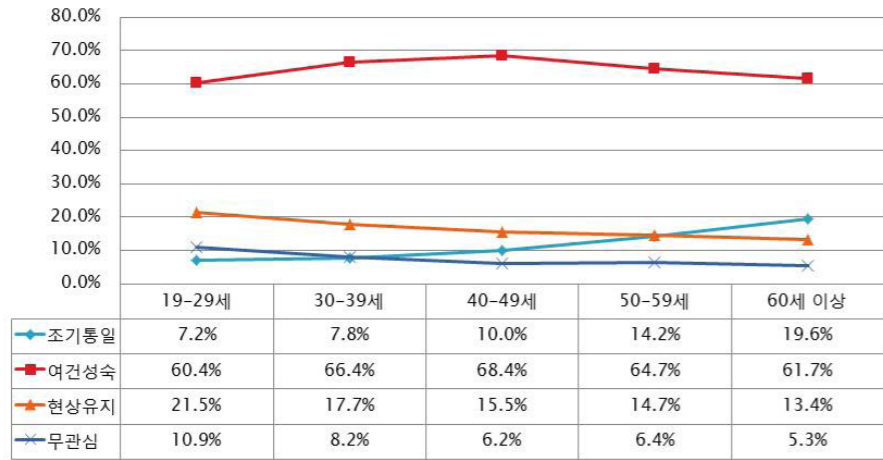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이 상대적으로 큰 비율의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조사에서 여건성숙과 현상유지층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20% 전후에서 조기통일, 여건성숙, 현상유지층이 수렴되는 듯한 양상

### 통일 견해별 최우선 대북정책(평화협정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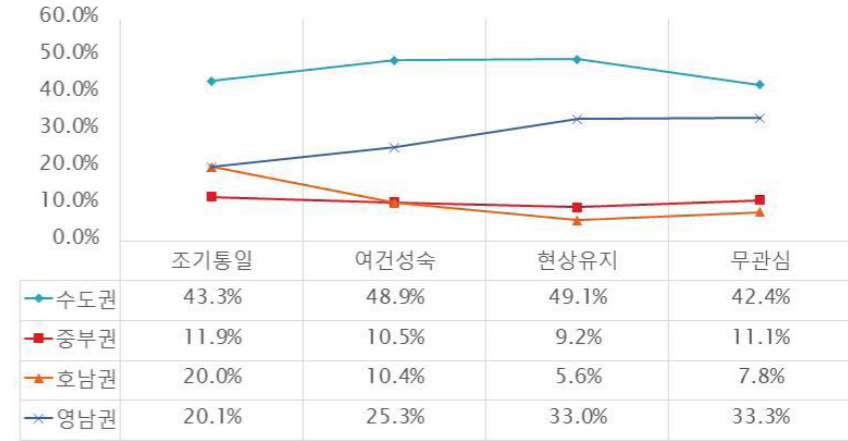
대체로 무관심>현상유지>여건성숙=조기통일 순으로 높음

### 연령대별 통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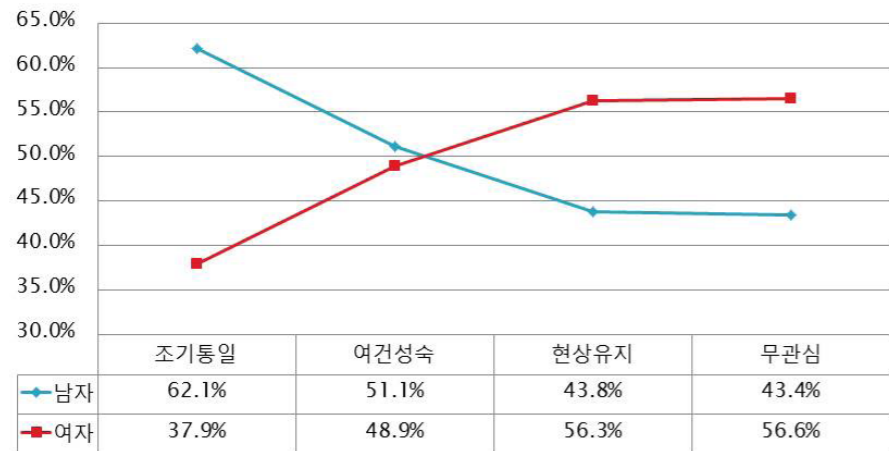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상유지층과 무관심층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다수를 차지

### 지역별 통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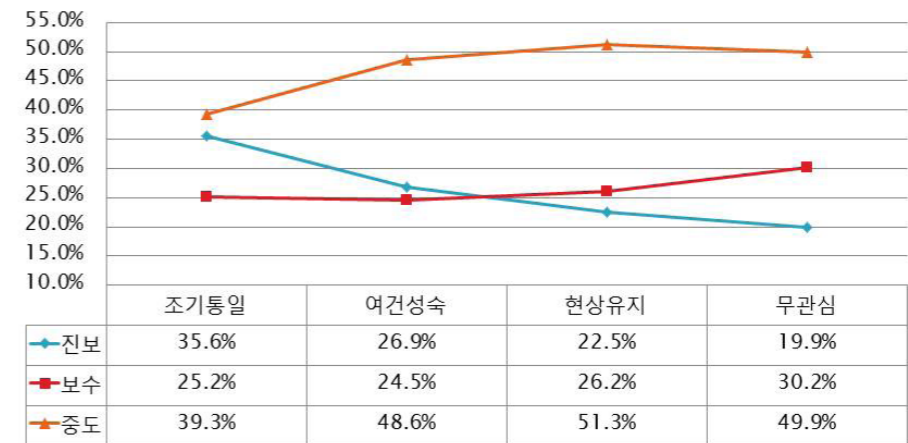
호남권에는 조기통일 층이, 영남권에는 현상유지.무관심층이 다수  
수도권은 여건성숙과 현상유지층이 다수 (\* 강원.제주 제외)

### 성별 통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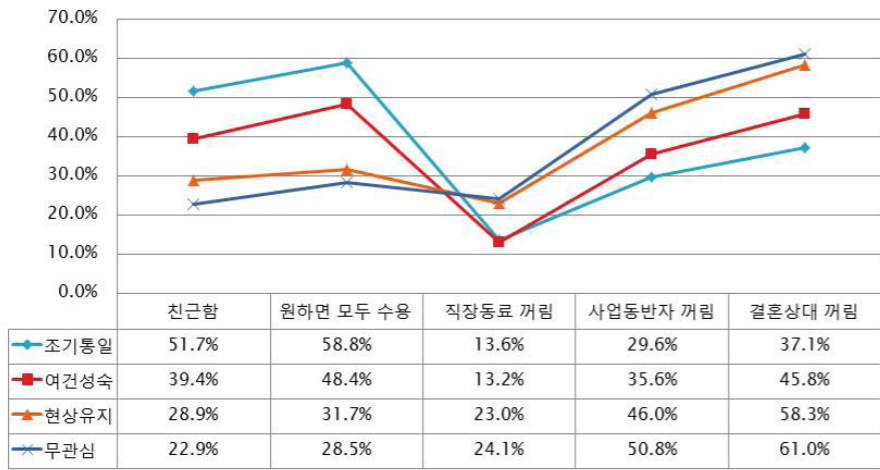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은 남성이, 현상유지와 무관심층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

### 정치성향별 통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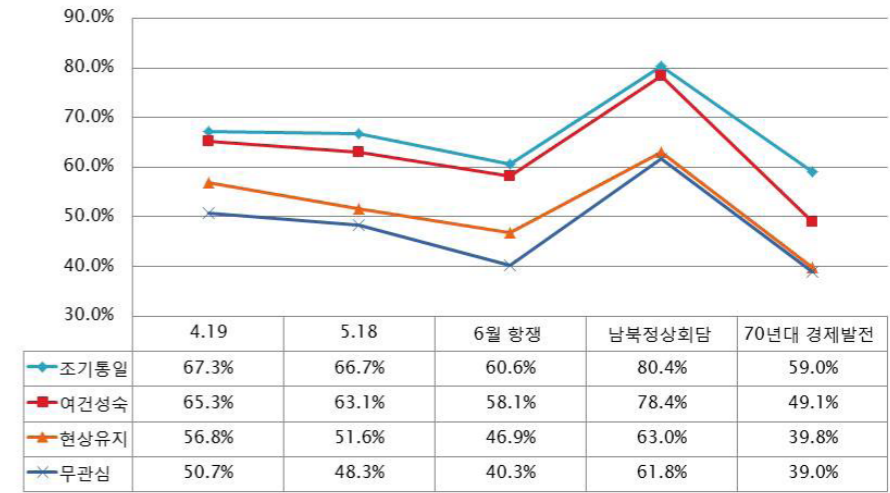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에서는 진보성향이, 현상유지와 무관심층에서는 보수성향이 더 큰 비중을 차지

### 통일 견해별 탈북자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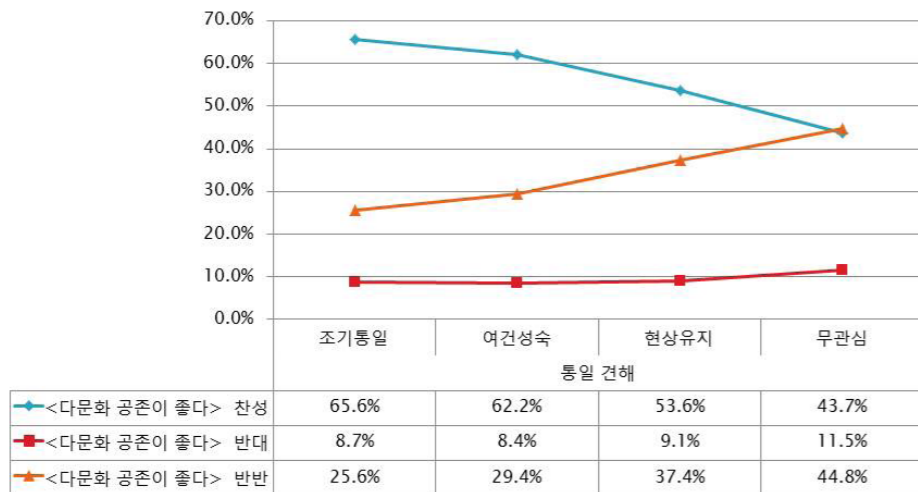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은 탈북자들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수용적  
현상유지나 무관심층은 탈북자들에 대해 보다 폐쇄적이고 배타적

### 통일 견해별 역사인식(긍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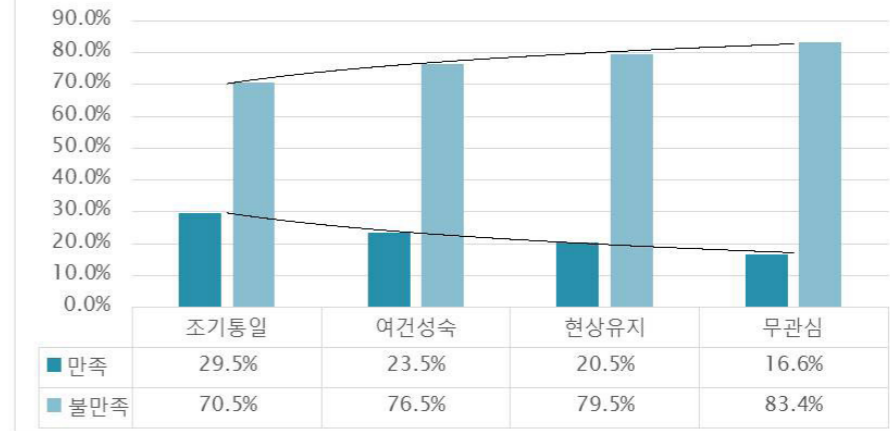
조기통일층은 현상유지나 무관심층에 비해 민주화나 남북관계  
발전 계기, 70년대 경제발전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

### <다문화 공존이 좋다>에 대한 통일 견해별 인식



<다문화 공존이 좋다>에 대한 조기통일층의 찬성 비율이  
현상유지와 무관심층보다 각각 12.0%와 21.9% 높음

### 통일 견해별 경제상황



조기통일층은 현상유지나 무관심층보다 경제상황 만족도가 높음

## [결론-특징]

- 대북정책 만족 비율
  - 2014년에 비해 4.3% 하락, 49.2%를 기록
- 금강산관광 재개
  - 2014년에 비해 찬성이 5.6% 증가, 50% 상회
  - 새누리당과 새정연 지지층 모두 60% 전후 찬성
-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
  - 2014년에 비해 반대 의견이 6.9% 증가
  - 찬성이 45.4%로 반대 21.8%보다 높은 수준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
  - 2007년에 비해 현상유지층이 10.0% 증가
  - 조기통일층과 현상유지나 무관심층 간에 대북정책 현안, 역사인식,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 다문화 포용성 등에서 상당한 인식 차 노정

- 5.24조치 해제
  - 찬성이(27.4%)이 반대(14.7%)보다 2배 정도 높음
  - 60% 정도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 남한 책임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14년에 비해 4.5% 증가, 50.5%를 기록
-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 2014년에 비해 통일준비가 약간 증가

#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요약)

## 1.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 2014년에 비해 4.3% 하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절반 이하를 기록
- 2007년 이후 정부나 대북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경제상황 만족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불만족층보다 높은 추세 지속
- 2007년 이후 정부나 대북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은 추세 지속

## 2. 대북정책 주요 현안 인식

- 통일에 대한 영역별 기여도에서
  -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2014년에 비해 인도지원과 경제협력에서 약간 증가
  - 대체로 남북 정기회담이 가장 높고 인도지원이 가장 낮은 추세 지속
-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대북지원의 기여도에서
  - 2014년 이후 부정적 인식이 다소 감소한 추세를 지속
  -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부정적 인식이 절반 이상인 추세도 지속
- 통일을 위한 시급성에서
  - 2014년에 비해 군사적 긴장해소, 남북회담정례화,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가 약간 증가
  - 군사적 긴장해소와 북한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회담정례화나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시급성은 낮은 수준
- 북한 개혁개방에 대한 남북경협 기여도에서
  - 2014년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4.0% 하락하였으나 긍정적인 인식이 대체로 60.0% 이상을 유지
  -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가 클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은 추세 지속

- 개성공단 유지에서
  -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3.8% 증가하여 50%에 근접
  - 개성공단 유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20% 안팎으로 지속
- 금강산관광 재개에서
  -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5.6% 증가하여 50%를 상회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60% 안팎이 찬성
-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서
  - 2014년에 비해 찬성 의견이 3.7% 감소, 반대 의견이 6.9% 증가
  - 유보층을 제외하면 찬성 의견이 45.4%로 반대의견 21.8%보다 높은 수준 지속
-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서
  - 찬성/반대/반반 모두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
  - 2013년 조사 시작 이후 미미하나 찬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주목
  - 대체로 50% 이상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양상도 지속
- 5.24조치 해제에서
  - 찬성 의견(27.4%)이 반대(14.7%)보다 2배 정도 높지만, 60% 정도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점이 주목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낮고 반대비율이 높은 양상
  - 진보층이나 보수층 모두 30% 안팎이 찬성하고 50% 이상이 판단 유보
  -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모두 30% 안팎이 찬성하고 50% 이상이 판단 유보
  - 5.24 해제 찬성층의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이 반대층보다 21.5% 높음
  - 5.24 해제 반대층 중 절반 정도(46.6%)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하여 5.24조치의 유연한 운용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에서
  - 2014년에 비해 북한과 미국 책임이 약간 감소하고 중국과 일본 책임도 각각 8.4%와 12.0% 감소

- 반면 남한 책임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4년에 비해 4.5% 증가한 50.5%로 절반을 상회
- 대체로 한미중의 책임이 수렴되는 양상

### 3.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

- 2014년에 비해 통일준비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
-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우선적이라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
-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서는 20대, 남북교류와 대북지원에서는 60대 비중이 높음
- 통일준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임

### 4. 통일 견해별 주요 현안 인식

※ 통일에 대한 견해에서

- 전체적으로 조기통일 10.3%, 여건성숙 64.8%, 현상유지 17.2%, 무관심 7.7%
- 2015년 조사의 경우 현상유지+무관심=30.7% (국민 10명 중 3명)
- 2007년과 비교하면 8년 간 조기통일층 1.2%, 현상유지층 10.0% 증가

※ 조기통일층과 현상유지나 무관심층 간에 대북정책 현안에서부터 역사인식,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포용성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함

- 특히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정치성향별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줌(본문 참조)

- 개성공단 유지 찬성 의견은 조기통일층이 70% 안팎, 여건성숙층이 50% 안팎의 비율을 지속하고 현상유지나 무관심층은 20~30%대에서 변동
-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의견은 조기통일층이 70% 안팎, 여건성숙층이 60% 안팎의 비율을 지속한 반면 현상유지와 무관심층은 30~40%대에서 변동
- 북한 핵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불가에 대한 찬성 의견은 대체적으로 현상유지 층이 60% 안팎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조기통일 층은 40% 안팎으로 최저 수준

- 정부의 대북빠라살포 차단에 대한 찬성 의견은 2014년 이후 현상유지 층의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무관심 층을 제외한 세 층이 40% 후반대로 수렴되는 양상
-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 찬성 의견은 조기통일과 여건성숙 층이 70% 안팎의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현상유지와 무관심 층은 50%대 이하 양상
- 5.24조치 해제와 관련하여 5.24조치 해제 찬성층에서 조기통일 층의 비중이 가장 크고 해제 반대층에서는 현상유지 층의 비중이 가장 큰 양상
-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한국의 책임에서 조기통일 층이 가장 높고, 현상유지 층이 (가장) 낮은 양상이나 2015년의 경우 조기통일 층 이외의 층들이 50% 정도로 수렴 양상

통일외교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외교조사

# 주변국 관계 인식

04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주변국 관계 인식

# 주변국 친밀감

주변국 친밀감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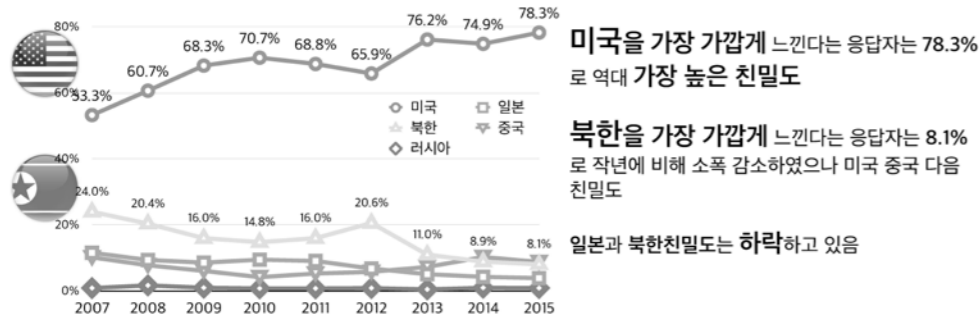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국	1	1	1	1	1	1	1	1	1
일본	3	3	3	3	3	3	4	4	4
북한	2	2	2	2	2	2	2	3	3
중국	4	4	4	4	4	4	3	2	2
러시아	5	5	5	5	5	5	5	5	5

2007-2012년까지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서의 친밀감

2013년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미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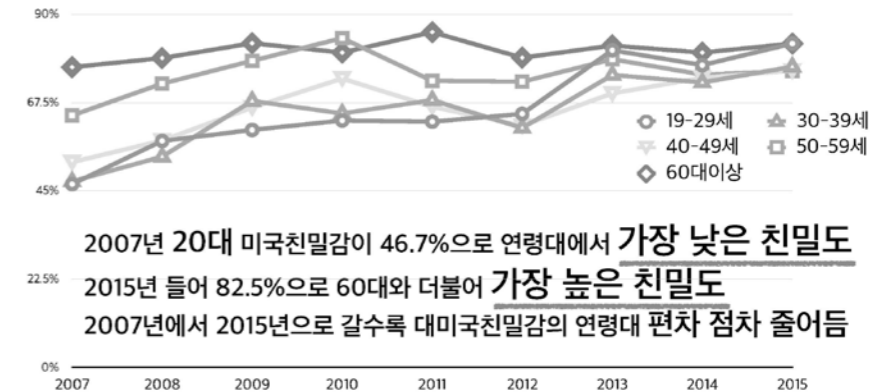
2014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 북한이 세 번째, 일본에 네 번째 (미국>**중국>**북한>일본>러시아)

# 주변국 친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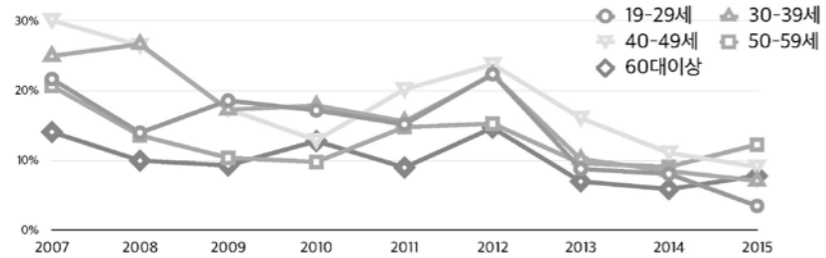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68.6%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3%	3.9%	7.6%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5.5%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3%	8.8%	7.3%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0.9%	0.9%

#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미국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29세	46.7%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30-39세	47.4%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40-49세	52.3%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50-59세	64.2%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60대이상	76.5%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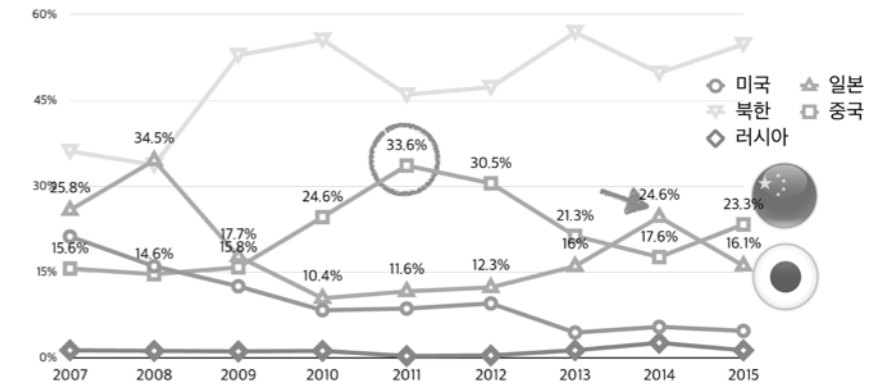
##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북한



2012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대북친밀도는 하락 추세  
20대가 2015년 3.5%으로 가장 낮은 대북 친밀도 50대(12.3%), 40대(9.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9-29세	21.7%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30-39세	25.0%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40-49세	30.1%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50-59세	20.7%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60대이상	14.1%	10.0%	9.3%	12.8%	9.0%	14.7%	7.0%	5.9%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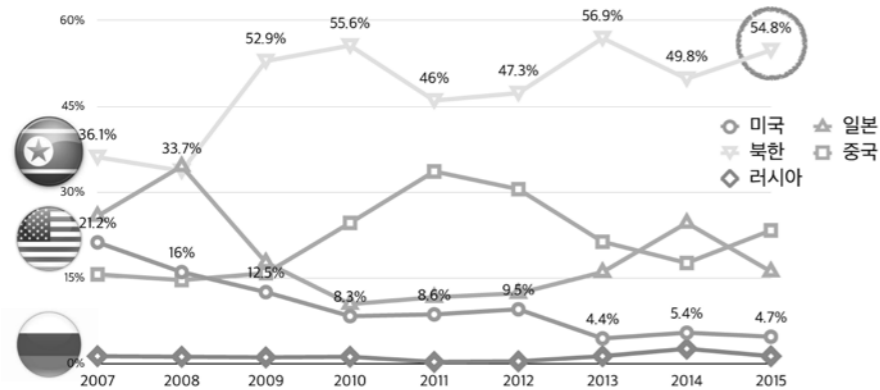
## 평화위협국가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1년 33.6%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위협인식 보였으나 이후 2014년 17.6% 까지 계속 감소 이는 중국이 일본보다 덜 위협적이라는 결과. 2015년 다시 23.3%으로 증가함.

일본의 경우 2010년 응답율이 10.4%로 주변국 가운데 북, 중 다음으로 위협적인 국가였지만 이후 위협인식은 2014년 24.6% 까지 계속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위협 국가가 됨. 올해 다시 감소하여 16.1%에 이릅니다.

## 평화위협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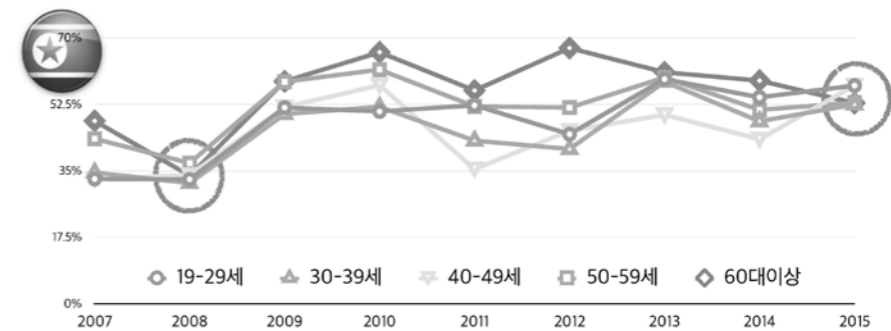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5년 54.8%로 미일북중러 중에 가장 높음  
2009년(2차 핵실험), 2013년(3차 핵실험)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함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는 4.7%로 러시아(1.3%) 다음으로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한국인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에 주목

## 평화위협국가-연령대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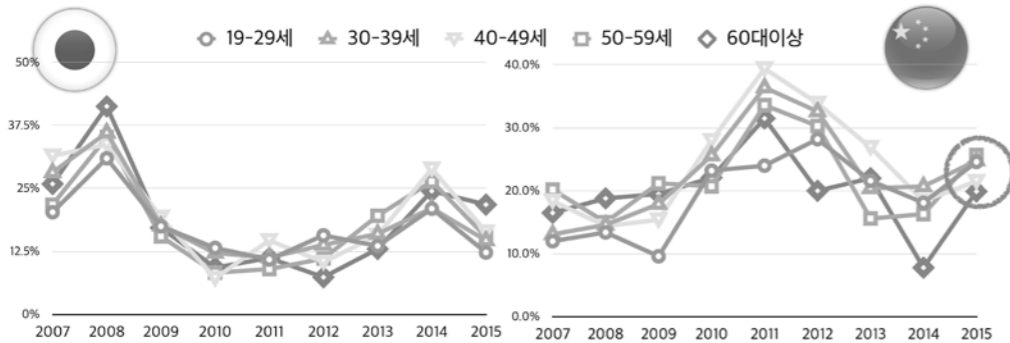
60대>50대>20대>30대>40대 순으로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 (평균)

2007년 북한에 대해 40대 다음으로 가장 낮은 위협인식을 보였던 20대는  
2015년 40대와 함께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

2008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수렴현상 => 다시 확산 => 2015년 다시 수렴

전 연령대에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존재함

# 평화위협국가-연령대 일본 중국



세대별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음

40대>30대>50대>60대>20대 순의 위협국가인식

2015년 위협국가 인식이 감소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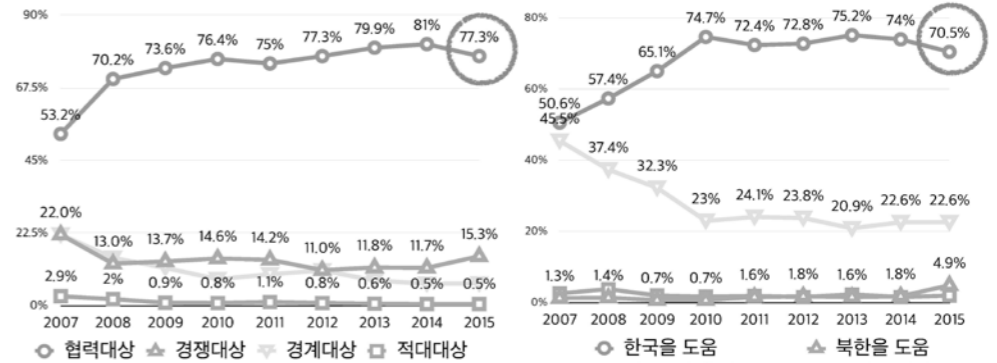
북한에 비해 중국의 위협인식은 훨씬 낮으나 2015년 전 연령대 위협인식의 수렴현상

일본의 우경화, 보통국가 지향(집단지위권 법안 처리)과 군사화 허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있어 현실적인 판단이 존재

2015년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위협인식은 연령대별로 큰 편차가 없음

즉 미일동맹 강화, 북핵위협 상시,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되는 국가로 단정짓지 않는 판단

# 대미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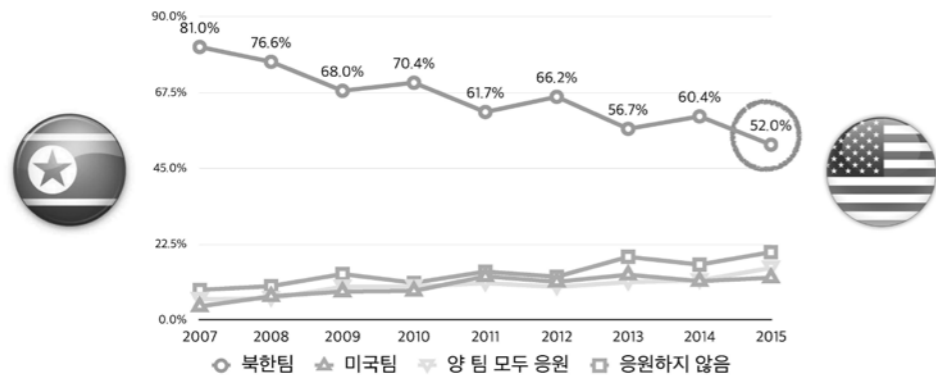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 77.3% (2014년 81%)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70.5%로 지배적

대미이미지 긍정적, 동맹국, 협력자로 정형화 쉽게 변하지 않는 항상성

2010년 이후 특별한 변동 없는 높은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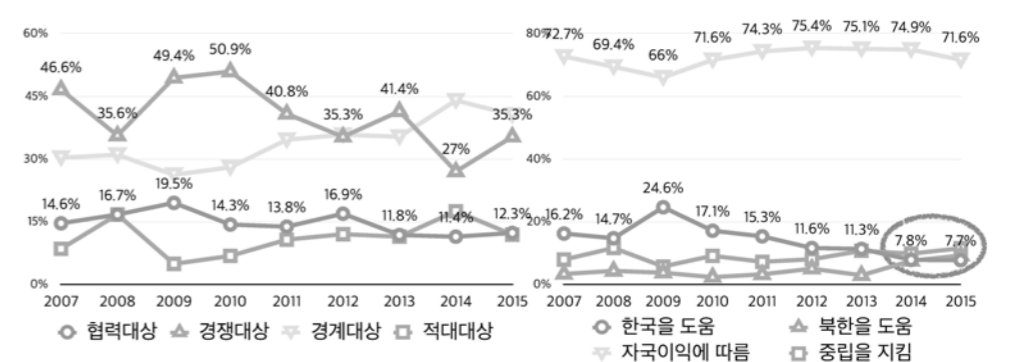
# 월드컵 경기응원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2015년 52.0%로 최근 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대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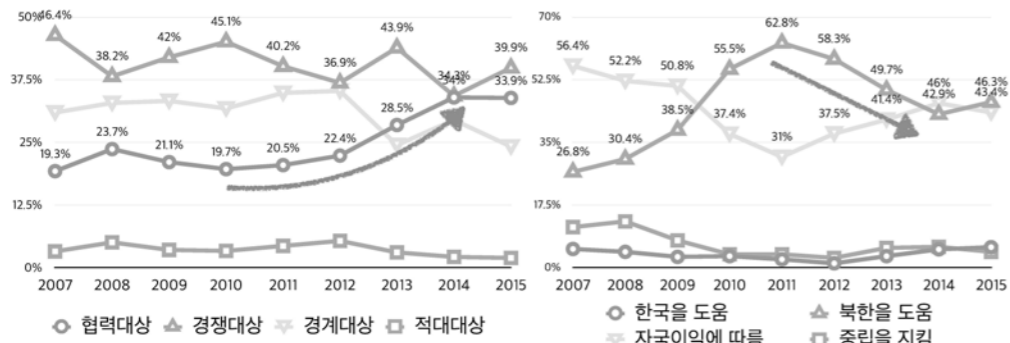
협력대상 판단은 12.3%에 그친 반면 경쟁대상은 35.3%, 경계대상이라는 판단은 40.6% 즉 협력대상보다는 경계와 경쟁대상 인식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2015년 7.7%로 매우 낮음,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71.6%로 주변국 중 가장 높음

미,중,러와 비교, 협력대상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이미지가 가장 높음

박근혜정부 들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처음으로 1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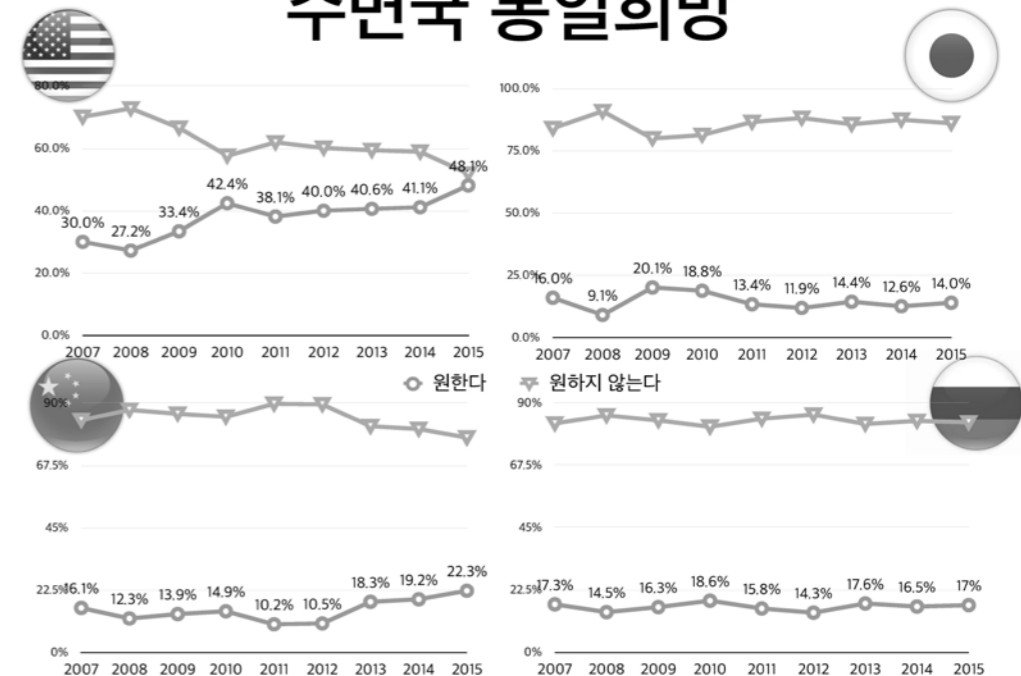
## 대중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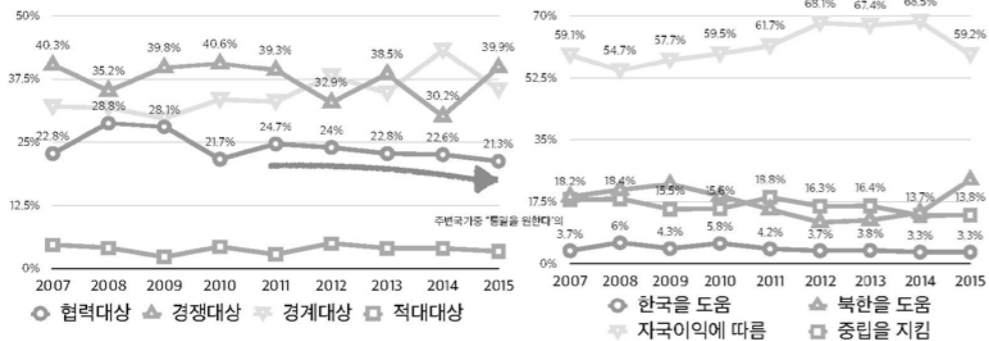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39.9%로 가장 높으며, 협력대상이미지가 33.9%, 경계대상 이미지가 24.2%, 협력, 경쟁, 경계의 복합적 이미지 2012년 이후 협력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 경계와 적대이미지가 하락

“북한을 도울 것”(46.3%) 혹은 “자국이익에 따른다”(43.4%)가 높은 응답률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것이라는 인식 “북한을 도울 것” 응답이 2011년 62.8%에서 2014년 42.9%까지 감소 but 2015년 소폭 증가

## 주변국 통일희망



## 대러인식



러시아에 대해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가 우세 협력대상 이미지는 2010년 이래 20% 초반 지속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 응답 지배적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 또한 미, 중, 일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의 평균 응답률도 높다.

## 주변국 통일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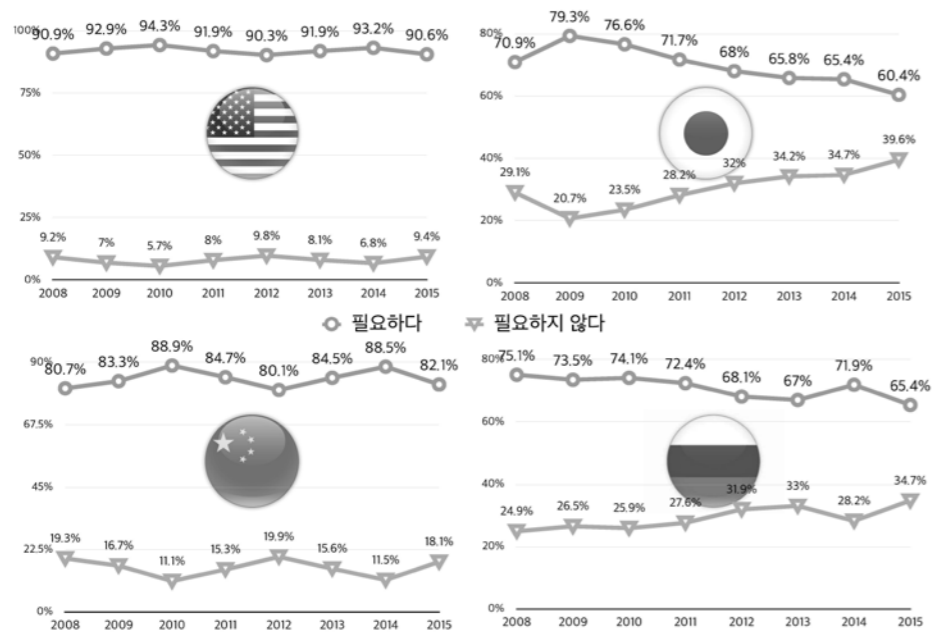
	통일을 원함		통일을 원하지 않음	
	2015	2007-2015	2015	2007-2015
미국	48.1%	37.9%	51.9%	62.1%
일본	14.0%	14.5%	86.0%	85.5%
중국	22.3%	15.3%	77.6%	84.7%
러시아	17.0%	16.5%	83.0%	83.6%

주변국 중 “통일을 원한다”의 2015년 응답률이 높은 국가 순서는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통일을 원한다”의 2007-2015 평균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 > 러 > 중 >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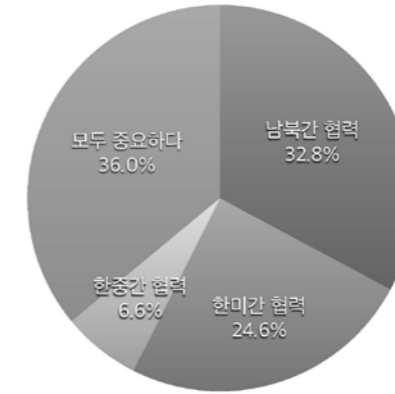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15년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 > 러 > 중 > 미**이며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07-2015 평균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 > 중 > 러 > 미**

주변국 중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

## 통일협조 필요성



##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통일을 위해 '남북한 협력', '한중간 협력'과 '한미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 가장 높음

'남북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33.2%, '한미간 협력'이라는 응답은 23.8%

'한중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4%로 가장 낮음

모두 중요 (36.6%) VS '남북한 협력', '한중간 협력', '한미간 협력'(all 63.4%)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지배적

## 통일협조 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15	2007-2015	2015	2007-2015
미국	90.6%	92.0%	9.4%	8.0%
일본	60.4%	69.7%	39.6%	30.3%
중국	82.1%	84.1%	18.1%	15.9%
러시아	65.4%	70.9%	34.7%	29.1%

주변국 중 2015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2007-2015년 평균 응답률은 **미국>중국>러시아>일본** 순서

주변국 중 2015년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러시아>중국>미국**  
2007-2015년 평균 응답률은 **일본>러시아>중국>미국**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인식

## 2015 주변국 관계 인식 (요약)

### 1. 주변국 친밀감

- 2015년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역대 최고 수준임.
  -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주변국에 대한 조사임.
  -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78.3%로 역대 가장 높은 친밀도를 보임.
  -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8.1%로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국, 중국 다음의 친밀도를 보임.
- 조사가 시작된 2007년도 이후 전반적인 대일친밀도와 대북친밀도는 하락한다는 점에 주목 (북한의 경우 2012년 제외).
  -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도 하락은 김정은 정권 이후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공포 정치 지속,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영향을 미쳤을 것임.
- 주변국 친밀감을 국가별 선호도로 분석하였을 때 중국과 일본의 이미지에 변화가 감지됨.
  - 2007-2012년까지 주변국 친밀감의 선호도는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음.
  - 2013년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의 선호도가 바뀌었으며 2014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 북한이 세 번째, 일본에 네 번째가 됨.
  - 즉 2007-2012년 역대 네 번째 선호도였던 중국의 친밀감이 2014, 2015년 들어 두 번째로 친밀감이 높은 국가가 되었고 같은 기간 세 번째 선호도를 유지했던 일본의 선호도는 2013년 이래로 네 번째 국가가 되면서 그 친밀도가 하락함.
  - 중국에 대한 호감도 증가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주변국은 조사 이래로 계속 미국이며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증가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들어 대미친밀감은 처음으로 70%를 넘었고 2015년 78%를 넘음.
  - 중국에 대한 친밀도는 올해 다소 하락하긴 하였으나 2014년에 이어 올해도 8.8%로 역대 두 번째 높은 친밀도를 보임.

- 한미동맹 공고화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심화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음.
- 연령대별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에서 2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됨.
  - 세대별로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따로 살펴보았을 때, 2007년 20대의 대미친밀감이 46.7%으로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친밀도를 나타냈지만 2015년 들어 82.5%으로 60대 이상과 함께 가장 높은 대미친밀도를 보임.
  - 또 하나의 특징은 2007년에서 2015년으로 갈수록 대미친밀도의 세대 편차가 점차 줄어들음. 이는 한국인들의 미국친밀감이 세대적 특징을 점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냄.
  - 북한의 대한 친밀도의 경우 2012년 이래 대부분의 세대에서 하락 추세를 보임.
  - 2015년 20대가 3.5%으로 가장 낮은 친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50대(12.3%), 40대가 (9.1%) 상대적으로 높은 친밀도를 보임.

### 2. 평화위협국가

- 한국인은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함.
  - 주변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임.
-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2015년 54.8%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중에 가장 높음.
  - 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함.
  -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은 200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15년은 4.7%로 러시아(1.3%) 다음으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인식함.
- 2014년에 이어 2015년도 한국인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의 많은 변화가 있음.
  -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2011년 33.6%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위협인식을 보였으나 이후 2014년 17.6% 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5년 다시 23.3%로 증가함. 이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일본의 경우 2010년 응답률이 10.4%로 주변국 가운데 북한과 중국 다음으로 위협적인 국가였지만 이후 위협인식은 2014년 24.6%까지 계속 증가하여 두 번째로 높은 위협 국가가 됨. 올해 다시 감소하여 16.1%에 이룸.

- 한국인들의 대중 위협인식이 2011년 이래 감소추세에서 다시 증가한 것은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2008.05) 관계 아래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의 영향으로 우호적 대중인식이 작용하였음에도 중국 군사력의 증강, 방공식별구역 논란(2013.11), 영토분쟁을 통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군사안보와 경제사회문화 축에서 다층적인 이미지가 존재함.
-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2015년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도 군사, 안보, 북핵문제 있어 충분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2015년 들어 위협국가 인식이 하락한 일본의 경우, 아베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2013.12.26), 아베정권의 우익성향, 보통국가 지향(집단지위권 법안 처리),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으로 급격히 냉각된 한일관계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있어 현실적인 판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즉 미일동맹 강화, 북핵위험 상시, 중국부상 견제 측면에서 일본을 한반도의 평화를 직접 위협하는 국가로 보지 않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 것.

- 20대의 대북위협인식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세대별 대북, 대중 인식에도 주목할 점이 관찰됨.
  - 세대별 평균으로 보았을 때 60대, 5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북한을 위협국가로 인식함.
  - 대북 위협인식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2008년 수렴현상이 존재하였고 그 이후 다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가 다시 2015년 수렴 되는 현상. 이는 한국인은 세대를 초월하여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줌.
  - 세대별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비슷한 현상이 대중국위협인식에도 나타남. 북한에 비해 위협인식은 훨씬 낮으나 2015년 세대에 관계없이 응답률의 수렴현상이 나타남. 즉 2015년 한국인의 중국위협인식에는 세대별로 큰 차이가 없음.

### 3. 월드컵 경기응원

-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지속해서 하락
  - '북한팀을 응원하겠다'는 응답률이 2015년 52.0%로 최근 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

### 4. 주변국 국가이미지

- 한국인은 미국을 가장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며 한국인에게 적대 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임.
  - 2015년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이지만 적대국가 이미지는 그 반대인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순임. (2007-2015 전체 평균응답률도 동일)
- 대다수 한국인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함
  - 2015년 올해 미국이 협력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77.3%로 작년 2014년 81.0%에 비해 다소 낮아지긴 하였으나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특별히 변동을 보이지 않는 항상성을 유지
  - 이는 미국이 전통적인 한국의 우방이며, 협력자, 동맹자라는 강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전 이명박 정부 때 보다 박근혜 정부에 미국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지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한국을 도울 것이다' 라는 의견이 70.5%로 지배적임.
  - 이 응답률 또한 2010년 이후 특별한 변동 없이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음.
  -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는 의견도 22.6%임.
- 한국인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계와 경쟁대상으로 인식함.
  - 협력대상이라는 판단은 12.3%에 그친 반면 경쟁대상은 35.3%, 경계대상이라는 판단은 40.6%에 이룸. 즉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계와 경쟁대상으로 일본을 인식함.
  -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협력대상 이미지가 가장 낮고 적대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음.
  -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문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화 노력, 엔저정책 등은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된 원인으로 작용함.
  - 특히 2014년 기준 경쟁대상과 경계대상 이미지의 역전이 일어남. 즉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일본에 대해 경쟁의식이 경계의식보다 우위였으나 2014년 처음으로 경계대상 인식이 44.0%로 경쟁인식 27.0%를 넘어서게 됨. 같은 기간 협력대상 이미지는 큰 변동이 없음.

- 박근혜 정부 들어 악화된 한일관계 악화의 영향이 국민의 대일이미지에 반영되고 있음.
- 한국인은 일본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한 결정을 할 것이라 판단.
  -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2015년 7.7%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는 71.6%로 주변국 중 가장 높게 나옴.
  - 박근혜 정부 들어 '한국을 도울 것이다'는 처음으로 10%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한일관계를 협력적이라기보다 경계 혹은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미지는 복잡적임.
  -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문제는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 인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
  - 2015년의 결과로 볼 때, 우리 국민은 중국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39.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협력대상 이미지가 33.9%, 경계대상 이미지가 24.2%, 적대대상 이미지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어 있기보다 협력·경쟁·경계의 이미지가 복잡적.
  - 사실 대중국이미지는 2012년 전까지는 정형화된 측면이 존재. 즉 경쟁과 경계의 대상이 우세하였고 협력대상이미지는 20%전후였음. 하지만 2012년 이후 협력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경계와 적대 이미지가 하락함.
  - 이는 앞서 2011년 이후 중국의 위협인식 감소, 대중 친밀감 증가, 한·중 상호 의존성 심화와의 관계가 있음.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임.
- 한국인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 판단.
  -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의 태도에 대한 응답에도 변화가 감지됨.
  - 전체적으로는 '북한을 돕는다'(46.3%) 혹은 '자국이익에 따른다'(43.4%)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 즉 한국인은 중국이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임.
  -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2011년 62.8%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는 응답이 2011년 31.0%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단 '북한을 도울 것이다'의 응답이 2014년 42.9%에서 2015년 46.3%로 다시 소폭 증가한 점은 차후 북·중 관계 변화에 대한 신중한 관찰이 요구됨.
-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쟁과 경계의 이미지가 우세
  - 우리나라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 경쟁과 경계의 대상의 이미지가 다소 강한 것으로 나타남.
  - 협력대상 이미지는 20% 초반대를 2010년 이후 지속함.
  - 러시아 국가 이미지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임.
  - 러시아 국가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향후 북·러, 한·러 관계의 변화가 있을 경우 향후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달라 질 수 있음.
-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임.
  - 이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이며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평균 응답률도 높음.

## 5. 주변국 통일희망

- 주변국가 중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함.
  -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한다'의 2015년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48.1%), 중국(22.3%), 러시아(17.0%), 일본(14%) 임.
  -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한다'의 2007-2015 평균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37.9%), 러시아(16.5%), 중국(15.3%), 일본(14.5%) 임.
  -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15년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86.0%), 러시아(83.0%), 중국(77.6%), 미국(51.9%)이며 주변국가 중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의 2007-2015 평균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85.5%), 중국(84.7%), 러시아(83.6%), 미국(62.1%) 임.
  - 주변국가 중 통일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는 일본임.
  -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6. 통일협조 필요성

-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인식
  - “통일을 위해서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 즉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
  - 2015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았음.
  -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5년 82.1%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84.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약 70%에 이르렀으나 2014년, 2015년에는 각각 65.4%, 60.4%의 응답자들만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20.7% 이후 2014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2015년에는 39.6%에 이룸.
-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주변국 중 2015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90.6%), 중국(82.1%), 러시아(65.4%), 일본(60.4%) 임.
  - 주변국 중 2007-2015년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균응답률은 미국(92.0%), 중국(84.1%), 러시아(70.9%), 일본(69.7%) 순서임.
  - 주변국 중 2015년 ‘도움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일본(39.6%), 러시아(34.7%), 중국(18.1%), 미국(9.4%) 임.
  - 주변국 중 2007-2015년 ‘도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나라의 평균응답률은 일본(30.3%), 러시아(29.1%), 중국(15.9%), 미국(8.0%) 순서로 나타남.

## 7. 남북관계와 한·미·중 공조

- ‘남북한 협력’, ‘한·중간 협력’과 ‘한·미간 협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다수임.
  - 한국사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라는 이분법적인 선호도로 인한 극심한 남남 갈등 현상에 직면해 왔으며 이는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바로 ‘한·미간 협력’과 ‘한중간 협력’ 문제임
  - 한국에게 이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따라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개별 선호도가 있을 수 있음.
  - 지금까지 통일의식 조사에서 ‘남북관계’와 ‘한·미공조’ 두 가지의 틀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라면 중국의 부상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2015년 처음으로 ‘한·중간의 협력’을 포함한 조사를 시행함.
  -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한 협력’, ‘한·중간 협력’과 ‘한·미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 가장 높음.
  - ‘남북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33.2%, ‘한·미간 협력’이라는 응답은 23.8%로 나타남. ‘한중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6.4%로 가장 낮음.
  - ‘남북한 협력’, ‘한·중간 협력’과 ‘한·미간 협력’이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에도 여전히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63.4%로 한국사회에 지배적임을 보여줌.
  - ‘남북한 협력’을 ‘한·미간 협력’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 잠재적 사회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음.
  - ‘한·중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6.6%로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음.

통일인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인식조사

05

#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김병조(국방대학교)

[발표5]

##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김병조(국방대학교)

올해 2015년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산업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에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으로까지 언급되는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회변동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눈부신 성공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하였다.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단순화시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한국인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바뀌었는데, 남북분단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단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상태가 정상적이라거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대신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에 대해 논의하며,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통일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고, 정부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 조금 구체적인 수준에서 통일인식을 알아보면 개인별로 편차가 큼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 상대자인 북한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 역시 매우 다르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분출되는 '남남갈등'은 우리 국민내부에 통일인식 격차가 크게 존재함을 증명하는 대표적이 예라 할 수 있다.

첫머리에서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는 생활세계가 크게 다른 여러 세대가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분석이 이를 웅변해 준다. 이에 이 글은 '세대(gener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인식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통일인식의 세대별 격차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 통일의식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정부 통일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연초에 '통일대박론'을 제시하고,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세대별로 통일인식의 특성

을 고려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효과가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한편, 세대별 통일인식을 비교한 다음에는, 세대내 존재하는 통일인식의 분화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같은 세대로 할지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통일인식이 다를 것이 예상된다. 통일인식과 관련해서 세대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통일정책 추진 면에서도 세대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통일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대내 분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성, 강도, 속도 등을 고려해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쟁점별로 나타나는 세대별 통일인식의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필요성과 통일대박론, 통일에 대한 입장, 통일이유와 북한에 대한 인식 등에서 세대별 인식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같은 세대 내에서 통일인식에 분화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내 통일인식의 분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일필요성과 통일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통일인식 유형을 구성해서, 통일인식 유형이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그리고 이념성향별로 어느 정도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통일인식 유형에 따라 세대내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세대의 정의와 세대 구분

통상 한국에서 20대, 30대, 40대 등 연령구분을 세대로 간주하고 분석한다. 그러나 세대는 동일 연령집단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갖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세대로 정의하고자 한다.<sup>1</sup> 세대를 이상과 같이 정의하면 세대구분은 이질적인 역사적 경험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정 역사적 경험은 그 시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쉽지 않다. 역사적 경험을 넘어서는 다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1\_ 세대 정의 및 기존 연구에서의 세대구분에 대한 검토는 김병조·김수정·조성남, "군(軍)에 대한 인식격차 연구: 성별·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2013), pp. 213~242 참조.

이에 세대 연구의 선구자인 만하임<sup>2</sup>의 주장을 빌리고자 한다. 만하임은 개인들이 청소년기(17~25세 경)에 발생한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경우 유사한 의식구조 및 행위양식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즉, 청소년기에 경험한 역사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대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에 등장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기초로 세대를 설정하되, 만하임의 세대구분 논의를 받아들여 청소년기의 경험을 중시한다. 박재홍<sup>3</sup>은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경험,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그리고 사회운동 경험과 국내외 정치상황에 기초하여 세대를 전쟁체험/산업화 1세대, 민주화/산업화 2세대, 탈냉전/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으며, 홍덕률<sup>4</sup> 역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 과정이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로 요약된다고 보고 세대를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정보화세대로 구분하였다. 함인희<sup>5</sup>는 그동안의 세대구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세대를 근대화/산업화세대, 386/민주화세대, 정보화/디지털세대로 구분하였다. 학자별로 사용하는 세대의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전쟁이나 유신체제, IMF경제위기, 인터넷 발달로 인한 정보화 혁명 등,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사건들을 종합하여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인식을 분석하는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사건을 종합하여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세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표 1>은 세대명칭, 출생년도, 현재(2015년) 나이, 그리고 청소년기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으로 나누어 정리해 놓은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경험을 고려하여 '체제경쟁세대', '민주화통일세대',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준비세대' 등 총 4개로 세대를 구분하였다.

2\_ Mannheim, K.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In Mannheim, K.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Routledge & Kegan, 1952).

3\_ 박재홍,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제37권 제3호 (2003), pp. 1~24.

4\_ 홍덕률, "한국사회의 세대 연구," 『역사비평』, 제64호 (2003), pp. 150~191.

5\_ 함인희, "세대분화와 세대충돌의 현주소,"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편저,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서울: 인간사랑, 2007), pp. 241~272.

〈표 1〉 통일 및 남북관계와 세대 구분

세대 명칭	출생년도	현재(2015년) 나이(만)	청소년기 통일·남북관계 관련 역사경험
체제경쟁세대	1941~1960년	55~74세	반공국시, 무장공비, 1.21사태, 7.4남북공동선언, 유신체제, 베트남패망
민주화통일세대	1961~1970년	45~54세	산업화, 민주화, 서울올림픽, 북한바로알기
탈냉전통일세대	1971~1980년	35~44세	구소련붕괴, 독일통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김일성 사망, 고난의 행군, 북한이탈주민, 금강산관광
통일준비세대	1981~1995년	19~34세	남북정상회담, 남남갈등, 북한 핵개발, 천안함폭침·연평도포격

‘체제경쟁세대’는 1960년대 이전에 출생한 집단으로 2015년 기준 55세 이상 연령층으로 구성된다. 이 세대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대표적인 통일·남북관계 역사경험으로는 한국전쟁 복구, 5.16 군사정변 후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운영, 북한으로부터의 잦은 무장공비 침투와 1.21 청와대 습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이 있었지만, 한국은 유신체제, 북한은 주석제 채택 식으로 체제 대결이 지속되었다. 대외적으로는 공산화는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군을 파병하였지만 결국에는 월남이 망하고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이 세대는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본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통일은 체제대립과 체제경쟁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개인생활과 연관시켜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구체적으로 통일방안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하면서도, 통일은 한국 민족이 당연히 이루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이 주입되었던 세대이다.

‘민주화통일세대’는 6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기를 지냈던 세대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에서 시작하여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민주화과정을 지켜본 세대이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통해 국력 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강해졌음을 실감했고, 국내 민주화에 성공했던 그 기세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던 세대이다. 이들이 1990년대 말 소위 말하는 ‘386’세대로 지칭되는 집단이 된다.<sup>6</sup> 민주화통일세대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여, 다른 세대보다 진보적인 정치 사회의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

운영에 대해서도 다소 비판적이다. 그리고 반정부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하였기에, 정부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는다. 북한 및 통일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면서 이전 세대와 달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한다. 이들은 통일이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쉽지 않은 민주화를 이룩한 만큼 통일도 ‘운동’ 방식으로 추진하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세대이다.

‘탈냉전통일세대’는 70년대에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이 청소년기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88올림픽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오래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짧은 기간에 무너진 시기이다. 이들 세대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을 독일통일과 겹쳐서 상상했던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탈냉전의 여세가 한반도에도 불어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90년 소련과 국교정상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였으며, 남북한 간에도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또한 이전과 다른 북한을 경험한 세대이다. 1993년에 계획된 남북정상이 북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되어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했지만, 김일성 사망이 북한내부의 큰 변화로 이어져 통일이 진전될 것을 기대하였던 세대이다.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지만 북한은 크게 변했다. ‘고난의 행군’ 전후로 김일성 사망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바라보는 한편, 금단의 땅인 북한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탈냉전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세대이다. 큰 조류에 밀리듯이 통일도 이루어질 것으로,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된 세대이다.

‘통일준비세대’는 80년대 이후 출생한 집단이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님을 경험한 세대이다. 청소년 시기 비교적 활발한 남북대화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한국이 식량과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지켜본 세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체제를 정비하던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과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내적으로는

6\_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을 의미하는 ‘386’세대라는 용어는 1997년 1월 4일 조선일보 기사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sup>7)</sup>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북한이 체제위기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고, 미사일발사,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 통일보다는 남북대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이들이 청소년기 경험한 한국사회는 1997년의 경제위기이후 고도성장이 멈춘 사회로, 개인 간 경쟁이 심하고, 장래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사회이다. 미래의 통일보다 현재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일을 고려하는 경우도, 통일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한다. 즉, 통일에 적대적인 북한, 통일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통일이 초래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통일하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이다.

한국인이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기초하여 북한 및 통일을 둘러싼 집단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세대를 구분해 보았다. 이어서 각 세대가 『통일의식조사』에서 어느 정도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세대별 통일인식이 2007년도에서 2015년까지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세대별 통일인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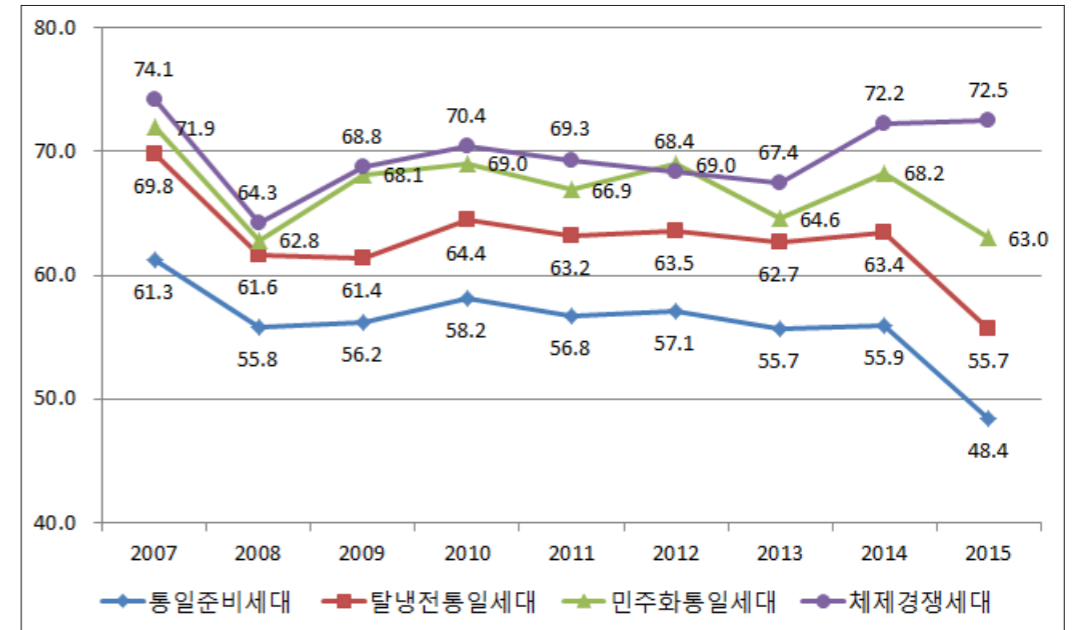
### 1) 통일필요성과 통일대박론

〈그림 1〉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여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드러나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세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체제 경쟁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식하고, 통일준비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대체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7\_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1997년 8월 2일 한겨레신문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해당 용어가 크게 유행한 것은 2001년 7월 조선일보에서 사용하고부터이다. 김재한, "북한 및 미국 관련 남남갈등의 변화추세: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2009), 제2호 pp. 140~161.

8\_ 실제로는 통일대박론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남북관계 변화 등이 포함되어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5)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 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리고 지난 9년간의 세대별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세를 통해 통일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체로 '체제경쟁세대=민주화통일세대 > 탈냉전통일세대 > 통일준비세대' 구분된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체제경쟁세대와 민주화통일세대 간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2015년 조사에서는 세대별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명확히 구분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의 효과가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sup>8)</sup>

둘째,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관계 지향변화(2007-2008년)나 새로운 통일정책의 발표(2014년) 등이 통일필요성에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세대별 경험이 다르므로 통일필요성을 달리 평가하지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변화 등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반대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두 번째 특징과 연계된 것으로 통일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세

대별로 갖고 있는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필요성 인식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구체적으로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도와 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은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정도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2014년,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통일대박론을 공감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에서는 비공감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체제경쟁세대를 제외하면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공감’과 ‘비공감’ 비율을 비교할 때, 통일준비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는 비공감한다는 의견이 많고, 민주화통일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표 2〉 ‘통일대박론’에 대한 세대별 공감정도(2014-2015) (단위: %)

	2014년				2015년			
	공감	보통	비공감	계	공감	보통	비공감	계
통일준비세대	21.2	47.2	31.6	100.0	26.6	36.7	36.7	100.0
탈냉전통일세대	27.7	40.7	31.7	100.0	34.5	36.5	29.0	100.0
민주화통일세대	35.6	37.6	26.7	100.0	34.3	39.1	26.6	100.0
체제경쟁세대	42.9	36.2	20.6	100.0	49.8	34.1	16.1	100.0

비고: ‘공감=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비공감=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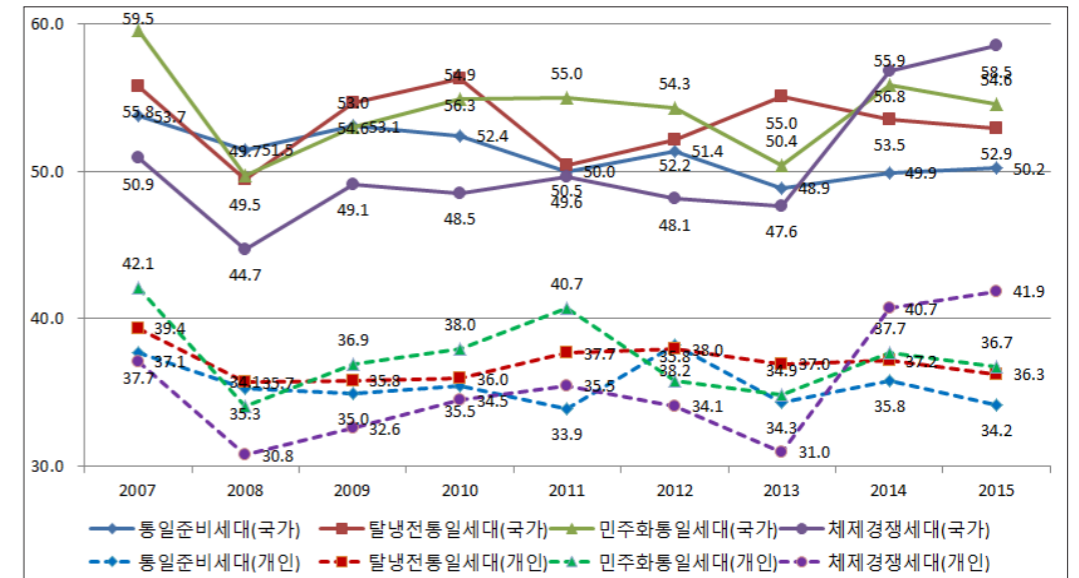
2015년이 되면, 통일준비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줄면서 통일준비세대는 비공감이 많아지고, 탈냉전통일세대는 공감이 많아지고 있다. 민주화통일세대는 큰 변화가 없고, 체제경쟁세대는 공감이 많아졌다. 변화 폭이 크지 않지만, 세대별로 통일대박론을 공감하는 비율이 변화하였다.

체제경쟁세대는 통일문제에 있어 정부 정책 변화에 쉽게 따르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민주화통일세대는 큰 변화가 없다. 민주화통일세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라고 진단했었다. 통일대박론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과가 나와야 공감에 대한 판단 변화가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냉전통일세대는 통일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통일대박론 관련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층이 늘고 있다. 그리고 통일준비세대는 공감 비율이 높아졌지만, 비공감 비율도 높아졌다. 통일준비세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평가는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통일대박론은 결국 통일이 국가 혹은 개인에 큰 이익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통일과 이익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평가할 때,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림 2〉는 세대별로 통일이 국가이익이 될 것인지, 개인이익이 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2〉 세대별 통일과 국가이익, 개인이익(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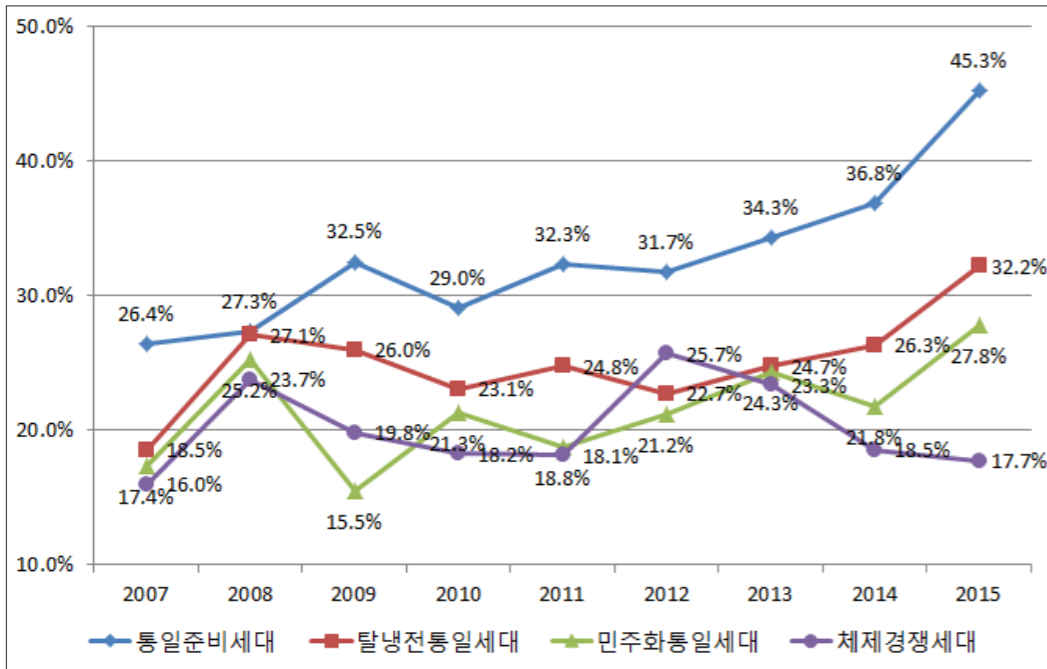
비고: 통일이익은 응답별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66.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33.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전체적으로 국가이익보다 개인이익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면, 국가이익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개인 삶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컸지만(〈그림 1〉 참조), 통일이익(국가 및 개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주장했던 체제경쟁세대는 2013년까지 통일이익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세대였다. 대신, 민주화통일세대나 탈냉전통일세대가 통일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세대였다. 그러나 통일대박론이 발표된 2014년 이후 체제경쟁세대가 통일이익을 가장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통일대박론이 체제경쟁세대에게 통일이익을 새삼 인식하게 하고, 통일필요성도 높아지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역으로 통일이익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이 통일준비세대이다. 이들에게는 통일대박론 담론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결과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2) 통일에 대한 견해 변화

통일대박론이 회자됨에도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지 않고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통일무관심' 및 '현재 만족'을 표명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은 통일에 대한 4가지 견해('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중에서 '현재 만족(현재대로가 좋다)' 또는 '통일무관심(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 3> 세대별 '현재 만족+통일무관심' 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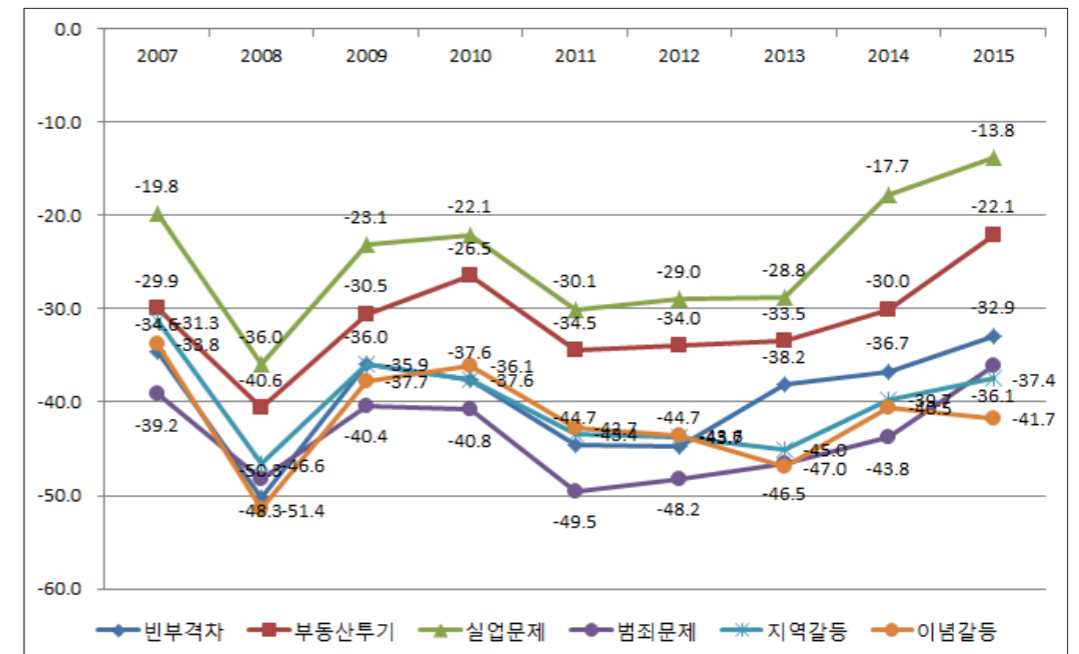
비고: '현재만족+통일무관심'을 합한 %이다.

체제경쟁세대는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들어 낮아지는 유일한 집단이다. 나머지 3세대 중 '민주화 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는 '현재 만족' 및 '통일무관심'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2/3이상이 넘는다. 아직까지는 통일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이다.

그런데 통일준비세대의 경우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40%를 넘고 있다. 통일준비세대가 점점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통일대박론이 대박을 터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하게 되는 배경에는, 통일되면 제반 사회문제(빈부격차, 실업문제, 범죄문제, 이념갈등 등)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내부에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4> 참조). 그 중에서도 범죄문제,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이 특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록 최근에 사회문제가 악화되는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환기에 이익추구보다 위험회피를 우선 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통일대박론을 구체화 시키는 것과 함께 통일이 초래할 사회문제 악화에 대한 대비책 및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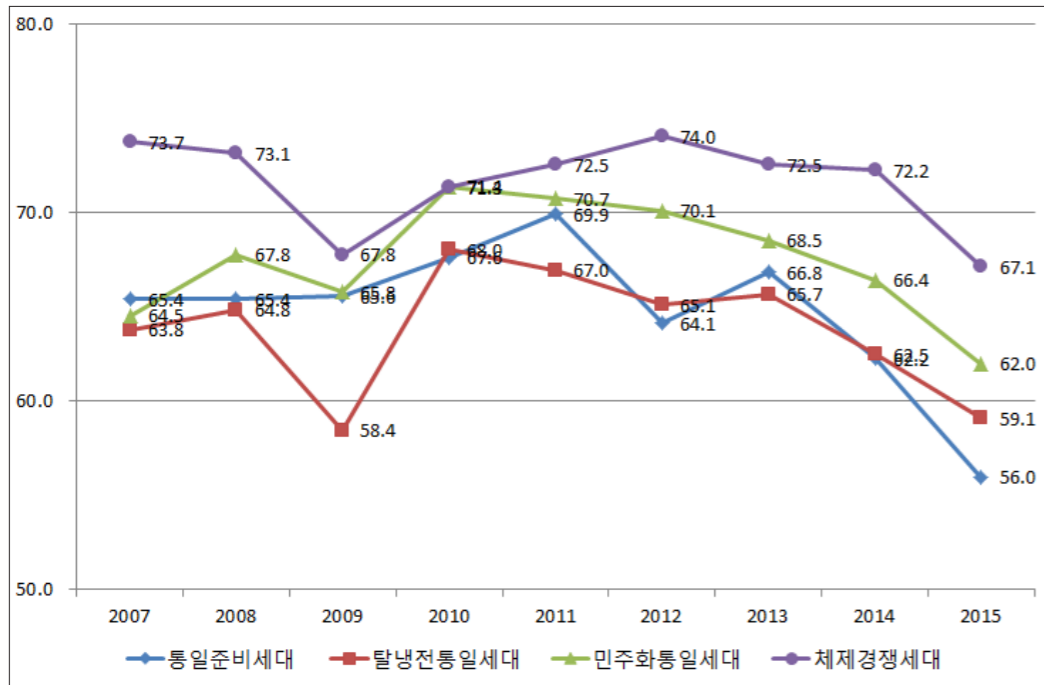
<그림 4> 통일 후 사회문제의 변화 (2007~2015)



비고: 사회문제 변화는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개선=75, 차이 없음=50, 약간 악화=25, 매우악화=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러나 통일준비세대가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통일보다 현재 만족에 치중하는 상황이 통일정책 변화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난에서 비롯된 3포 세대의 등장, 어처구니없이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등 사회전반적인 활력 감퇴가 통일준비세대로 하여금 통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추측되기 때문이다. 통일이 현재의 한국 상황을 크게 개선시킨다는 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5> 세대별 '한국인 자긍심' 변화 (2007-2015)



비고: 한국인 자긍심은 응답별로 '매우 자랑스럽다=100, 다소 자랑스럽다=66.6,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33.3,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0'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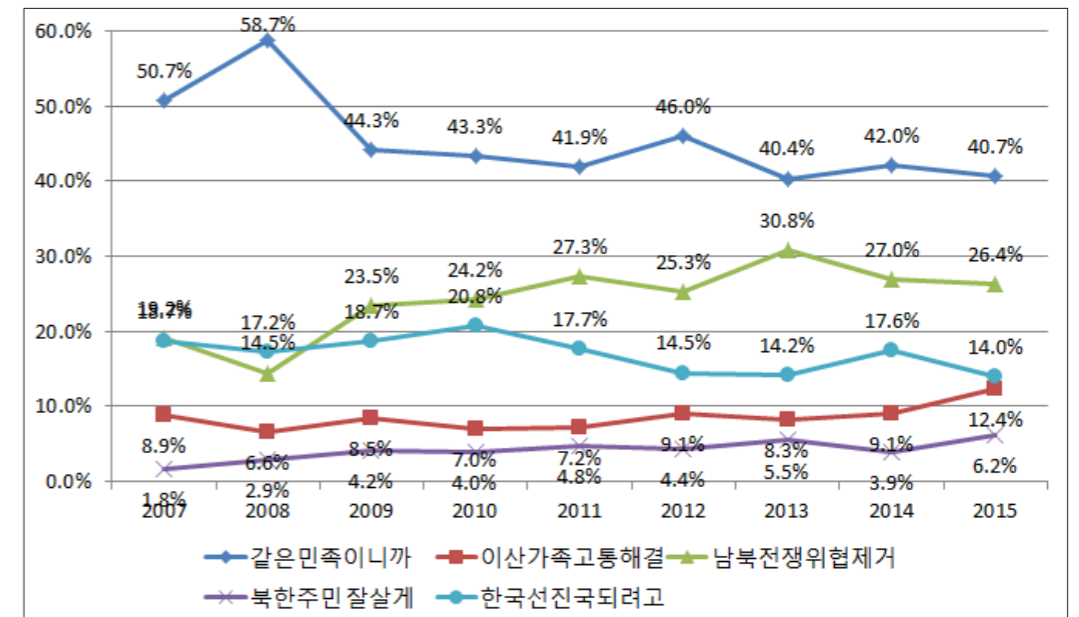
### 3) 통일이유와 북한에 대한 인식

그럼 과연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이 무엇일까? <그림 6>은 통일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의견을 조사년도 별로 제시한 것이다. 통일되어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전통적 이유)', '이산가족 고통해결(인도적 이유)', '남북전쟁위협제거(소극적 이유)', '북한주민 잘 살게(인도적 이유)',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고(적극적 이유)' 등이다. 통일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분석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통일이익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다.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으로 민족통합이라는 전통적 이유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은 50%대에서 40%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어서 통일해야 할 이유로 선택한 것이 '남북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남북전쟁위협제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에서 25%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로 대치함으로써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 남북분단 상태의 가장 큰 부정적 측면이다. 그리고 통일 이유로 전쟁위협 해소 지목이 증가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 그리고 무력도발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불안은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쟁해소는 분단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그리고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이유는 15% 내외로 큰 변화가 없으며, 이산가족 고통해결이나 북한주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도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비율은 각기 5% 및 10%내외이다.

<그림 6> 통일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 (2007-2015)



세대별로 구분해서 제시하면 통일준비세대에서 앞에서 제시한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2015년 조사에서 통일준비세대의 경우 가장 큰 통일이유로 꼽은 것이 '남북전쟁위협제거(33.2%)'로 '같은 민족이니까(30.7%)'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이유를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통일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주장이

라 할 수 있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고'를 선택한 비율은 17.4%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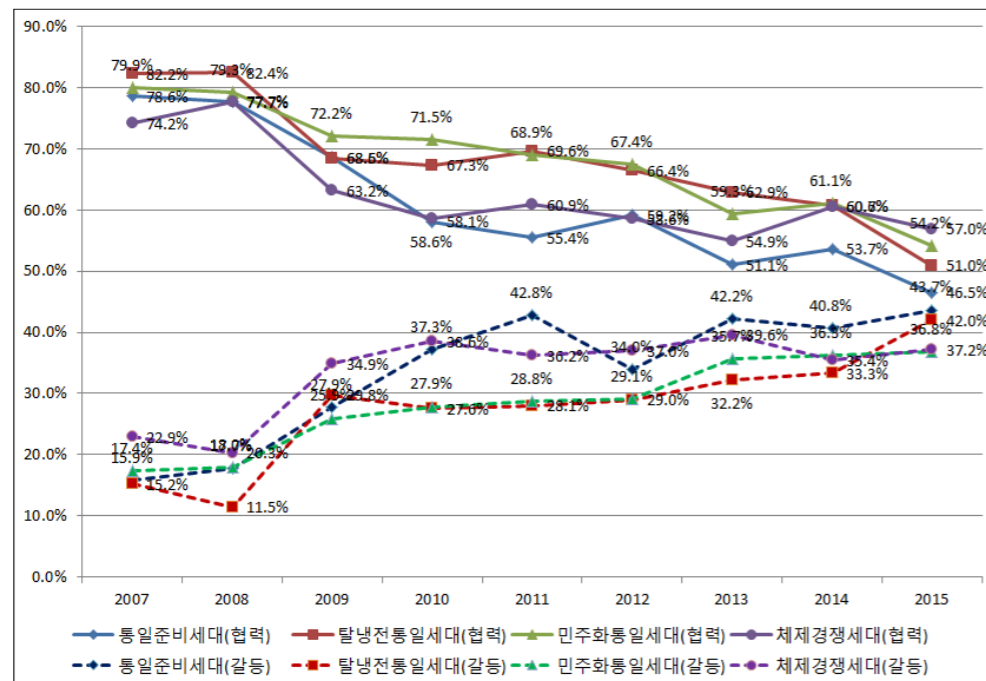
<그림 6>과 같이 핵심 통일이유가 변화한 부분적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존재한다. 통일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변화한 데는 최근에 경험한 남북관계와 북한의 대남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이 달성되려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세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평화통일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그림 7>).

모든 세대에서 북한을 협력관계(지원+협력)로 보는 인식이 줄어들고 갈등관계(적대+경계)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협력과 갈등이 80%:20% 정도로 나뉘었던 북한에 대한 인식이 2015년도에는 50%:40%정도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별로 북한을 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체제경쟁세대나 통일준비세대에 비해 북한을 협력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북한을 갈등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보다 모든 세대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7> 세대별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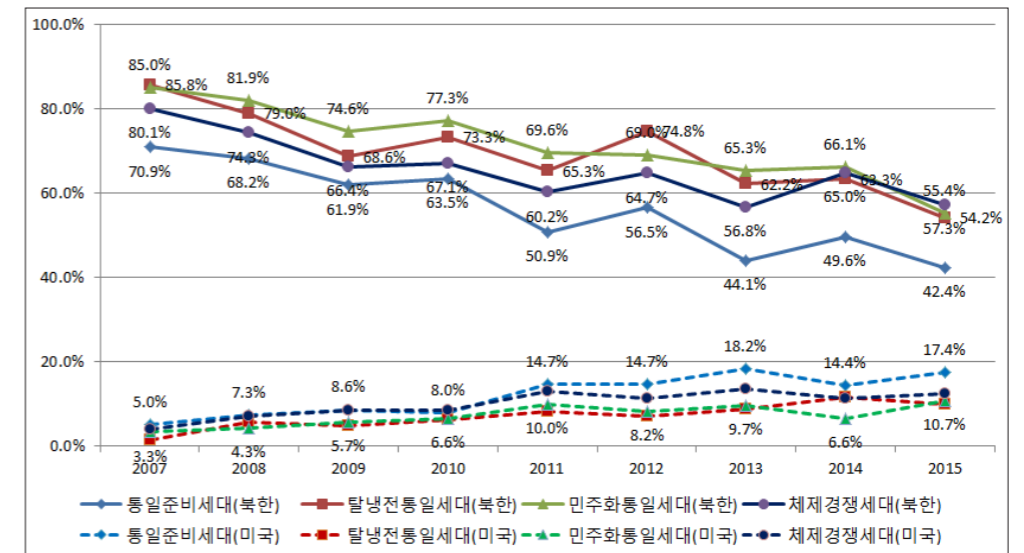


비고: 응답자 10%미만인 '경쟁대상'은 제외하고 '협력=협력대상+지원대상'과 '갈등=경계대상+적대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초점은 다르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알려주는 다른 항목이 여러 개 존재한다. <그림 8>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팀' 또는 '미국 팀'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세대에서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다. 2007~8년에는 세대별로 70~80% 정도 북한을 응원하였으나 2014~5년에는 그 비율이 40~60%정도가 되었다. 반대로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2007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5%이하였으나, 2015년에는 모든 세대에서 10%가 넘게 되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미국을 응원하는 비율은 '통일준비세대'에서 많고, '민주화통일세대'나 '탈냉전통일세대'에서 적다.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은 역으로 '통일준비세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또한 이 세대에서 북한응원비율 저하가 가장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타 세대에서도 북한을 응원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민주화통일세대/탈냉전통일세대가 체제경쟁세대 보다 북한을 많이 응원한다 하였지만 2013년도 이후에는 그 비율이 비슷해졌다.

<그림 8> 세대별 축구경기에서 응원하는 국가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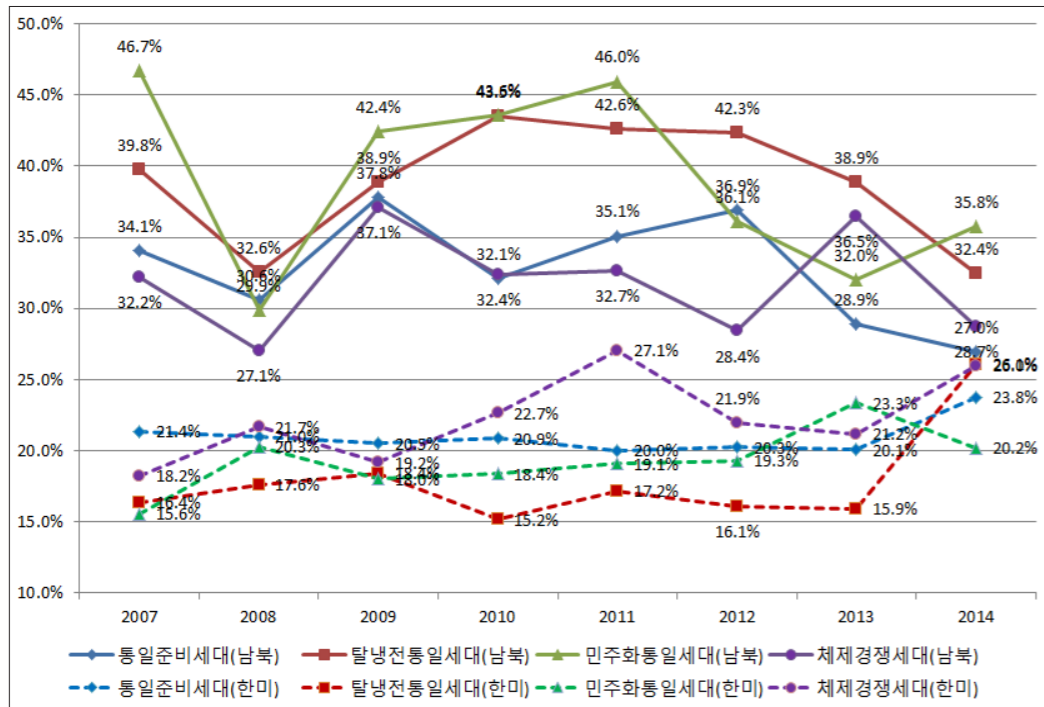


비고: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기타'를 제외하고 북한 팀, 미국 팀을 명시한 응답 %를 제시하였다.

〈그림 9〉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세대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세대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민들이 민족이나(북한), 동맹이나(미국)를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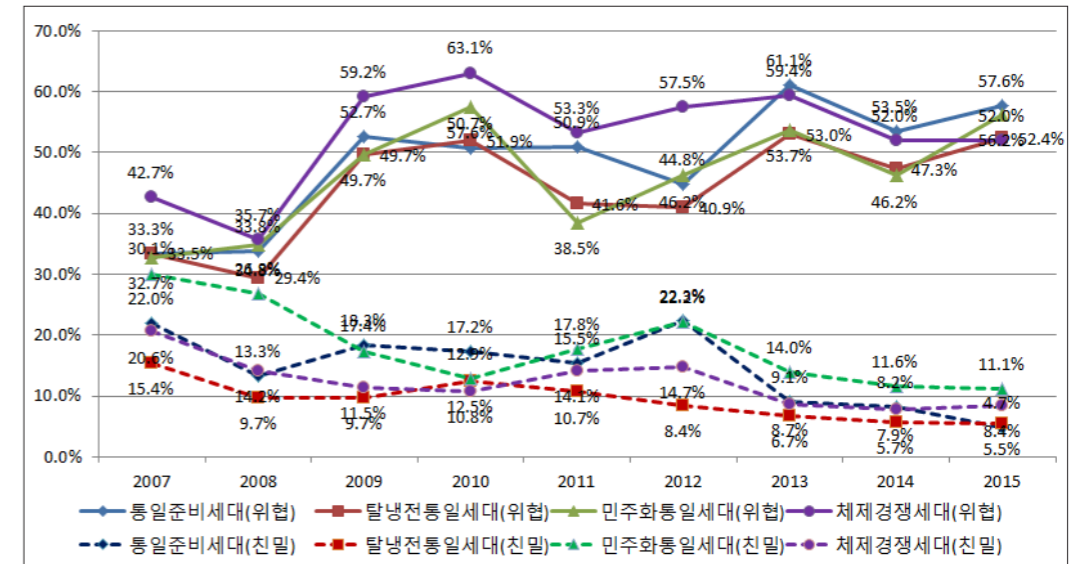
〈그림 10〉은 보다 범위를 넓혀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선택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비율은 늘고 있다. 2007~8년에 한반도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북한을 선택한 비율은 30~40%였으나, 2015년도에는 모든 세대에서 50%이상이 북한을 선택한다. 역으로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림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변 5개국 중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미국으로, 2007년 50~60% 수준에서 2015년에는 70~80%로 늘어난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모든 세대에서 미국 다음으로 북한을 가장 가깝게 선택한 비율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탈냉전통일세대와 통일준비세대에서는 중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림 9〉 세대별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의 중요성 (2007-2014)



비고: '똑같이 중요하다'를 제외하고 '남북관계 개선(남북)'과 '한미공조(한미)'를 선택한 %를 제시하였다.

〈그림 10〉 세대별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위협’ 및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북한을 택한 비율 (2007-2014)



비고: 주변 5개국 중에서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국가'로 선택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통일보다 국가안보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른 세대보다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북한을 통일 파트너로 인정하고 가깝게 느껴왔지만, 이들에게조차 북한은 통일파트너로서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점이 통일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거나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의식이 확대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세대내 통일인식의 분화

#### 1) 통일의식 유형의 세대별 분포

다양한 측면에서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남북관계가 모든 세대의 통일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같은 세대지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세대내 통일인식에 분화가 발생한다. 예컨대, 통일준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고,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에 무관심한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다른 세대와 비교해서 나타난 상대적인 것이며, 또한 통일준비세대가 모두 그런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에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입장을 교차하여 통일의식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표 3〉).

〈표 3〉 통일외식 유형

		통일필요성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한 입장	빨리 통일/여건성숙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Ⅰ)
	현재대로가 좋다/통일무관심	통일소극형(Ⅱ)	통일방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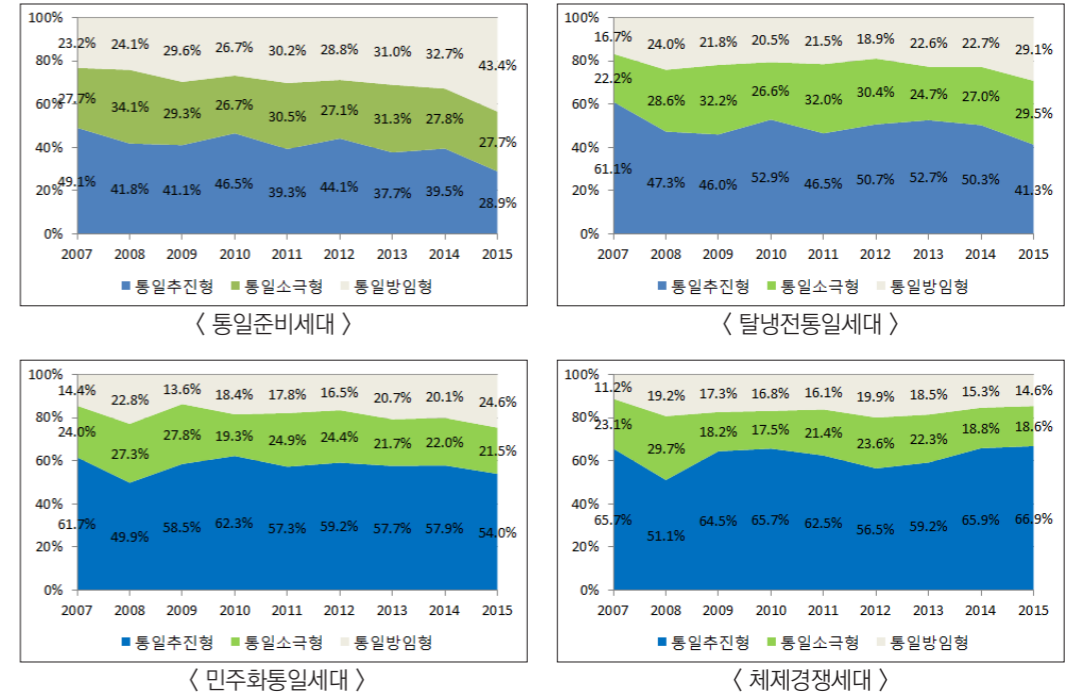
- (1) 통일추진형: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한다고 생각하는 유형
- (2) 통일소극형: 통일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거나 (Ⅰ), 통일이 필요하나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Ⅱ).<sup>9</sup>
- (3) 통일방임형: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고 현재에 만족하는 유형.

〈그림 11〉은 세대별 통일외식 유형의 변화 추세를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는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2007년 23.2%였던 통일방임형이 2015년 도에는 43.4%가 된다. 반대로 통일추진형은 49.1%에서 28.9%로 줄어든다. 그리고 통일소극형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통일방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탈냉전통일세대에서도 통일방임형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일추진형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민주화통일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통일유형별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화통일세대는 2015년 통일추진형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4.0%로 대다수이며, 체제경쟁세대는 2015년에 통일추진형이 오히려 조금 늘어 66.9%이다.

9. 통일소극형(Ⅱ)는 매우 소수이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좌우되는 실정이다.

〈그림 11〉 세대별 통일외식 유형 변화추세 (2007-2015)



그렇다면 세대별로 통일유형은 어떤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2015년을 사례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이념지향별로 살펴보기로 한다(〈표 4〉~〈표 7〉).

〈표 4〉는 통일준비세대의 통일외식 유형 분포를 변수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는 성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일추진형 항목에서는 그 비중이 비슷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통일방임형이 많고, 여성은 통일소극형이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이 통일추진형이 많고, 고졸이하에서 통일소극형이 많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적을수록 통일추진형이 많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통일방임형이 늘어난다. 한편 중간층 소득수준이라 할 수 있는 200~299만원 소득수준에서 통일소극형이 많았다. 이념지향별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보수성향이 통일추진형이 많고, 중도성향에서 통일냉소층이 많았다.

〈표 4〉 통일준비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29.9%	21.3%	48.8%	100.0%
	녀	27.6%	34.2%	38.2%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6.1%	38.7%	45.2%	100.0%
	대학이상	31.8%	25.1%	43.1%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38.5%	30.8%	30.8%	100.0%
	200-299만	31.7%	43.3%	25.0%	100.0%
	300-399만	30.7%	24.0%	45.3%	100.0%
	400만이상	26.0%	23.7%	50.3%	100.0%
이념지향	진보	31.0%	29.0%	40.0%	100.0%
	중도	26.8%	27.4%	45.8%	100.0%
	보수	34.2%	26.3%	39.5%	100.0%
전체		28.9%	27.7%	43.4%	100.0%

〈표 5〉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46.7%	26.7%	26.7%	100.0%
	녀	35.0%	33.3%	31.7%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41.9%	32.3%	25.8%	100.0%
	대학이상	41.0%	28.0%	31.1%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50.0%	33.3%	16.7%	100.0%
	200-299만	53.7%	24.4%	22.0%	100.0%
	300-399만	38.7%	34.0%	27.4%	100.0%
이념지향	진보	47.3%	24.3%	28.4%	100.0%
	중도	42.8%	31.0%	26.2%	100.0%
	보수	20.6%	35.3%	44.1%	100.0%
전체		41.3%	29.5%	29.1%	100.0%

〈표 5〉는 탈냉전통일세대의 통일의식 유형 분포를 변수별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에서는 남성의 경우 통일방임형이 많았지만, 탈냉전통일세대에서는 반대로 남

성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여성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통일준비세대와 달리 대학이상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소득수준에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통일추진형이 많은데, 이는 통일준비세대와 같은 특징이다. 그리고 이념지향별로는 보수성향이 통일방임형이 많고, 중도 및 진보성향에서 통일추진형이 많다. 이 역시 통일준비세대와 다른 양상이다.

〈표 6〉은 민주화통일세대의 변수별 통일유형 분포이다. 성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남성에서 통일추진형이 조금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이상에서 통일추진형이 조금 많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중간정도의 소득집단에서 통일추진형이 많았고, 400만 이상 소득 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이념지향별로는 진보성향에서 통일추진형이 많았고, 보수성향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

〈표 6〉 민주화통일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57.5%	19.4%	23.1%	100.0%
	녀	51.0%	23.2%	25.8%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51.7%	21.7%	26.7%	100.0%
	대학이상	57.8%	22.0%	20.2%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55.6%	22.2%	22.2%	100.0%
	200-299만	62.1%	27.6%	10.3%	100.0%
	300-399만	63.5%	17.3%	19.2%	100.0%
	400만이상	44.6%	23.7%	31.7%	100.0%
이념지향	진보	63.8%	17.2%	19.0%	100.0%
	중도	53.0%	23.5%	23.5%	100.0%
	보수	50.0%	20.0%	30.0%	100.0%
전체		54.0%	21.5%	24.6%	100.0%

마지막으로 체제경쟁세대의 경우, 남성에서 통일추진형이 많고, 여성은 통일소극형이 많다(〈표 7〉). 통일방임형은 남녀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이상에서 통일추진형이 다소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명확한 추세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소득이 높은 400만 이상 소득수준집단에서 통일방임형이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념성향별로도 명확한 특징을 찾기 어렵지만, 다른 세대와 달리 중도성향 집단에서 통일추진층이 많다.

〈표 7〉 체제경쟁세대의 통일유형 분포(2015년)

		통일추진형	통일소극형	통일방임형	계
성별	남	72.7%	13.9%	13.3%	100.0%
	녀	60.8%	23.4%	15.8%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65.8%	19.1%	15.1%	100.0%
	대학이상	73.3%	17.8%	8.9%	100.0%
소득수준	200만미만	74.1%	13.6%	12.3%	100.0%
	200-299만	59.7%	29.9%	10.4%	100.0%
	300-399만	71.4%	16.9%	11.7%	100.0%
	400만이상	62.9%	15.5%	21.6%	100.0%
이념지향	진보	64.7%	17.6%	17.6%	100.0%
	중도	71.1%	17.5%	11.4%	100.0%
	보수	64.3%	19.7%	15.9%	100.0%
전체		66.9%	18.6%	14.6%	100.0%

〈표 4〉에서 〈표 7〉까지 세대별로 구분해서 배경 변수별 통일외식유형 분포를 살펴보았다. 각 세대를 비교하면 세대별로 배경변수별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같은 배경변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대별로 통일외식에 차이가 난다.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통일유형별 성별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소득은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은 탈냉전통일세대와 민주화통일세대의 통일외식 유형과 관련성이 높다.

2) 통일외식 유형별 북한인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따라서 세대별로 나타나는 통일외식의 격차와는 별도로 세대 내에서 통일외식 유형에 따라 북한 및 혹은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표 8〉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 통일외식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일준비세대, 탈냉전통일세대, 민주화통일세대 중 통일추진형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입장에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경우를 합치면, 통일추진형은 70%내외가 북한을 협력(협력+지원) 지원대상으로 생각한다.

한편 통일소극형은 북한을 협력(협력+지원)대상으로 보는 의견과 갈등(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반반정도이다. 그리고 통일방임형은 북한을 갈등(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다.

〈표 8〉 통일외식 유형별 북한에 대한 인식 (2015년)

(단위:%)

	통일준비세대			탈냉전통일세대			민주화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추진	소극	방임 냉소
지원	9.8	23.6	7.2	17.1	14.7	12.2	18.7	11.3	11.4	32.9	8.2	14.9
협력	59.8	24.7	22.5	52.4	26.7	21.6	53.5	27.4	17.1	36.1	27.9	12.8
경쟁	5.4	14.6	9.4	5.7	13.3	4.1	8.4	12.9	7.1	3.7	9.8	10.6
경계	10.9	25.8	31.2	17.1	28.0	33.8	8.4	29.0	45.7	16.7	34.4	27.7
적대	14.1	11.2	29.7	7.6	17.3	28.4	11.0	19.4	18.6	10.6	19.7	34.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어서 통일외식 유형별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제시하였다(〈표 9〉 참조).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었는지, 남북경협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내 차이가 더 크다. 세대 내에서는 대체로 '통일추진형 > 통일소극형 > 통일방임형' 순으로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반대로 세대별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세대내 통일외식 유형별로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통일외식 유형과 관계가 적다고 할 수 있다.

〈표 9〉 통일외식 유형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2015년)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효과	남북경협 개혁개방에 도움효과	정부대북정책 만족
통일준비세대	통일추진형	48.3	55.7	44.3
	통일소극형	46.3	47.3	44.6
	통일방임형	41.5	46.8	43.9
	전체	44.8	49.5	44.2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2.0	61.8	48.9
	통일소극형	49.7	53.7	52.2
	통일방임형	36.6	48.6	46.1
	전체	46.8	55.6	49.1
민주화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1.5	58.8	49.2
	통일소극형	39.7	50.0	48.8
	통일방임형	40.5	47.1	47.5
	전체	46.3	54.1	48.7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효과	남북경협 개혁개방에 도움효과	정부대북정책 만족
체제경쟁세대	통일추진형	56.3	60.6	53.5
	통일소극형	38.1	48.0	51.6
	통일방임형	43.5	46.7	48.8
	전체	51.1	56.2	52.5

비고: '대북지원 주민생활 도움 효과' 및 '남북경제협력 개혁개방에 도움 효과'는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으로, '대북정책만족도'는 '매우 만족=100, 다소 만족=66.6, 다소 불만족=33.3, 매우 불만족=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을 구한 것이다.

그리고 <표 10>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통일의식 유형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도 세대 간 차이보다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별로 차이가 더 크다. 세대에 관계없이 통일추진형이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친근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이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 확대의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반대로 통일방임형은 친근감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이다.

<표 10> 통일의식 유형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2015년)

		탈북자 친근감	남북한 이질화 해소	탈북자지원 확대
통일준비세대	통일추진형	51.5	58.9	54.1
	통일소극형	46.8	53.9	54.4
	통일방임형	41.4	47.5	43.1
	전체	45.8	52.6	49.4
탈냉전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4.1	62.9	56.9
	통일소극형	44.9	55.3	53.0
	통일방임형	40.0	50.0	40.7
	전체	47.2	56.9	51.0
민주화통일세대	통일추진형	52.5	57.6	57.1
	통일소극형	50.3	54.2	52.4
	통일방임형	46.5	47.8	41.6
	전체	50.5	54.5	52.3

		탈북자 친근감	남북한 이질화 해소	탈북자지원 확대
체제경쟁세대	통일추진형	53.3	58.6	52.9
	통일소극형	46.8	50.3	48.4
	통일방임형	45.0	45.5	43.8
	전체	50.9	55.2	50.7

비고: 탈북자 친근감은 응답별로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100,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66.6,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33.3,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 남북한 이질화 해소 및 탈북자 지원 확대는 '매우 동의함=100, 다소 동의함=66.6, 별로 동의하지 않음=33.3, 전혀 동의하지 않음=0'을 부여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그리고 '모두 중요'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11>을 보면 어느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세대효과와 세대 내 통일의식 유형 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는 민주화통일세대와 탈냉전통일세대가 남북관계를 중시한다. 그리고 통일준비세대와 체제경쟁세대는 모든 관계를 중시한다. 어떤 관계가 중요한지 판단함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드러난다.

그리고 세대 내에서도 통일의식 유형별로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는지 차이가 난다. 세대 내에서 통일추진형은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통일소극형과 통일방임형은 모두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표 11> 통일의식 유형별 통일에 중요한 관계 (2015년) (단위 :%)

	통일준비세대				탈냉전통일세대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남북관계	41.8	32.2	24.1	31.3	37.1	42.7	28.4	36.8
한미관계	24.2	26.4	22.6	24.1	27.6	20.0	21.6	29.3
한중관계	4.4	5.7	7.3	6.0	5.7	6.7	9.5	7.1
모두	29.7	35.6	46.0	31.4	29.5	30.7	40.5	3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주화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남북관계	41.0	37.1	32.9	38.2	32.4	13.3	13.0	26.3
한미관계	23.1	16.1	27.1	22.6	26.9	30.0	30.4	27.9

	민주화통일세대				체제경쟁세대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추진형	소극형	방임형	전체
한중관계	7.1	6.5	8.6	7.3	5.1	6.7	10.9	6.2
모두	28.8	40.3	31.4	31.9	35.6	50.0	45.7	3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4. 소결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통일준비세대에서 점점 통일필요성이 낮아지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준비세대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국민전체의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모든 통일 관련 인식이 청소년기에 경험한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 탓으로 돌리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세대별 통일인식은 세대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이후에 경험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사건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통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통일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도 변할 수 있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통탄할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구할 때,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통일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효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세대별로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체제경쟁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통일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대에 걸쳐 전환시키지는 못하였다. 통일대박론이 대박이 되려면 각 세대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이익창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정부정책보다 더 중요하게 통일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남북관계의 변화이다. 최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변화, 특히 통일준비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저하는 세대 별 특성에 더하여, 계속되는 북한의 적대적인 대남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세대별로 통일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세대별 격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 세대내 통일의식의 분화가 존재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성향 등에 따라 통일인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통일지향태도를 통

일추진형, 통일소득형, 통일방임형으로 구분하는 통일의식 유형론을 시도하고, 통일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이 세대별 차이 이상으로 통일의식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제시해 보았다.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적극적인 유형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인식이 세대효과, 통일정책효과, 북한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해야 통일추진형이 증가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통일추진형이 남북교류 등을 보다 지지함을 염두에 둔다면, 남북한 간의 적대적 대립이 해소되고 남북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통일외식의 분화화 역동성  
:2015 통일외식조사

06

# 탈북자에 대한 인식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발표6]

## 탈북자에 대한 인식

황정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을 떠나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2만 8천 여 명에 이른다.<sup>1</sup>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명명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위험을 무릅쓴 탈출, 중국과 동남아를 수년간 떠돌면서 기아와 인권 유린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탈북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율은 32.3%,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이다(2014년 기준).<sup>2</sup>

탈북자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연구도 크게 활성화되었는데, 대략 큰 흐름을 본다면 우선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 그리고 탈북 이후 이들의 삶의 과정과 인권침해 경험, 정착 생활의 어려움 등을 다루는 연구들이 다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즉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수용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통일 인식조사에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사회적 거리감,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매년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선도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의식조사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심층 분석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_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 (2015. 6월 잠정집계 28,133명).

2\_ 탈북자의 생계급여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연도별 추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통일부 자료,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단위:%)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생계급여수급율	63.5	54.8	54.9	51.3	46.7	40.8	35	32.3
경제활동참가율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0	51.4	53.1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탈북자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은 매우 복잡적이다. 더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략 세 가지(국민/이주민/동포)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북한 출신의 주민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 거주해 왔고 민족적 배경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탈북자는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엄연한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 출신의 남한 주민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며, 그 의미는 긍정과 부정의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70년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북한 출신이므로 특별한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양쪽 사회를 모두 경험한 중간적 집단으로써 이질화를 완화하고 앞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기도 한다. 둘째,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온 후 경제체제 및 문화가 상이한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탈북자는 이주민(혹은 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유형무형의 편견, 차별 등에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로 노출되어 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많이 증가하고, 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탈북자들은 적어도 수적인 차원에서는 이주민 내부에서 소수자 집단이다. 세 번째로, 탈북자는 한민족, 동포의 일원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은 탈북자를 포용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민족 내부의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지구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한민족, 한국으로 다시 귀환한 동포들을 일종의 동심원적 위계에 따라 인식하고 같은 한민족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구분하며<sup>3</sup>, 더 나아가 남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정의하려는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이 글에서 분석할 주요 종속변인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사회적 거리,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다문화 공존 및 다민족 국가에 대한 태도이다. 이러한 분석은 일차적으로 탈북자의 삶의 현실과 정책 필요성 등을 진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지만,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3\_ Chulwoo Lee, 2012, "How can you san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vol. 16, no. 1, pp. 85~102.

4\_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 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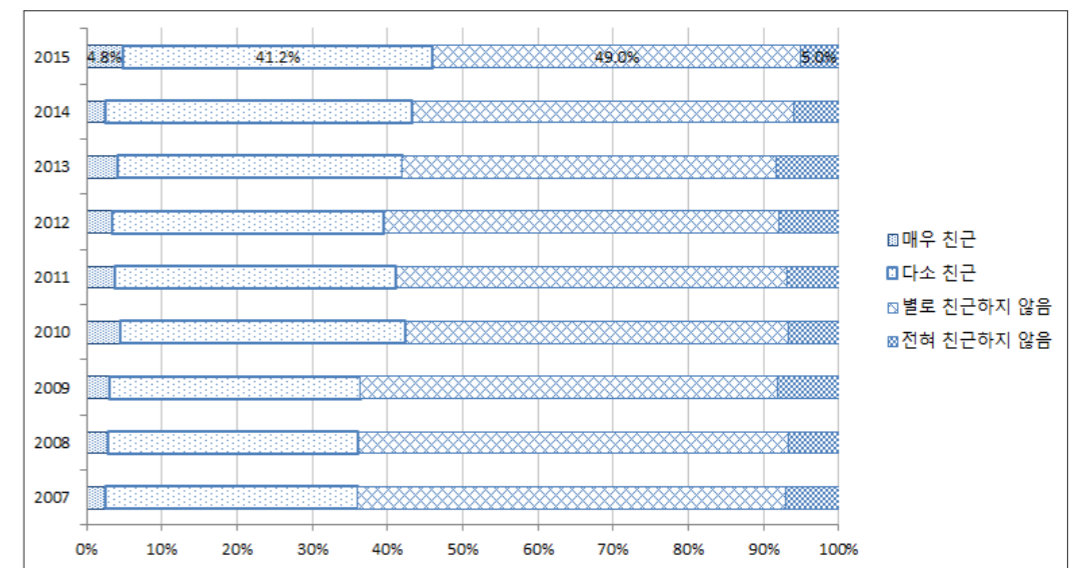
## 1.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전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적 응답이 다소 많다. 2015년 조사결과 친근하게 느낀다는 긍정적 응답은 45.6%, 친근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은 54.4%로 나타났다. 지난 9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변동은 없지만, 일정하게 친근감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조사를 시작한 2007년에는 탈북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한 응답자가 36.1%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0% 중반을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림 1>

척도 평균값을 구해서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표 2>에서도 완만한 증가세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느리긴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느끼는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흐름이다. 물론 4점 척도에서 2.45%(2015)의 평균 점수는 긍정보다는 약한 부정에 가까우며,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친근감보다는 거리감을 다소 많이 느끼는 현실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별로 보면,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연령별 태도의 차이이다. 19~29세 젊은 연령층에서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근감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난다. 기존 연구 경향을 보면 20대 청년층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흐름이 확인되었다.

<그림 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시계열 변화 (2007~2015)



〈표 2〉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recode) 평균값\* :시계열 변화

연도	평균	N	표준편차
2007	2.32	1197	.63942
2008	2.32	1213	.63905
2009	2.32	1196	.66229
2010	2.40	1200	.67999
2011	2.38	1198	.67083
2012	2.35	1199	.67298
2013	2.38	1200	.69685
2014	2.40	1199	.64023
2015	2.46	1199	.66789
전체	2.37	10801	.66482

\* 4점 척도 : 1점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점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표 3〉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 - 연령별 (2015)

연령대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19-29세	2.3559	227	.67979
30-39세	2.3844	237	.69778
40-49세	2.4843	275	.61086
50-59세	2.5279	254	.67212
60세 이상	2.5350	206	.67053
전체 (F=3.562**)	2.4582	1199	.66789

(※ p<.001: \*\*\*, p<0.01: \*\*, p<.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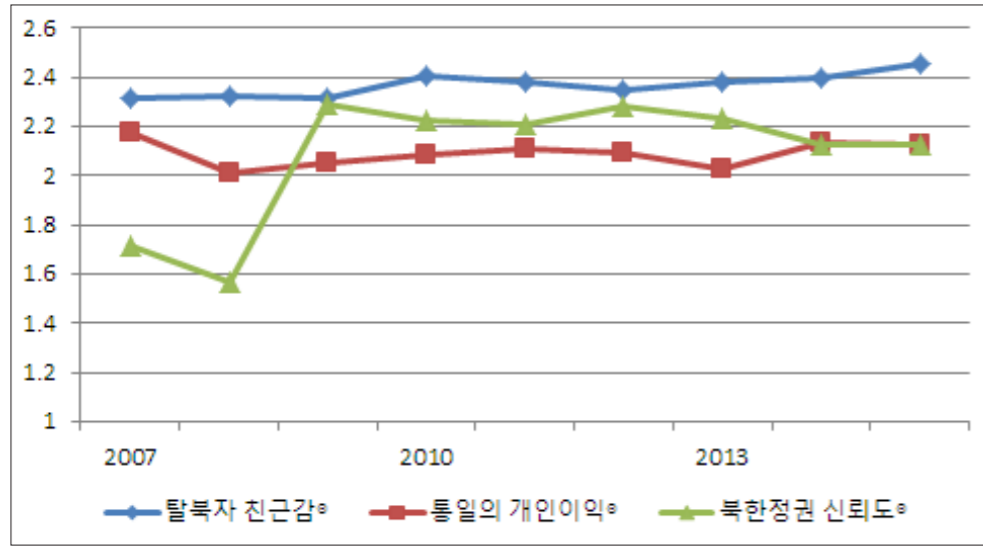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탈북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 매체나 언론에서 그려지는 이미지, 그리고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인지적 프레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태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주목하였다. 북한을 우리가 도와줄 지원대상 또는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을 선의의 경쟁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들 또한 탈북자를 친근하게 인식하는 경향이다. 이와 달리 북한을 경계 대상, 혹은 적대 집단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탈북자와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북인식에 따른 탈북자 친근감의 차이 (2015)

대북인식	평균	N	표준편차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559	208	0.60416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2.5416	422	0.69982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	2.5511	95	0.63378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2.2958	276	0.66636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	2.3564	198	0.62754
전체 (F=8.740***)	2.4582	1199	0.66789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태도가 대북 인식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단순한 가설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제시한 바 있지만, 탈북자에 대한 인식은 이들을 이주민이자 사회적 소수자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다각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인과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차후 분석과제로 남겨둔다. 여기에서는 지난 9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통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태도의 추이를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과 대비하여 같이 살펴보았다. 통일의식조사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9년간 주요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난다. 먼저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 시점에 따라 변화가 많은데, 이는 제1연평해전을 비롯한 무력 충돌이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건들에 의해 여론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2012년 이후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통일이 나의 개인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대는 2007년 조사에서 가장 높았고 이후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은 소폭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대북 인식이 악화되거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어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은 적어도 이 그림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2〉 탈북자 친근감과 관련 항목의 시계열 추이(2007~2015) (4점 척도)



## 2.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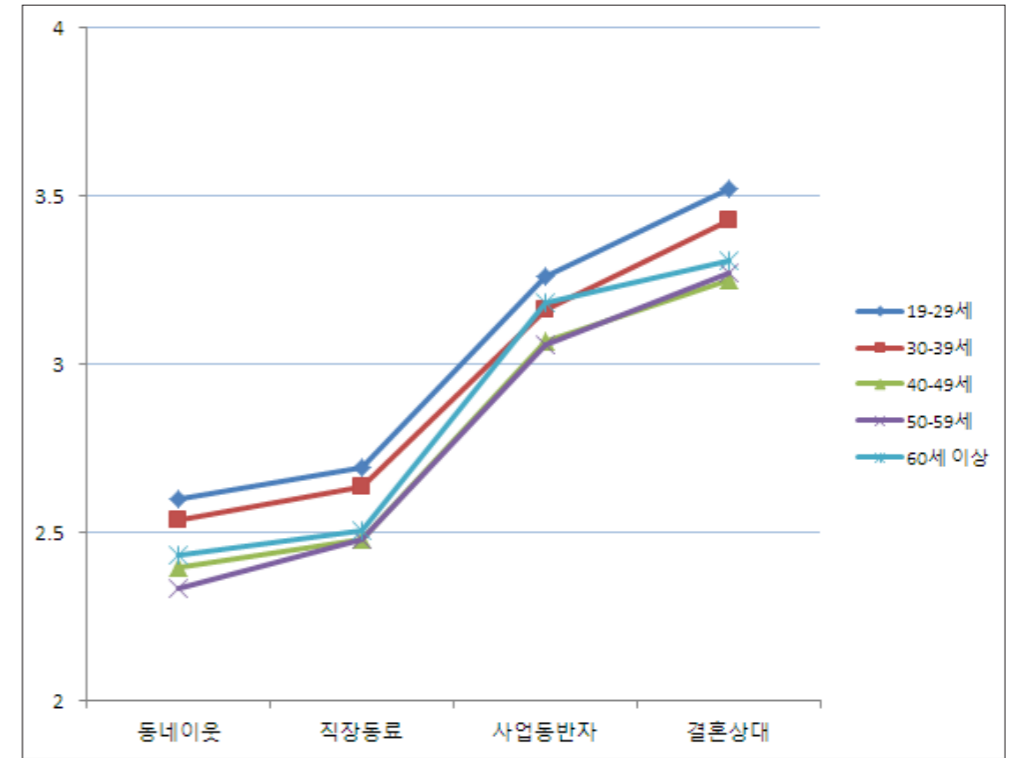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사회학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 출신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개념이다. 이번 조사에는 사회적 거리 측정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보가더스 척도와 유사하지만 다소 변형된 문항이 사용되었다. 즉, 탈북자를 결혼상대(가족), 사업동반자, 직장동료,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혹은 꺼리는지 여부를 각각 5점 척도로 물었다.<sup>5</sup>

탈북자를 동네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2.46점으로, '반반이다'와 '별로 꺼리지 않는다'의 사이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직장동료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태도가 상층하며, 사업동반자, 결혼상대로 갈수록 꺼리는 태도는 확연하게 두드러진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올수록, 즉 이웃-동료-사업동반자-결혼상대로 오면서 순차적으로 더 많은 거리감을 표시하는 결과는 보가더스 척도의 이론적인 전체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결혼상대'로 탈북자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 혹은

5\_ 1점은 "전혀 꺼리지 않음", 5점은 "매우 꺼림"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꺼린다는 것을 의미한다(원래 문항을 리코드하여 통일함). 보가더스 척도에서 사용한 '사회적 거리'와는 측정 방식이 다르지만,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꺼림의 정도가 크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 꺼리는가 여부는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조사에서 '결혼 상대'로 탈북자를 받아들일지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3.35 수준, 즉 '반반이다(중립)'에서 '다소 꺼림'(약한 부정) 사이에 있는 수준이다.

〈그림 3〉 “탈북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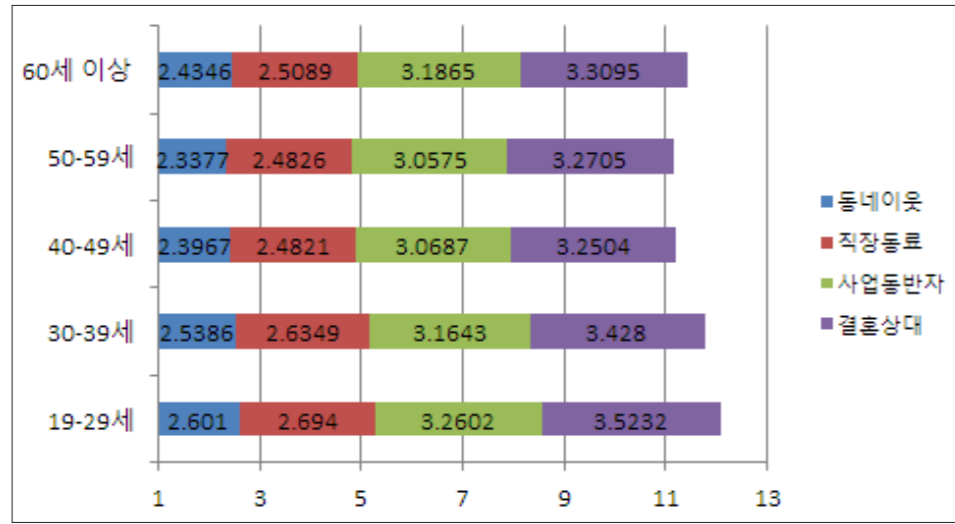
(※5점 척도: 5점이 "매우 꺼림")

〈표 5〉 “탈북자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2015)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
19-29세	2.601	2.694	3.2602	3.5232
30-39세	2.5386	2.6349	3.1643	3.428
40-49세	2.3967	2.4821	3.0687	3.2504
50-59세	2.3377	2.4826	3.0575	3.2705
60세 이상	2.4346	2.5089	3.1865	3.3095
전체	2.4575 (F=2.765*)	2.5572	3.1418	3.3516 (F=2.427*)

(※5점 척도: 5점이 "매우 꺼림")

〈그림 4〉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합) - 연령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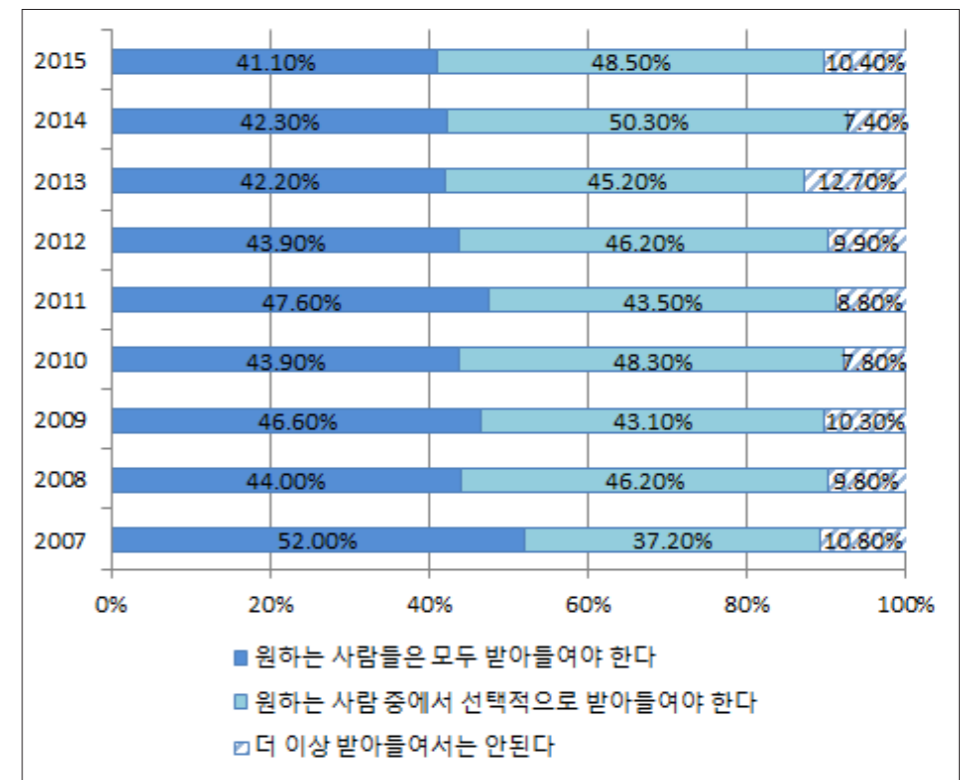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서도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2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 거리감이 더 크게 나타났다. 29세 이하의 젊은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탈북자를 결혼상대로, 또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인데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가지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전부 더하여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9세 이하의 젊은 층의 부정적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은 30대, 60대 이상의 순이었으며, 40대와 50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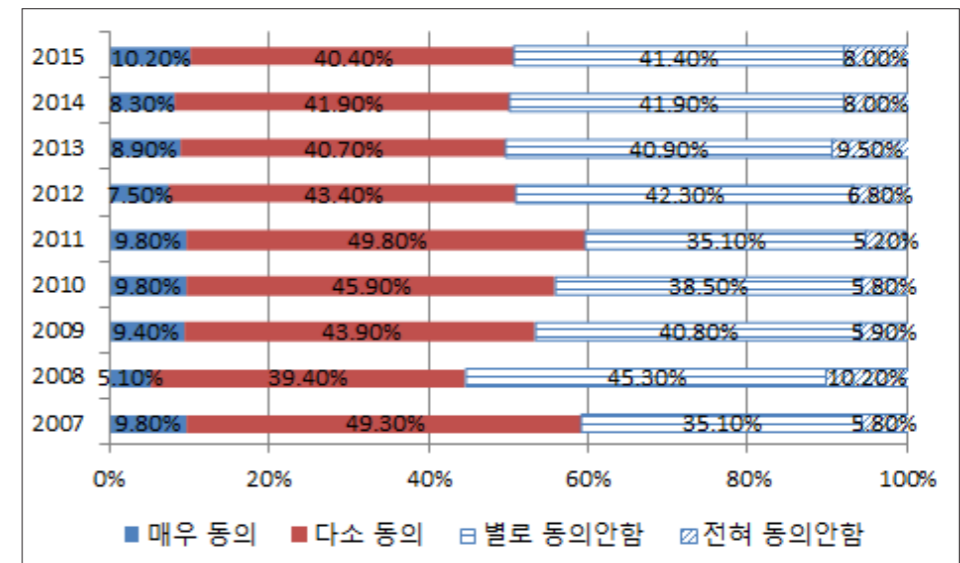
### 3. 탈북자 수용 및 정책 지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의 수용,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탈북자 수용에 관해서는 2007년 조사를 보면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52.0%)였다. 올해에는 41.1%로 9년 사이에 11%p 감소하였다. 탈북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전면적인 수용 여론이 다소 약화된 반면,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비슷한 폭으로(37.2% → 48.5%)으로 증가되었다.

〈그림 5〉 한국으로의 탈북자 수용에 대한 의견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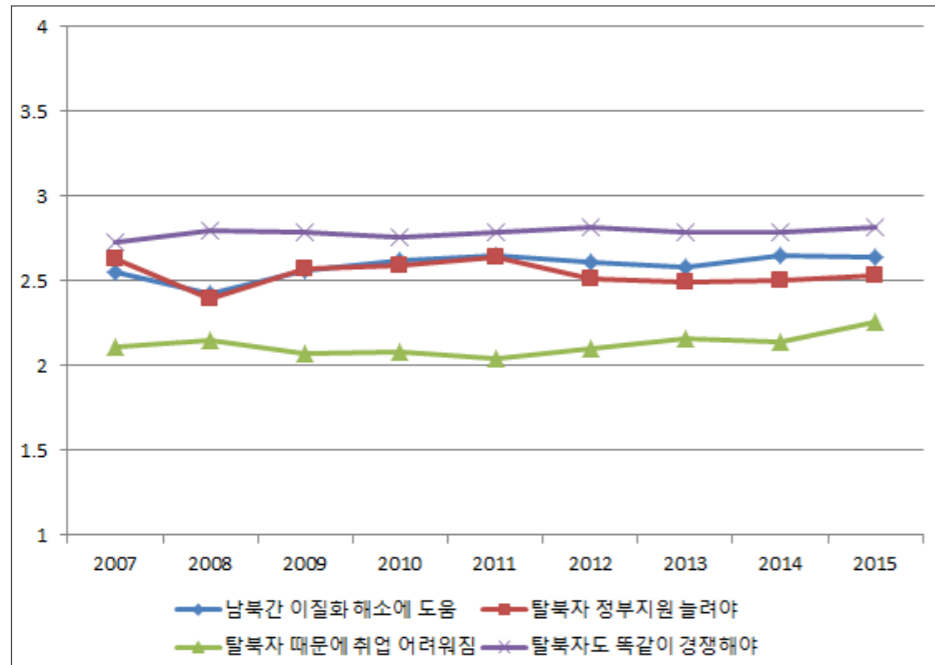


〈그림 6〉 탈북자 정부지원 증대에 대한 의견 (2007~2015)



〈그림 5〉와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탈북자 수용 및 정부 지원에서 응답자들의 태도는 긍정과 부정이 대략 반반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50대 50으로 의견이 반분되는 현상은 일견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 여론의 분열로 정책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지난 9년간 추이를 보면, 정부지원을 늘리는 데 적극 찬성하거나 적극 반대하는 고정적 지지 혹은 반대층의 비율이 일정하게 고착화되는 현상이 엿보인다(그림 6). 향후 대북 관계 악화나 긴장 상황,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확대 등과 맞물리게 되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로 여론이 양분·대립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림 7〉 탈북자 지원 등에 대한 응답 (평균값)



(\*4점 척도: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점 "매우 동의함")

그밖에도 탈북자의 한국사회 정착 및 생활, 이들의 향후 역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조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탈북자가 취업에 위협이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출신 동포, 즉 이주자가 늘어나면 이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는 경계의 태도가 최근 더욱 부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탈북자는 아직 노동시장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부각될 만큼 수가 많지 않고, 또 이들의 취업 문제가 미디어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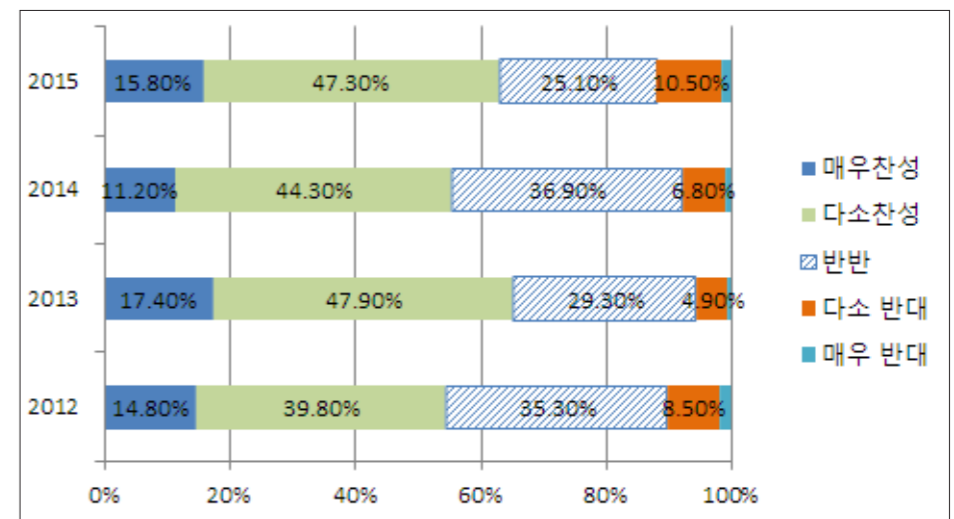
한편 탈북자들이 남북 간의 이질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 4.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된 두 가지 설문, 즉 다양한 인종·종교·문화의 공존을 지지하는지 (다문화 공존), 그리고 다양한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는지 (다민족 국가) 여부를 질문하였다. 다문화 공존을 지지하는 비율은 지난해(2014년)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늘어났지만 2013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화다양성을 하나의 가치로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이른바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서히 확산되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다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나 반감이 표출되는 예도 적지 않다.<sup>6</sup> 이러한 경향이 이번 조사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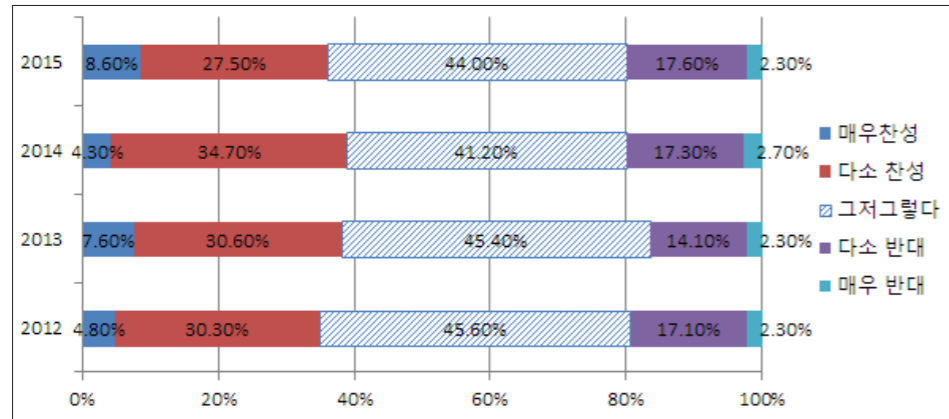
다양한 민족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 공동체의 결속력이 훼손된다는 의견(다민족 국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2012년 이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민족 국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줄었지만 '적극 찬성', 즉 적극적인 반대 의견(15.8%)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8〉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다문화공존)



6. 한건수, "한국 사회의 다문화주의 혐오증과 실패론 -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윤인진·황정미 편,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서울: 아연 출판부, 2015\_)

〈그림 9〉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다민족 국가)



〈표 6〉 다문화 수용성의 집단별 비교 (2015)

구분	구분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
연령	19-29세	3.7589	2.77
	30-39세	3.6404	2.72
	40-49세	3.6661	2.84
	50-59세	3.6595	2.79
	60세 이상	3.5536	2.76
교육수준	중졸이하 (n=122)	3.4275	2.77
	고졸(492)	3.5957	2.75
	대재 이상 (584)	3.7585 (F=8.753***)	2.8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17)	3.6082	2.79
	200-299만원 미만 (203)	3.7326	2.86
	300-399만원 미만 (366)	3.6742	2.79
	400만원 이상 (512)	3.6278	2.73
광역권	수도권 (600)	3.6915	2.61
	중부권 (122)	3.663	2.82
	호남권 (118)	4.0095	2.90
	영남권 (310)	3.4196	3.00
	강원 (36)	3.7164	3.05
	제주 (14)	4.3407	2.62
전체	(n=1199)	3.6578	2.78

※ 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의미

다문화 수용성이 인구 사회학적 집단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척도점수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표 6〉 다문화 공존, 다민족 국가 두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더 지지하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척도를 리코드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젊은층의 다문화 공존 수용도가 가장 높았다. 그런데 다문화 국가에 대한 지지도는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의 수용과 다양한 민족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탈북자에 대한 태도와 국가정체성,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즉, 다양한 이주민의 수용과 인권 및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탈북자의 수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한다.<sup>7</sup>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다문화 공존에 대한 지지에서 고학력층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광역권별로는 호남과 제주지역에서 다문화공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탈북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 5. 소결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흐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자에 대한 친근감이나 사회적 거리감에서 젊은 층,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다. 이는 청년층의 통일관이나 대북관, 그리고 다른 사회적 가치관과 연관지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젊은층이 통일이 필요성을 덜 느끼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으로 사고하며 탈북자에게도 친근감을 덜 느끼는 전반적인 경향은 한마디로 70년간 누적된 분단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착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후세대인 청년들은 분단 상황을 당연시하는 가운데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령집단별 차이가 더 큰 의미의 세대 차이인지, 그리고 다른 사회경제적 의식이나 정치적 성향, 혹은 독특한 세대 경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탈북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시계열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탈북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친근감)이 완만하지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대북인식의 악화나 제1연

7.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3호 (2012).

평해전 등 무력충돌 및 긴장상태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악화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9년간 탈북자의 급증, 북한관련 사건들의 역동성에 비추어 볼 때,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도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셋째, 그러나 전반적으로 탈북자의 남한 수용, 정책 지원에 대한 지지도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주민의 증가가 노동시장이나 경제적 기회 등에서 한국인(원주민)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구체화되고 이른바 '반다문화' 정서가 확대되는 경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탈북자의 수용 및 지원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용도는 한편으로는 이주민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기대와 지지에 따라서 상이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교차하고 있는 다양한 시선과 입장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